

기본소득

2020 겨울
#007





CONTENTS

머리글	04	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_ 백승호
이 계절의 이슈 1: 쟁점토론회	07 15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풀어야 할 숙제 _ 서정희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행: 참여소득 _ 백승호
이 계절의 이슈 2: 좌담	22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떼다 _ 안효상, 노호창, 서정희, 이견민
화제의 인물	37 46	[정상훈] 동네의사의 전지구 기본소득이라는 꿈 _ 인터뷰어 류보선 [이승윤] '액화노동'의 시대 새로운 분배제도가 필요하다 _ 인터뷰어 이관형
문학	59 61 63 68	[시] 월월 새떼가 (외 1) _ 신경림 [단편소설] 난기류 _ 정세량 [단편소설] 그분이 오셨다고? _ 김경옥 [연재소설] 봉인된 시간. 3 _ 신경숙
류보선의 종횡무진 기본소득	73	코로나19 이후 보게 된 '그 꽃'과 기본소득의 마음 _ 류보선
동향	90 98 102 109 113 118	[학술동향] 21세기 복지국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나 _ 이견민 [학술동향] 아시아미래포럼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_ 윤형중 [현장스케치] 기본소득 공론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_ 정재환 [현장스케치]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의 첫 출발 _ 신지혜 [현장스케치]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에 가다 _ 김찬휘 [해외 동향] 기후위기와 녹색 기본소득 _ 이지은
특별기고	125	어공에세이_기본소득은 어떻게 법이 되는가 _ 오준호
기본소득과 나	130 133 135	꿈이 허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전이었으면 _ 마돈나 내 삶의 '기본소득' _ 문지영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_ 이주엽
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QnA	139	선별주의의 문제점 _ 김교성

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백승호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장

2020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의 위기로 시작되었다. 코로나19는 모두의 건강을 위협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공격으로 정작 가장 먼저 추락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수는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었다. 많은 가게들이 임대료조차 낼 수가 없어 문을 닫았고 대부분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무료급식소들의 폐쇄로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웠다. 이러한 와중에도 소득 상위 20%의 가구소득은 2.9%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이 1.1% 감소했다. K-방역의 성공으로 인한 양호한 경제성장 성적표는 코로나 불평등이 자양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 경제 전반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에 힘을 실어주었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만으로는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는 21세기를 만들 수 없다는 성찰이 그 출발이었다. 이러한 대안 논의의 중심에 기본소득이 있었고, 2020년 3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5월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에 이르렀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보편적 현금 지급이었다.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기반사회보험, 탄소배당, 기초자산(기본자산), 참여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등 다양한 사회정책적 대안들이 역동적으로 논의되었던 한 해가 2020년이였다. 이외에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졌고,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시대전환에서 기본소득법안을, 기본소득당에서 기본소득공론화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2020년 계간《기본소득》겨울호의 이 계절의 이슈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기본자산, 참여소득을 심도 있게 다루었고, 기본소득 법안 좌담회를 통해 기본소득법안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화제의 인물로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기본소득이 온다』의 저자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와 『동네의사

와 기본소득』의 저자 정상훈 선생님과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이승윤 교수는 온전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의 중요성과 참여소득 전략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을, 정상훈 선생님은 이론 속에서의 기본소득보다 현장에서 기본소득을 자신의 삶으로서 열성적으로 지지할 주체 형성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셨다.

계간 《기본소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학 코너에서는 신경림 선생님이 두 편의 시를, 정세랑, 김경옥 선생님이 산문을 그리고 신경숙 선생님이 이번 호에도 연재소설을 보내주셨다. 학술동향에서는 이견민 연구원이 우어술라 휴스(Ursula Huws) 교수의 신간 『복지국가의 재발명: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정책』(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 Platforms and Public Policies, Pluto Press, 2020)을 꼼꼼하게 소개해주었고, 윤형중 선생님이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기본소득 발표동향을 소개해주었다. 현장스케치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경기도 공론화를 경기도의 정재환 팀장님이, 4당 4색 기본소득 토론회에 대해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님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김찬휘 부소장님이 스케치해주셨다. 해외동향은 이지은 선생님이 기후위기와 녹색 기본소득 논의를 소개해주셨고, 특별기고로 용혜인 의원실 오준호 비서관님이 기본소득 공론화법 입법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주셨다. 이번호의 기본소득과 나는 팟캐스트 이렛타의 사회자 마돈나님,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의 문지영님, JNH뮤직 대표이자 작사가이신 이주엽님이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셨다. 친절한 교성씨의 기본소득 QnA에서는 선별주의 제도인 사회부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상상속의 기본소득이 한 걸음 더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기본소득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21년은 일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이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BasicIncome Issue 1.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대선 정국을 앞두고, 기본소득의 한국형 로드맵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형 기본소득 실현 로드맵은 기본소득을 하나의 제도로써 위치 짓는 일에 머무르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생태적 전환을 고려한 사회개혁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한국 사회 개혁 전략의 모색이 될 것이다.

2020년 2월부터 한 달에 한 가지 주제로 발제자가 발표를 하고, 유튜브 채널과 텔레그램 토론방에서 회원들과 함께 논쟁을 펼친다. 참고로 쟁점토론회는 매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튜브 채널로 볼 수 있다. 계간 《기본소득》에서는 제5호(2020년 여름호)부터 이 계절의 이슈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쟁점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를 수정 및 정리하여 소개한다. 이번 호에 소개할 글은 2020년 7월 쟁점토론회 주제였던 “기본소득과 기본자산”, 8월 쟁점토론회 주제였던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공통점과 차이점, 풀어야 할 숙제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

워크 이사

1. 기초자산의 개념

계간《기본소득》제4호(2020년 봄호)에서 필자는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과 청년기초자산을 다룬 바 있다(서정희, 2020). 그동안 한국에서 정책으로서의 기초자산은 주로 정의당이 홀로 제기해 왔다. 최근 이보다 논의가 확장되어 몇몇 학자들이 ‘기본소득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자산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이 기본자산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초자산을 또 다른 대안으로 제기하는 사회적 반응은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 정책들에 대한 미세 조정 방식의 수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것이 논쟁의 장이라 할지라도 함께 한다는 기쁨을 주니 말이다. 이 글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이 어떤 점들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일차적인 사실 확인과 이에 기반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중요한 사회적 정책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논쟁할 수 있고, 부정확한 논리에 근거한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수사들에 마음 다치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기초자산 논의 역시 기본소득 논의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주창되어 온 역사가 있어서 다양한 명칭으로 제안되었다. 액커만과 알스토트(Ackerman and Alstott, 1999), 에릭 올린 라이트(Wright, 2004)는 ‘사회

적 지분급여’ social stakeholder grants로, 줄리언 르 그랑(Le Grand, 2006)은 ‘데모그란트’ demogrant로, 세드릭 샌드퍼드(Sandford, 1969)는 ‘음의 자본세’ negative capital tax로, 앳킨슨(Atkinson, 1972; 앳킨슨, 2015)과 피게티(Piketti, 2014; 2020)는 ‘자본 배당’ capital endowment으로, 화이트(White, 2011; 2015)는 ‘기초자본’ basic capital으로, 본치(Bonciu, 2020)는 ‘기초자산’ basic asset으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이 제도들의 공통된 특성은 일시금 방식의 현금 배당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논의 초기에는 사회적 지분급여로 명명되었으나 최근 기초자산이나 기본자본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이를 제도로 주장하고 있는 정당인 정의당이 이 제도를 ‘기초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제도를 기초자산이라 칭한다.

기초자산 제도를 최초로 제기한 토머스 페인을 제외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제안된 최초의 기초자산 제도는 액커만과 알스토트가 제안한 사회적 지분급여 stakeholder grants, 이하 기초자산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시민들이 21세가 되었을 때 4년에 걸쳐 매년 2만 달러씩 총 8만 달러를 지급하여 이 급여로 청년기의 대학교육이나 창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년기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액커만과 알스토트는 용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용처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기초자산 소유자는 ‘자유롭다’고 언급한다. 유일한 책임은 사망 시 사회적 지분을 이자를 더해서 회수하는 것이다. 다만 21세에 80,000 달러라는 목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몇 가지 자격조건을 부과한다. 첫째,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사회적 지분급여의 이자만큼을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받게 된다. 둘째,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기초자산 제도의 대표적 주창자인 르 그랑과 니산은 페이비언 협회 Fabian Society의 16페이지의 팜플렛을 통해 이 제도를 주장한다. 르 그랑과 니산의 주장은 액커만과 알스토트의 주장에 비해 1년 늦게 영국에서 제시되었는데, 모든 18세 사람들에게 1만 파운드의 데모그란트를 ‘자산 및 교육비 적립 계좌’ ACE, Accumulation of Capital and Education로 지급한다. 이 계좌는 신탁관리자가 관리하고, 신탁관리자들은 사람들이 자본 인출의 용도를 밝히는 특별 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은 신탁관리자가 정의한 승인된 목적에 지출할 때만 계좌 인출을 할 수 있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더 많은 교육, 집세를 낮추기 위한 지출, 소기업 창업 비용, 연금금 시작 등이 목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초자산 제안은 수정된 형태로 영국에서는 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 CTF 제도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제도로 도입되었다. 영국의 아동신탁기금 제도는 모든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태어났을 때 400파운드, 5살, 11살, 16살 생일에 250파운드를 적립하는 제도로 설계되었다. 빈곤선 아래의 가구의 아동은 800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신탁 기금의 인출은 불가능하다. 18세 이후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모와 아동에게 재정 교육을 제공한다. 2005년 1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좌 개설 시 250파운드, 7세에 추가 50파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2011년 아동신탁기금은 폐지되었고, 그 대체 제도로 주니어 개인 저축 계좌 Junior Individual Savings Accounts, Junior ISA가 도입되었다. 여러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는 개인발달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을 위한 계좌로 부모와 정부가 매칭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한국의 경우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제와 청년기초자산제가 제안된 바 있다.

2.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의 공통점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은 역사적 뿌리가 거의 동일하다. 무엇보다 두 제도의 개념적 시초를 역사적으로 토머스 페인의 『토지정의(Agrarian Justice)』에서 찾을 수 있다. 페인은 상속세로 토지공유부를 환수하여 일종의 공유부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한다. 하나는 21세에 도달한 청년에게 제공하는 기초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기한다. 두 제도의 정당성은 모두 토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자연적 소유권’ 개념에서 시작된다. 이는 공유부 분배에 대한 인식이 기본소득과 기초자산, 모두에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 원칙의 실현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정관 제2조에서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므로 여기서 기본소득의 공유부 배당 원칙에 대한 부연 설명은 생략한다.

기초자산 주창자들 역시 기초자산의 정당성의 근거를 공유부 배당에서 찾는다. 영국의 아동신탁 기금에 큰 영향을 미쳤던 르 그랑은 “출생 때 혹은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보편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의 유산, 즉 건물 및 기타 물리적 인프라, 교통 수단, 자본 설비 및 농업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자본 자산에 대한 지분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통의 유산 대다수는 이전 세대의 노동과 노력의 결과이며, 그 구성원은 사실상 다음 세대에 부의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싸워 왔다. 이러한 유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 거주자들은 현재 부유할 수 있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막대한 자본 축적이 없었다면, 현재 세대만의 노력으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의 생산 수준을 창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이 공유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제도 모두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자유인가라는 지점에서는 서로 갈라지지만,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3.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차이점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은 인간의 자유로운 삶의 향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인간이 창조해 온 공유부를 모두에게 조건없이 배당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이 두 제도가 분기되는 지점은 분배

방식이다. 기본소득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기초자산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1회성 목돈으로 지급한다. 이 차이점은 단순히 분배 방식만 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지향하는 사회, 개인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 개인의 삶의 구성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왜 1회성 목돈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자산 논자들이 답변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거시 자유를 위한 것이다. 기초자산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한 21세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숙련 교육을 위해 2만 달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하에서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4~5년을 기다려야 하고, 아이를 갖고 싶고 양육책임을 분담하고자 하는 신혼부부가 기초자산으로 주택에 투자하고 임금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삶을 기본소득 하에서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삶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한다. 액커만과 알스토트에 의하면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는 대학교육이나 창업 혹은 주택마련 등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투자는 한 개인의 성인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기본소득과 같은 매달 적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기회 획득이 가능해지고, 목돈이 소요되는 기회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키고, 자산 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액커만과 알스토트는 이를 ‘거시 자유’ macro freedom로 명명한다.

둘째, 자산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 불평등 문제는 전체 부에서 임금소득 분배율의 축소와 자산의 확대라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자산 불평등 정도가 소득 불평등 정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알바레도 외, 2018).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르 그랑은 자산 소유가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매우 불평등한데, 이에 대하여 자산 기반 평등주의(asset-based egalitarianism)에 근거하여 문제제기한다. 자산 기반 평등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자산 소유라는 것이 행위자의 행위능력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자산 소유는 개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독립성을 주고, 인생의 부침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덜 휘둘리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관찰된 불평등의 어떤 점은 연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성인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자산을 분배하는 기초자산으로 연결된다.

또한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에서 1980년대 이래로 진행되어 온 초불평등주의(hyper-inegalitarian)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므로, 정의로운 소유권에 기반한 21세기 새로운 참여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피케티가 제안하는 21세기 새로운 참여 사회주의 요소는 정의로운 소유권(자본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 소유 제도화, 기업 내 권력 분배), 영구적 사적 소유권을 일시적 사적 소유권으로 전환, 누진적 소득세, 보편적 기본소득, 교육 정의 등이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제를 초월하여 참여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2가지 조치를 제안하는데, 이 중 한 가지가 대규모 재산에 대해 매년 누진적 재산세를 부과하여 보편적으로 기초자산을 배당하는 것이다. 연단위 누진적 재산세와 상속세를 통해 국민소득 5%(4%는 연단위 재산세로, 1%는 상속세)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고, 평균 상속 자산(중위 자산이 아님)의 60%에 해당하는 자본 배당(선진국의 경우 1인당 12만 유로, 한화 1억 6

천만 원)을 25세의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여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권 자체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소유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기초자산이 풀어야 하는 숙제 1: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강화가 대안인가?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지급 방식 차이로 인한 논쟁 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주요한 문제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기초자산이 풀어야 하는 숙제다. 화이트의 말로 시작해보자.

모든 아이들을 훌륭한 소부르주아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좌파에게는 의심의 여지없이 구역질나는 전망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존 롤즈(John Rawls)가 자산소유 민주주의(a property-own democracy)라 부른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시민들이 자유를 장기적으로 재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소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미덕을 갖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일시금 목돈을 지급하여 청년에게 창업, 주거,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자는 기초자산 방식이나 용처 제한 없이 목돈을 지급하여 거시 자유를 실현하게 하자는 기초자산 방식은 불가피하게 평생에 단 한 번 뿐인 기회인 기초자산 일시금을 최대한 소진하지 않고 목돈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투자 방식을 고민하게 한다. 실제로 영국의 아동신탁계좌를 주도했던 르 그랑 등은 기초자산 급여 사용에 교육, 창업, 주거 비라는 조건을 부과하고 적절한 용도인지 신탁관리자가 심사하게끔 하는 절차를 구성한다. 또한 자산 관리 운영에 대한 부모 교육과 어렸을 때부터의 재무 관리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화이트의 말을 빌리면, 청년 모두를 소부르주아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다. 현재 2021년은 기초자산을 처음 제기한 토머스 페인이 살았던 18세기 농경 사회가 아니다. 모든 청년들이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목돈을 지급해서 소작농의 삶이 아니라 개간할 토지를 소유하는 소부르주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농경 사회가 아니다. 단 한 번 목돈을 지급하고 삶의 자유를 실현하라는 조치는 결국 현재의 한국 사회가 처한 영끌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 열풍을 가속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용처를 제한하는 기초자산 방식 역시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강화할 것이다. 첫째, 교육에 투자된 기초자산은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겠지만 사유재로서의 고등교육의 상품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 다른 대안들, 예를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록금 없는 고등교육과 같이 고등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시장원리를 제거하는 방식이 왜 더 나은 대안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

둘째, 주택 부문에 사용되는 기초자산은 부유한 부모가 없는 청년들의 모기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는 사람들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적 방법으로서 시장 중심성과 사적 소유권을 확고히 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저비용주택을 인수하기 위해 공동체 토지신탁을 만드는 것 등

과 같이 정의를 향상시키고 시장 주도의 주택 논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은 왜 고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셋째, 기초자산은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부의 제약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중소기업 부문에 더 정의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은 실패하고 기초자산은 이를 막을 수 없다(자영업 1년 이상 유지율은 10%에 불과하다). 기초자산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 자본주의 경제에서 소규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엄청나게 증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설령 소규모 사업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의 침식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자산은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보다 정의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이동시키는 것은 맞지만,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의 대안들을 창출할 공간을 확장하지는 못한다.

5. 기초자산이 풀어야 하는 숙제 2: 급여 소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현금 급여는 소진된다. 기초자산 방식의 일시금 목돈 급여를 소진시키지 않고 저축으로 혹은 투자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급여는 소진될 것이다. 급여를 소진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일정한 지분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은 계층 문제와 관련이 있다. 빈곤 가정 출신의 사람은 자산운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부의 축적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을 전승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의 사람보다 지분 소진이 훨씬 용이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자산급여의 문제는 결국 자산관리능력의 문제로 치환된다. 기초자산 소진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창업이나 자산운용 등으로 지분급여를 운용하는 경우에도 급여 소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개인의 선택이라고만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급여가 소진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히 기초자산을 기본소득보다 우월한 대안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말고, 기초자산으로 도입하자고 하는 수많은 논자들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초자산 주창자들은 급여를 소진하고 난 이후의 삶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다.

급여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산 주창자들이 제시하는 분할 급여, 자격조건 강화, 아동과 부모에 대한 금융 및 재정교육 강화 등은 단지 급여 소진의 시점을 연기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결국 기초자산 주창자들의 거시 자유는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로 달성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책임으로 영위하거나 기존 복지국가 시스템의 작동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자산 주창자의 대표자로서 액커만과 알스토트는 사민주의 중도좌파의 복지시스템을 반대해왔다. “사민주의는 유급 노동을 사회정의의 핵심으로 생각한다. 사민주의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

들이 권리로써 적정임금과 단시간의 일자리를 인정받는 사회이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은 노동계급을 위한 정의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실질적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들에게 조건 없이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유급 노동이 모범적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민주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사회생활에서 배제한다.”

결국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자유 사회주의 관점에서 비판했던 기초자산 주창자들은 개인에게 거시 자유를 인생에서 단 한 번 확보해 주고, 그것도 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후, 급여가 소진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여전히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도록 두고 있다. 기초자산 주창자들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성 확보에 대한 안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정희(2020). “정의당의 청년사회상속과 청년기초자산: 무엇을 위한 기초자산인가?”. 계간 《기본소득》, 제4호(2020 봄호), 24~30.
- 알베레도, 파쿰도·샹셀, 뤼카·피케티, 토마·사에즈, 이매뉴얼·주크먼, 게이브리얼(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장경덕 역(2018). 글항아리.
- 엡킨슨, 앤서니(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역(2015). 글항아리.
- 이건민(2019). “청년사회상속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시대》, 2019년 9월호(제71호), 46~56.
- 이건민(2020). “정의당의 청년기초자산제 공약에 대한 비판적 평가”, 《시대》, 2020년 3월호(제76호), 29~39.
- Ackerman, B. and Alstott, A. (2006b). Macto-Freedom.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Verso.]
- Ackerman, B. and Alstott, A.(2006a). The Effects of a Basic Income Guarantee on Pover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Ackerman, B., Alstott, A., and Van Parijs, P.(eds.).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 Verso.
- Ackerman, B., and Alstott, A. (1999). The Stakeholder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Atkinson, Anthony B. (1972). Unequal Shares. London: Allen Lane. ch. 11.
- Bonciu, F. (2020). Universal Basic Income and Universal Basic Assets as Possible Solutions to the Current Disequilibria and Threats Manifested in the Labor Markets. Romanian Economic and Business Review, 14(4), 7-16.
- Le Grand, J. (2006). Motivation, Agency and Public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 Grand, J. and Nissan, D. (2000). A Capital Idea: Start-Up Grants for Young People. London: Fabian Society.
- Paine, Thomas (1969[1796]). Agrarian Justice, In The Complete Writings of Thomas Paine, New York: Citadel Press, Vol. 1, pp. 605-624.
- Piketty, T. (2020). Capital and Ideology.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Belknap: Harvard.

- Sandford, C. (1969). *Economics of Public Finance*. Oxford: Pergamon Press.
- United Kingdom. Treasury (2001a). *Savings and Assets for All: The Modernisation of Britain's Tax and Benefit System*. Consultation Paper No. 8. London: HM Treasury.
- White, S. (2015). "Basic capital in the egalitarian toolki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2(4), 417-431.
- White, S. (2011) "Basic Income versus Basic Capital: Can We Resolve the Disagreement?" *Policy & Politics*, 39(1), 67-81.
- Wright, E. (2004). "Basic Income, Stakeholder Grants and Class Analysis". *Politics & Society*, 32(1), 79-87.
- Wright, E. O. (2015). "Eroding Capitalism: a comment on Stuart White's 'Basic Capital in the Egalitarian Toolkit.'"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32(4), 432-439.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동행: 참여소득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론

기본소득은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정기적 현금배당”이다(금민, 2020a).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자산, 지식과 같은 역사적 공유자산,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이 대표적인 공유부에 해당한다(백승호, 2019, 2020). 공유부 배당 기본소득의 실현은 토지, 소득, 빅데이터 등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배당하는 조세형, 공유자산을 활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설정형 또는 공동체가 직접 공유자산을 관리하여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공동소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금민, 2020). 이러한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는 정기성과 현금배당 원칙을 추가한다. 충분성은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보다 사회적 합의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 목표다.

이러한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아닌 최소한의 충분성 요건을 갖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배당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만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이유는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 때문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기본소득이라 하더라도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방적 결과들을 유의미하고 튼튼하게 만들

기 어려울 수 있다(Wright, 1995). 따라서 기본소득의 바람직성과 함께 실행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묻는 것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들

지금까지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단계적 실현 전략들이 논의되어 왔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단계적 실현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한편으로 충분한 속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후자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현재 기본소득의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는 재정에 대한 보수적 시각과 호혜성 원리다.

우선, 재정에 대한 보수적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정 수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저항이 매우 높다. 이러한 경우에 주로 아주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방법과,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다. 부분 기본소득은 충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특징 중 보편성을 제약하는 형태의 기본소득이다. 여기서 보편성의 제약은 기본소득 지급을 특정 연령으로 제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백승호, 2020). 아동수당, 기초연금, 청년 기본소득 등 사회수당이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 기초연금의 소득기준 폐지, 청장년 대상 기본소득 도입의 방향으로 사회수당을 확대해 간다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 평생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만 기본소득을 선택하게 하는 생애 선택 기본소득(석재은, 2020)에서 시작하여 기본소득 지급 기간을 늘려나가는 전략도 보편성 확대 전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호혜성 원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제약함으로써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9). 호혜성 원리란 사회 공동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기여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White, 1997). 노동연계복지, 사회보험 등 현재 사회정책들은 호혜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참여소득은 호혜성 원칙을 건지한 대안적인 제안이다. 예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은 참여소득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의 이상을 실현하는 과도기적 제도로써 참여소득의 개념,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소득이란 무엇인가?

참여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Atkinson, 1996).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앤서니 앳킨슨(Atkinson, 1996)이다. 앳킨슨이 규정하는 사회적으로 유용할 활동에는, 유급 고용 및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 구직 활동, 승인된 교육과 직업훈련,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활동, 승인된 자원봉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는 여기에 더하여 질병이나 재해,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까지도 참여소득의 지급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Atkinson, 1996: 68).

이에 비해 페레스 무뇨즈(Pérez-Muñoz, 2018)는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는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생산하는 활동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무뇨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돌봄이며, 환경 보호 활동, 이민자 보호 활동, 지역사회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으로 규정한다. 다만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는 해당 공동체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각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Pérez-Muñoz, 2018: 271).

참여소득은 왜 제안되었는가?

참여소득은 1990년대 중반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복지국가 개혁 전략으로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노동연계복지(workfare) 전략에 대한 우려에서 제안되었다. 노동연계복지 전략은 생산적 노동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복지 수급권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러한 노동연계복지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시민소득 도입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앤서니 앳킨슨(Atkinson, 1996)은 노동연계복지 전략과 시민소득 제안의 절충안으로 참여소득을 제안하였다. 호혜성에 대한 강한 신념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시민소득은 실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성 원칙을 고수하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다른 연구들 역시 기본소득의 실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무조건성에 대한 정치인 및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지적한다(van Parijs & Vanderborght, 2018: 465).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비판은 해안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와 같이 여가만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기본소득이 충분히 지급되어 생존 노동에서 자유로워지고 실질적 자유를 누리게 되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의 참여가 사전적 조건으로 부과되지 않아도, 사후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기여 조건은 충

족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페레스 무뇨즈(Pérez-Muñoz, 2018)는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의 정치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기본소득이 도입되어도 자동적으로 충분히 생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판 파레이스와 판 반데르보흐트(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8: 472-474)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의 비전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행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서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노동연계복지를 통해 빈민을 통제하고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제도,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들의 정치적 동의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동의를 위해 참여소득은 유용한 접근일 수 있다.

참여소득의 한계: 포괄성, 호혜성, 행정적 지속가능성의 트릴레마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화가 작동하는 사회, 호혜성의 원리에 대한 선호와 노동 윤리가 뿌리 깊은 사회에서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여소득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을 예상해보면 참여소득의 길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Wispelaere & Stirton, 2007, 2018). 호혜성의 원리를 내장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의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대상 포괄성과 행정적 지속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호혜성, 대상포괄성, 행정적 지속가능성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누가 참여소득 수급대상인지가 상대적으로 명료하기 때문에, 행정과정에서 수급자나 일선 관료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호혜성 원칙과 행정적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삼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참여소득에 포괄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포괄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참여소득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지고,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혜성과 포괄성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만, 행정적 지속가능성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결국 이러한 트릴레마는 행정 집행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행정 집행의 불안정성은 참여소득에 대한 지지도를 낮춤으로써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참여소득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앳킨슨은 행정 과정상의 복잡성과 비용은 현재의 자산조사에 기반한 정책들보다 크지 않다는 점, 비용효과성을 따지기보다 국가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더 투자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들어 참여소득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다

(Atkinson, 2015).

실현 가능한 참여소득 제안

앞서 언급했듯이, 충분하고 완전한 기본소득의 실현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장애 요인은 자원 문제가 흔히 언급되지만, 호혜성 이데올로기, 노동 윤리에 대한 신성화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참여소득은 비록 기본소득이라 볼 수 없지만, 기본소득 실현 과정에서 이러한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소득 확대전략과 참여소득의 결합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다. 다음은 이 두 가지 전략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1) 보편성 확대 전략과 제한적 참여소득의 결합

첫째, 사회수당의 확대를 통해 기본소득의 보편적 적용범위를 넓혀가면서 참여소득을 결합하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현은 범주형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미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근로연령대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참여소득 지급의 조건인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앤서니 앳킨슨(Atkinson, (1996)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노동연계복지에서와 같이 생산적 노동에만 국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페레스 무뇨즈(Pérez-Muñoz, 2018)가 제안한 방식을 활용한다. 즉,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돌봄 참여소득이 합의 가능한 미충족 사회적 욕구일 수 있다. 돌봄 참여소득은 근로연령대의 남녀 모두에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노인과 동거하거나 양육 또는 부양 여부만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전업 돌봄에 대해서만 돌봄 참여소득을 지급할 경우 여성들의 재가족화로 인한 돌봄의 젠더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봄 참여소득은 동거, 양육 여부만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돌봄 참여소득의 지급수준은 최저임금수준을 기본으로 한다.

(2) 충분성 확대 전략과 포괄적 참여소득의 결합

둘째, 기본소득의 충분성 수준을 확대하는 전략과 참여소득의 결합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해 가는 방법이다. 이 전략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하여 참여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참여소득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좀 더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 활동, 구직 활동, 플랫폼 경제 활동, 돌봄 활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 참여소득을 지급한다. 충분성 확대전략에서의 기본소득 출발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있는 국토배당금 연 15-20만 원 수준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 전략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의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참여소득 전달체계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노조 등을 활용함으로써 노조나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일관되지 않은 참여조건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Wispelaere, J. D., & Stirton, L., 2007: 534; Stoker and Wilson 1998; Meyers et al. 2001), 분권적 방식의 자율적 참여 조건 규정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자정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는 기본소득의 도입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우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성 현금급여의 강화로는 수급자들의 억압과 통제 기제, 관료적 행정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사회보험 급여에서도 그대로 전이되는 사회적 보호의 이중구조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을 통한 중산층의 소득 욕구를 충족하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은 소득기반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공공부조성 현금급여는 자산조사 조건을 폐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만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한 층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단 시간 안에 온전한 형태의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면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이상적 형태에 가까우면서도 재정에 대한 보수적 생각과 호혜성 원칙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장애를 넘어서기 위한 참여소득 전략도 유용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대전략과 참여소득 전략의 혼합을 통해 1차적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고, 사회보험을 소득보험으로 전환함으로써 2차적 소득안전망이 완성되면 한국 복지국가는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생산구조와 경영기법에 새로운 동학이 작동하고 노동시장의 모습이 변화할 때, 이전까지 작동하던 복지국가 프로그램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모습들과의 그 부정합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세기에 만들어진 기존의 전통적 사회보장 체계에 21세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한 층 더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미시적 개혁만으로는 이러한 오래된 복지제도의 부정합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디지털 자본주의에서 자본 축적과 가치 창출의 방식, 변화하는 노동의 모습과 불안정성의 확대,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 시대와 다른 양상으로 확대되는 불평등 해결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진화된 복지국가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금민(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동아시아.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 백승호(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복지동향》, 통권 제261호. 참여연대.
- 석재은(2020). “생애선택기본소득제의 제안”. 한국사회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Atkinson, A.B.(1996). “The Case for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vol. 67(1), 67-70.
- Atkinson, A. B. (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 Meyers, Marcia K., Norma M. Riccucci, and Irene Lurie. 2001. “Achieving Goal Congruence in Complex Environments: The Case of Welfare Reform.”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1 (2): 165–201.
- Pérez- Muñoz, C. (2018). “Participation income and the provision of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The Political Quarterly*, 89(2), 268-272.
- Stoker, Robert P., and Laura A. Wilson. 1998. “Verifying Compliance: Social Regulation and Welfare Reform.”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8 (5): 395–405.
- van Parijs, P. & Vanderborght, Y.(2018). 『21세기 기본소득』. 홍기빈 역. 흐름출판.
- White, S., 1997, “Liberal Equality, Exploitation, and the Case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tical Studies* 45(2): 312-326.
- Wispelaere, J. D., & Stirton, L. (2007). “The public administration case against participation income.” *Social Service Review*, 81(3), 523-549.
- Wispelaere, J. D., & Stirton, L. (2018). “The case against participation income—political, not merely administrative.” *The Political Quarterly*, 89(2), 262-267.
- Zelleke, A. (2018). “Work, Leisure, and Care: A Gender Perspective on the Participation Income.” *The Political Quarterly*, 89(2), 273-279.



이건민, 안효상, 노호창, 서정희(왼쪽 위 줄 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떼다

참석자: 안효상 (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노호창 (호서대 교수)
서정희 (군산대 교수),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일시: 2020년 12월 29일 (화) 14-16시 **장소:** 온라인 회의실

19세기 미국의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헨리 워드 비처는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법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권리^{right}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기본소득법은 특히 그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권리로써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통과될지 아닐지 모르는 법안이다. 더 나아가 설사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긴 하다. 그럼에도 한때는 유명이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실체를 형성해가는 기본소득이 이제 법안으로까지 토론의 장에 올랐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네트워크로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되었다. 그것은 앞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빛^{light}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 반갑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안효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기본소득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과 법을 교차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고 양쪽을 각각 아시고, 또 두루 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노호창: 안녕하세요?

사회: 그리고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님 모셨습니다.

서정희: 안녕하세요?

사회: 반갑습니다. 이견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이견민: 안녕하세요? 이견민입니다.

사회: 올해 2020년 총선이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겠으나 한편으로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두 당에서 각각 한 석의 의원을 냈습니다.

5월 30일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주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기까지 기본소득에 관한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은 입법을 하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법이 이렇게 발의되었다는 건 기본소득이 곧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장 실시되기는 어렵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조례가 몇 개 있기는 하나 내셔널한 차원에서 법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들, 특히 기본소득의 실시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여는 말로 세 분께서 간단하게 각자 기본소득 법률안 제출에 대한 소감,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고, 노호창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호창: 법학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법률안들이 제안된 점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법에 대해 연구하게 되는 경우가 법학에서는 거의 없는데, 그렇다 보니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서 법학에서는 연구가 늦을 수밖에 없었고, 또 막상 법학 분야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초기 연구자로서 당시 생각으로는, 혼자 생각에 제

가 법학 분야에서 기본소득 연구를 하긴 하지만 실제 법률안이 제출되거나 하는 정도의 진전이 이뤄지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은 잘 되지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든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부딪혀야 되는 주제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했고, 사실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나오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에 등장한 법률안들은 기본소득의 타당성이나 정당성 등 근본적이고 이상적인 논의에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할 실무적 쟁점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법률을 통해서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무엇인가라는 많은 쟁점들을 수면위로 드러내 줬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법률안 제출 자체가 큰 의미

사회: 이어서 서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서정희: 모든 제정법이 그렇지만 많이 부족한 상태의 법안이긴 한데요. 일단 법안의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안들이 제출됐다는 것 자체, 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제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정법은 늘 다 부족합니다. 기존의 법안을 개정하는 개정안과 달리, 모든 제정법은 백지 상태에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인지라, 법률안 자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제도화와 관련된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 공론장,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정당성, 즉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정당성 논의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현실적인 문제들, 쟁점들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될 지점을 열어줬다, 그래서 그런 공론장이 생겼다는 점에서 어떤 법안은 그나마 괜찮고, 어떤 법안은 많이 부족하고 그렇긴 하지만 법률안을 제출한 네

분 의원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전해드리죠.

서정희: 꼭 전해주세요.

사회: 이견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이견민: 기본소득 법률안 제출은 기본소득이 정말 아이디어에서 실험 단계를 거쳐서 정책 실현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요. 두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에는 바람직한 형태의 기본소득 법 제도화를 위해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이른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게 공통의 키워드이고, 그러다 보면 이상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아니라 현실에서 풀어야 하는 쟁점들, 제도화의 구체적인 모습들, 이런 얘기들로 갈 거고, 서정희 선생님은 좀 나은 법과 덜 나은 법을 구분하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다시 법안을 읽어보다가 이 두 개를 믹스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다듬을 것 다듬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른바 병합심사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개별적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각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해 볼까요? 조정훈 의원 법안이 먼저 제출됐으니까 그 법에 대해서 먼저 노호창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소병훈 의원 법안에 대해서 이견민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해볼까 합니다.

노호창: 우선 조정훈 의원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략 5가지 정도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수급권의 주체를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과 영주권자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 수급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권의 주체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일단 그런 점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의 재원 부분에서 공유부를 배당한다는 인식을 법률로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공유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법률에 명시한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실하게 개념 정의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부분에서 국가의 책무로서 기본소득이 충분해야 된다는 원칙, 즉 충분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일단 법률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런 점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급여 액수 자체를 하위 법규에 위임하지 않고,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의 수준을 법률안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소병훈 의원 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실질적 자유와 평등구현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의 지향점들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원칙을 충실하게 조문 안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기본소득의 정의를 ‘재산 소득의 수준, 노동활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정훈 의원 안과 마찬가지로 내용이지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먼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들을 실험적으로나마 시행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소병훈 의원 안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소병훈 의원 안에서 기본소득의 수급주체로서 국민 이외에도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주민, 영주권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히 눈에 띄는 점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는 거의 보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 법안 모두에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실질적 자유와 평등구현을 지향한다

사회: 노호창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두 법안이 영 헛발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을 텍스트의 저자라고 본다면,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걸 강조했나 이런 얘기를 따지겠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 이 정도로 하죠. 노호창 선생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서정희 선생님, 이견민 선생님 보태거나 정리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견민: 두 법안에서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기본소득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한 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거나 특별회계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마련된 수입(과세를 통한 수입과 과세 이외의 방법을 통한 수입)은 기본소득으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는 가능성, 일시차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소득 지급액수의 변동성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서정희 선생님?

서정희: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셔서 더 보탬 말씀이 없습니다.

사회: 두 법안 모두 제안 이유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그간 많이 논의되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법안 모두 불균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이 강조돼 있는데,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을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영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

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안이 갖고 있는 한계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모습부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모습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법안들을 검토해 볼까 합니다.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이 뭐냐부터, 기본소득의 정의라든지 요건이라든지 원칙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걸 똑같은 얘기《를 다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주제를 하나씩 드러볼까 합니다. 기본소득이 정의가 있고, 5가지 특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최근 BIEN 논의에서 더 추가하자고 했던 것인데, 조정훈 의원 안에 들어 있는 무차별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흔히 무조건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그랬을 때 이 무조건성이 기본소득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일단 이렇게 본다면 노호창 선생님께서는 이 두 개의 법안이 이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호창: 우선 조정훈 의원 안에서 보면, 사실 기본소득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무조건성이라는 성격 자체가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로 본다는 전제에서도 기존의 다른 제도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에 보면 기본소득의 개념 정의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맞게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기본소득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상호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성의 하위요소로서는 자산조사가 있으면 안 되고, 근로조사가 있으면 안 되고, 행위요건으로서 보험료 기여요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조정훈 의원 안을 보면 소비에서 조건성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 이번에 법 보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 분류를 한다는 걸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노호창: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 보면 소비용처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법률안 자체에서 소비용처의 구체적 명칭, 예컨대 유흥업소, 그것도 룸살롱, 단란주점, 명칭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기타 주점에서 소주방, 호프집도 명시하고 있고, 레저업종에서 골프장, 노래방, 이런 걸 명시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명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용처 제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사용처를 제한하는 세부적인 것도 보면 세부업종의 설정 기준이나 취지를 사실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통 평균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예컨대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미용실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이런 식으로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양보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양보한다 치더라도 굉장히 퇴행적인 식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봤을 때도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급여라든지 이런 것들 것 봤을 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것은 오히려 급여대상자로 하여금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기이하다는 점이 있고요. 아동과 청소년의 소비에 대해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친권자 등이 지급받은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에 따라서 아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규정들 자체가 사용목적 환기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어떤 소비가 과연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법에 나와 있는 게 없을 뿐 더러, 또 아동을 위해서만 사용처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하는데 아동을 위한 게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막연하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사실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조정훈 의원 안처럼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국민은 기본소득

을 건전하게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전하게 사용한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법률의 명확성 측면에서 굳이 이런 표현 자체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없어도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조정훈 의원 안과 관련해서 보면 기본소득 자체를 조건부 제도로 변질시킬 만한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소득의 정의 규정과 실제로 기본소득의 구현의 내용을 규정한 조문 내용들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성은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사회: 미용실 못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노호창: 그러니까요.

사회: 이 문제는 지역화폐 아래 하위 범주에서 쪽 법에서 다루고 있어서 지역화폐 얘기할 때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소병훈 의원의 ‘건전한 사용’에 대해서 과거 박정희 시대를 거친 사람들이 ‘건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건전가요 생각나는, 이런 느낌도 들고...이건민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은 이 무조건성에 관해서 두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지적해 주실 게 있나요?

서정희: 이건민 선생님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 지난 번에 《커넥티드》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비시행규정을 통해서 무조건성을 제한하고 있는 측면이 가장 문제되는 지점 중 하나여서 그때 이건민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지 않으셨나요?

이건민: 혹시 기본소득 실험 관련한 조정훈 의원 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정희: 실험 아니고 예비시행. 예를 들어서 조정훈 의원 안

이 본시행을 전제하면서 별도로 예비시행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단계별 이행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법안에 기본소득을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충분성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충분한 수준에서의 온전한 기본소득을 한번에 실시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비시행이라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비시행이라는 명분으로 선별적 기본소득을 허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훈 의원 안 제17조, 제18조가 기본소득의 단계별 확대전략 구체화인데요. 온전한 시행은 2024년으로 설정하고, 2023년까지를 기본소득 예비시행이라고 명명하고, 그 예비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선별적 기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무조건성을 위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비시행 때 어떤 기준으로 먼저 시행할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연령, 성별, 주거,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선별적 기본소득의 조건이 연령과 성별, 우리가 보통 인구학적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넣었지만 기본소득을 이렇게 한다는 건 아주 웃기는 거죠. 기본소득을 성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남성기본소득을 하자는 건가? 여성 기본소득을 하자는 건가? 보편적인 급여의 조건으로 성별에 따른 급여, 이런 건 처음 봤고요.

그 다음 기준으로 주거가 있는데, 주거에 따라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주거와 같은 경우는 법안의 조문만 봤을 때는 주거? 주거가 뭐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혹은 현금 급여를 지급할 때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명백히 자산을 조사하겠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죠.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안 주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준다 이런 기준을 상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주거는 자산조사의 다른 이름인거죠. 그렇지 않고 주거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거를 어떤 기준으로 삼을 때는 자산조사 용도 이외에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주거요건은 필수적으로 자산조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셈이죠. 특히 이 조건은 다른 그 어떤 무조건성 위배조건보다도 기본소득이 공공부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자산조사가 없다

는 장점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죠. 노호창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조건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조건성은 소득조건(자산조사), 소비조건, 행위조건으로 설명하죠. 조건성은 이 순서대로 큰 문제인 셈인데요. 소득조건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이 소비조건, 그 다음으로 행위조건. 결국 주거 기준은 가장 큰 문제인 소득조건(자산조사)을 넣어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가장 크게 훼손한다는 거죠. 자산조사 조건을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것도 예비시행이라는 명목으로? 예전에 사석에서 노호창 선생님이 이건 기본소득 안 하자는 거지, 이게 무슨 기본소득 하자는 거냐? 하셨는데, 이 조항이 결정적인 조항이에요. 주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4호는 더 문제예요. 4호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조항인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훼손하는 기능을 제4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어 뒀어요. 예비시행 단계에서 제안할 수 있는 조건성을, 물론 대통령령이라고 명시도 했고, 기준으로서의 명확함과 단순함, 집행의 용이성을 명시를 하긴 했기 때문에, 백지위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임의 범위나 효력이 너무 커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 어둔 셈이죠. 물론 2023년까지이긴 해요. 2024년부터는 이렇게 할 수 없기는 한데, 2024년까지 법안이 통과될지 모르 겠지만 이 단계 안 거치고 본시행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사회: 조정훈 의원실에서 범주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안 해서 그렇고요. 주거는 정말 뜨악 했는데, 정말 푸코Foucault 식으로 마음대로 분류하면 지붕이 빨간 사람과 빨강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서정희: 아, 기준이 있군요. 그런 기준은 생각도 못했네요.

사회: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데,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도 되고, 아파트냐, 단독이냐도 되고,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게 이 주거. 물론 서정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영국식으로 베 드룸이 몇 개냐 하는 걸 연상시키는, 일종의 자산조사와 비

슷한 거라고 보고. 성별은 한국이 어쨌든 주민등록번호가 짝수, 홀수니까 짝수 연도에는 여성에게 주고, 홀수 연도에는 남성에게 주는 교대식.

서정희: 그런 걸 생각했나?

사회: 제가 아주 호의로 해석해 주는 거고요.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도덕적 감각이나 윤리적 감각을 가질 수 없겠지만 뭔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느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말실수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에서 매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서정희 선생님까지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걸만 선생님은 더 추가하실 게 있나요?

이건민: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성별의 경우 어떤 형태가 됐든 사회연대, 사회통합, 젠더 평등에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 분명하고요. 다음으로 주거가 앞서도 말씀 하셨지만 자산조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점유형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긴 하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도덕적 해이, 오류, 사기, 행정부담,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이게 무조건성 얘기하다가 법안에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요건과 충돌하는 지점을 예비시행이라는 쪽에서, 특히 조정훈 의원 안에서 찾아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도입전략, 도입의 과정과 경로와 관련된 문제들이고,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범주형 기본소득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충분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걸 조정훈 의원 안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소득의 여러 요건 가운데 일부를 후퇴시키거나 훼손하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기본소득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느냐 일 것입니다. 서정희 선생님께서 먼저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희: 노호창 교수님과 이건민 이사님이 앞에서 기본소득의 정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편성 원칙에서 보면 두 의원은 모두 다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에서는 보편성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단계별 이행전략,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충분한 수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가기 힘들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조항들이 보여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단계별 이행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걸 조건성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한 측면에서는 보편성을 훼손하는 방식인 거죠. 모두에게 다 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을 쪼개는 거죠. 그랬을 때 조정훈 의원 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성 말고 보편성과 관련된 조건은 연령하고 성별이에요. 성별은 말도 안 되고. 연령까지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수당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있는데, 노인에게 70%만 지급하니까 그걸 100% 노인들한테 확대를 하고, 그러면 남은 계층이, 물론 아동수당의 연령도 확장을 해야겠죠. 외국처럼 15세, 18세까지 쭉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특히 공백으로 남는 경제활동인구층,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포괄하지 못하는 조건적인 방식의 현금급여를 포괄하지 못하는 이 연령으로 우선하는 어떤 안들을 생각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령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별은 말도 안 됩니다. 소병훈 의원 안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의 제도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법안에서 조정훈 의원 안은 ‘예비시행’이라는 용어를 썼고, 소병훈 의원 안은 ‘우선 실시’라는 용어를 써서 기본소득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월로 제한하냐 하면 연령, 지역으로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연령과 지역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편성 원칙을 위배한다. 개인적으로는 소병훈 의원 안이 훨씬 합리적이다. 특정지역이 먼저, 우리가 지자체의 예산을 해서 국가가 매칭을 해 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안을 낼 수도 있을 테고. 지역은 독특한 조항이기는 하나 현재 경기도만 청년기본소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편성의 훼손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정훈 의원 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한국에서 경기도 같이 지역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국적인 입법에서 지역 먼저 하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서정희: 그렇죠. 여기서의 지역은 한정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는 한데, 어느 지역을 국가가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보장급여도 그렇고 모든 현금급여가 매칭 펀드로 가잖아요. 물론 비율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6:4, 4:6, 5:5, 간다고 했을 때 지자체가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테니 우리를 먼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염두에 두고 넣은 조항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죠.

사회: 보편성 관련해서 이건민 선생님이나 노호창 교수님 더 보태 주실 게 있나요?

노호창: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 특히 기본소득 예비시행 조항은 그 기준으로 연령, 성별, 주거, 그 밖에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의 경우 어찌어찌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성별의 경우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질서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이나 성별이 보편성 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주거 요건은 필수적으로 자산조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특히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관련있어 보이는 기준으로 ‘그 밖에 명확하고 단순하며 집행이 용이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부분도 보면, 그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어떤 구체적 사항을 하위규범에 위임할 때 지켜야 하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보편성 말씀해 주셨는데, 법제도로써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상적인 기본소득 관점에서 점점 높은 수준으로, 이른바 충분성이 달성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법안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지 이견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견민: 충분성 달성 전략과 관련해서 양 법안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소병훈 의원 안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지침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것(제26조), 세입 항목과 세출 항목의 적시(제27조), 일시차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제28조), 잉여금의 처리(제29조), 예비비(제30조), 세출예산의 이월(제31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요. 반면에 조정훈 의원 안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수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 기본소득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소득위원회가 매년 기본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기본소득 금액의 상승률 또는 감소율은 연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기본소득 금액의 상승률 또는 감소율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의 기본소득 금액은 월 30만 원 이상으로, 2024년의 기본소득 금액은 월 35만 원 이상으로, 2029년의 기본소득 금액은 월 50만 원 이상으로, 2029년 이후의 기본소득 금액은 전년도 GDP의 100분의 10을 인구수로 나눈 금액 이상으로 간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느낌으로는 소병훈 의원 안과 조정훈 의원 안의 중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병훈 의원 안은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침묵하고 있거나 완전히 열린 정치의 장에 펼쳐 놓은 느낌이라면 조정훈 의원 안은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는 기본소득 지급액수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의 족쇄 내지는 닳을 설정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연 10%라고 할 때 그 10%도 너무 큰 수치 아닌가라는, 특히 감소를 연 10%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상

승한다고 해도 10%를 하는 게 아무래도 거시경제 등에 여러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도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수치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럴 수 있다고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법학자가 아니라서 법률에 포함시켜야 할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기본소득 지급수준을 물가수준이나 GDP 수준에 연동하는 지침이나 규정, 예를 들면 최소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GDP 성장률 이상으로 하되 3%나 5% 이내에서 추가로 기본소득 지급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다든지, 물론 구체적인 액수는 매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정도를 마련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정희: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견민 이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사실상 일종의 충분성을 충족하는, 본인이 법안에다가 충분성 얘기를 해 놔니까 그러면 50만 원 이상 되는 정도가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그걸 전년도 GDP의 10% 이상이라고 언급했잖아요. 2019년을 기준으로 GDP의 10%를 국민 1인당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월 308,414원이네요, 30만 원이네요. 2029년 50만 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2029년 50만 원은 지금부터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보면 실제로는 30만 원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소병훈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이견민 이사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소병훈 의원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 이 생계급여를 기본소득 급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기본소득 급여를 국기법의 생계급여 산정했을 때 자산조사 범위에 넣지 않는 걸로 예외조항을 뒀 놔서 지금 현재 빈곤층들은 기본소득 급여가 국기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지금 이행전략에서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급여를 충분한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병합 조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노호창 선생님 말씀 아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노호창: 일단 저는 충분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필요한데, 법률 조문에 충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넣어두는 건 사실 좀 생소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성이라는 용어를 법률 개념에 넣어버리면, 실제 지급되는 액수를 가지고 끝없이 위헌 문제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충분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걸 지향하더라도, 입법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굳이 법률 조문에 충분성이라는 용어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한다면 충분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충분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성을 지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런 기준들을 법률 조문에 넣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중위소득의 몇 % 이상을 주라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듯이 기본소득법에서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은 필요할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설정해야 하느냐는 경제적인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준은 필요하되 다만 충분성이라는 말을 법률에 넣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위헌 시비가 생겨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화주의적 경향은 굉장히 강하게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있는데, 소병훈 의원 안을 보면 왜 앞에 공공복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초’ 이런 표현들은 있어요. 이 부분으로 충분성을 일정하게 갈음할 수는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헌시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예요.

노호창: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개념 자체에 충분성이라는 용어를 넣어버리면, 나는 한 달에 기본소득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걸로는 내 생활이 안 된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위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헌으로 판단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적인 시비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공화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충분성을 해석을 통해서 끌어낼 순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위헌문제의 시비거리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회: 이견민 선생님, 서정희 선생님 방금 노호창 선생님 말씀해 주신 국기법의 중위소득 몇 %, 이런 식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우리가 기본소득, 뒤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넣는다면 그런 걸 넣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법안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충분성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서정희: 답부터 말씀드리면 노호창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추가로 안효상 이사님이 질문하신 규정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에서 절대 액수가 명시된 법안은 아동수당법이 유일해요. 다른 법률에서는 실제로 급여 액수를 정액으로 명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법안에 어떤 급여를 20만 원으로 한다, 10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매년 실질 급여 수준이 낮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매년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낮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몇 %, 이런 식으로 급여 수준을 정할 수 있고, 더 바람직하죠.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의 정의에 충분한 현금급여, 이렇게 넣는 순간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도 맞구요. 그렇지만 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주의적인 요소들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기법에도 문화적인 생활까지를 포함하는 식의 이념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성을 정의 규정에 넣으면,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게 되지만, 이념 조항에 충

분성을 지향하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넣을 수는 있는 거죠. 우리가 BIEN에서도 계속해서 정의 요건과 충분성이라는 원칙과 지향을 분리해 놓은 것처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정의 요건에 들어가는 순간 기본소득이나 아니냐의 문제에 휘말리니까, 급여 수준 조항에서 기준들을 넣는 방식, 예를 들어 충분성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급여 수준에서 중위소득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거나 빠레이스 방식으로 GDP의 25% 이상을 기본소득 급여에 할당한다, 이렇게 기준을 명시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현재로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GDP를 가지고 비율을 따지거나 아니면 중위소득, 이 두 가지인 건가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혹시 쓸 만한 지표가 다른 게 있나요?

서정희: 사실 사회보장 급여에서 어떤 급여에서도 GDP를 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급여가 별로 없구요. 한국의 복지시스템은 주로 사회보험 중심이어서, 명백하게 기여와 연동되는 급여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는 거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급여 수준을 명시한다면 기존에 제도로 구현하거나 이론적으로 언급된 방식들, 그래서 GDP라든가 아니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현재 빈곤선 최저생계비 기준이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30%이고 외국은 30%에서 60%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민: 사실은 빈곤선이나 복지급여 기준선을 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애니 밀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보다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특히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기본소득 지급액수가 1인당 GDP의 몇 %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할 때 활용하는 GDP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평균과 중위수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선 기준과 다르게 기본소득은 평균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의 한 단

면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GDP의 몇 %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소득의 충분성 확대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소득의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맥락에서는 무엇과 연동되는지와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물가에 연동이 안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현재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도 봤고, 예전에는 평균임금에 연동 indexation이 되다가 그것보다 상승률이 낮은 소비자물가지수로 연동을 바꿈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액수의 현재 가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도록 한 서구 연금개혁의 사례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감안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무엇에 연동시킬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차적으로는 우리가 충분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연동을 기본으로 하되 3%면 3%, 5%면 5% 범위 내에서 기본소득 지급액수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기본소득 얘기할 때 결국 문제는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이걸만 선생님 얘기하신 건 정치로 다 열어놓아버리면 결정적인 건 흩어지는, 도리어 어마어마한 갈등만 유발한다고 끝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범위설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지방자치단체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으니 각각 역할 배분에 관한 이야기들을 두 법률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두 개 법률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 배분이라든지 일정한 자율성 등등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민 이사님, 노호창 교수님이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우선 이건민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건민: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점진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완전기본소득으로 도약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주의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서비스 급여가 아니고 현금 급여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것이 최선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본소득의 의제화, 제도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정치적 맥락이 있고요. 특정 지자체에서 선도하여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는 전략도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에 서정희 이사님께서 특정 지자체에서 선도하여 전국 단위의 제도화를 이끌었던 여러 사례들을 잘 정리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 시행을 할 수 없고 실험만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잠재적 경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이것은 더 넓게 보자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구현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시행이 아니라 실험만 하라고 규정한 조정훈 의원 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호창: 일단 저는 먼저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제도로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라는 게 과거의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서 지방의 독립형과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것을 구현하자는 헌법적 가치를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도외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제도와 관련해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보장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 지방분권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 독자성에 기초한 자치주권을 실현한다는 측면도 도외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고무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과 같은 정도

의 연방국가 수준에서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격렬한 논쟁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일종의 복지실험과 같은 성격이 있다는 점을 전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인 것이 아니고 결국 전 국민에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도들이 다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편에서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성격들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이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실험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시야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동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훈 의원 안, 소병훈 의원 안을 보면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 주도로 돼 있고, 지자체는 제도 시행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기본소득 실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소병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각각 기본소득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 안 같은 경우는 지자체로 하여금 기본소득 시행이 아니라 실험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 실험에 대해서도 권한이 약한데 실험에 대해서도 뭔가 국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식의 실험을 하게 되면 제재 조치가 과다하게 돼 있어서 과연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에 의문이 들 정도로 조정훈 의원 안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약간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어쨌든 소병훈 의원 안은 불충분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분배와 역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소득제도 실현에 있어서 적절

히 권한분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자치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병훈 의원 안이 조금 더 낫다고 평가되겠습니다.

사회: 소병훈 의원이 판정승한 걸로 하고, 서정희 교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추가하실 게 있나요?

서정희: 아니요.

사회: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올해 기본소득이 뜬 건 어쨌든 코로나 덕분인데,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는 아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썼고, 전 세계적으로는 ‘비상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명칭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벌써 길어지고 있고, 기본소득 당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조정훈 의원 안에 기본소득 법률안에 긴급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이거 다른 법률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데 맥락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과 별개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세 분의 의견, 조정훈 의원 안처럼 기본소득 법률안에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 의견들을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까 의견 없으시다는 서정희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정희: 조정훈 의원 안은 ‘긴급지원금’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법률안 제안 이유에 이게 왜 들어가야 되나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겪으면서,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중앙정부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편과 선별 논쟁을 거쳤는데, 적어도 재난시기에는 보편적인 방식을 무조건적인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짐작되요. 그러니까 재난과 관련한 현금급여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소득법에 넣겠다는 의도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훈 의원 안에서의 긴급지원금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일단 현행법에 「긴급복지지원법」이 있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있어요. 화재 또는 재난재해로 인해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질적인 영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쪽 열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 3조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이미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이걸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명칭, 특히 ‘긴급지원금’이라는 용어는 두 법안에서 동일해요. 조정훈 의원 안에서 긴급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동일한 목적의 동일한 급여를 타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소득법에 의거해서 긴급지원금을 만약 받았다, 그랬을 때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필요 없는 조항이 되는 거죠. 문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완전히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위기상황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상황처럼 이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지 아닌지, 위기상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그것과 다른 방식의 급여를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법 안에 별도의 조항을 둘 거면 명칭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급지원금이 아니고 재난기본소득으로. 그래서 특히나 단계별 이행전략의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상황에서는 기본소득을 다 준다면거나 2024년도부터는 본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재난시기에는 추가급여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 이런 용도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걸 아예 기본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기본소득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어쨌든 무조건성과 보편성 중 어떤 것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청년 기본소득은 연령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고, 농촌, 또는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했을 때는 직업 범주로 한정하는 것이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재난이라는

특정 상황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니까, 수식어를 붙여서 어떤 측면을 제한하되 기본소득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의 급여를 한다는 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기본소득 5가지 정의 규정에서 정기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4개는 충족을 시키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또 다른 두 분도 의견을 주시죠.

노호창: 저는 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회: 이견민 이사님.

이견민: 저도 특별히 추가할 내용은 없습니다.

사회: 만장일치로 합의한 걸로 할까요?

사회: 기본소득법안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이른바 병합심사라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 뽀 것들은 뭐가 있고, 합칠 건 뭐가 있고, 추가될 건 뭐가 있는지, 굳이 분류하자면, 이렇게 해서 한 분씩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본소득 법안의 미래는?

노호창: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게 결국은 수급권자를 찾아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 법안들에서는 어떻게 수급권자들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급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절차적인 측면이 미흡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대체로 실무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견민: 저는 특별회계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정훈 의원 안을 보시면 안 제23조에서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기본소득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국세,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내국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국세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세입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 보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기 힘들고, LAB2050 연구보고서를 보면, 조정훈 의원이 고려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정비,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적극 과세, 복지정책 중 일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 소득 보전 성격을 띠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것, 기존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하는 것, 지방재정의 지출을 조정하는 것, 융자 사업을 이차 보전으로 전환하는 것,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 지방정부의 집행되지 않은 지출 예산,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물론 이걸로 다 담기진 않겠조. 더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기존의 여러 세목에서 1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하는 방식이라서 특히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본소득 자원 마련 방안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런 방안들이 기본소득의 다양한 자원 마련 방안 중에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정적인 기본소득 지급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민 이사님의 견해와 같이,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정책, 탄소세-탄소배당 정책, 시민소득세-시민배당 정책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물론 이 모든 것은 각각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고, 정책들의 성격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분리 또는 통합해서 계리하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정책이나 탄소세-탄소배당 정책, 국토보유세-토지 배당 정책 이런 것들은 새로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정환상을 제거한다든지 순수혜자 관련해서 모의실험simulation 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정희 교수님.

서정희: 지금 굳이 단순비교하자면 조정훈 의원 안보다는 소병훈 의원 안이 고심을 더 많이 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두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할 텐데, 그랬을 때 조정훈 의원 안보다는 소병훈 의원 안의 조항들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기본소득의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공유부 배당을 소병훈 의원 안은 담지 못했어요. 소병훈 의원 안을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공유부 배당 원칙을 담았다가, 공유부가 자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유부를 명시하는 순간 세법과 관련된 너무 많은 법들을 손을 대야 되고, 그러면 타법 개정이 동시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들을 다 빼 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적이고 입법적인 전략으로서는 공유부 배당이라는 언급을 제외하고 법안을 제출한 선택이 이해는 가는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완벽한 법안과 타법개정안까지 만들어서 넣게 하는 게 좋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 빼고 이렇게라도 올려서 공론장에 올리는 게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제도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후 과정에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소득의 원칙이자 근거에 해당하는 이 공유부를 어떻게 법안에 녹여낼 거냐?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부분을 추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고,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한 것은 기본소득 법률안이 발의된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이 정도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제출된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

입니다. 이런 종류의 제정법, 특히 기본소득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법률안이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힘의 집결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이번 법률안의 발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있습니다. 만약 통과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말씀 나눠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좌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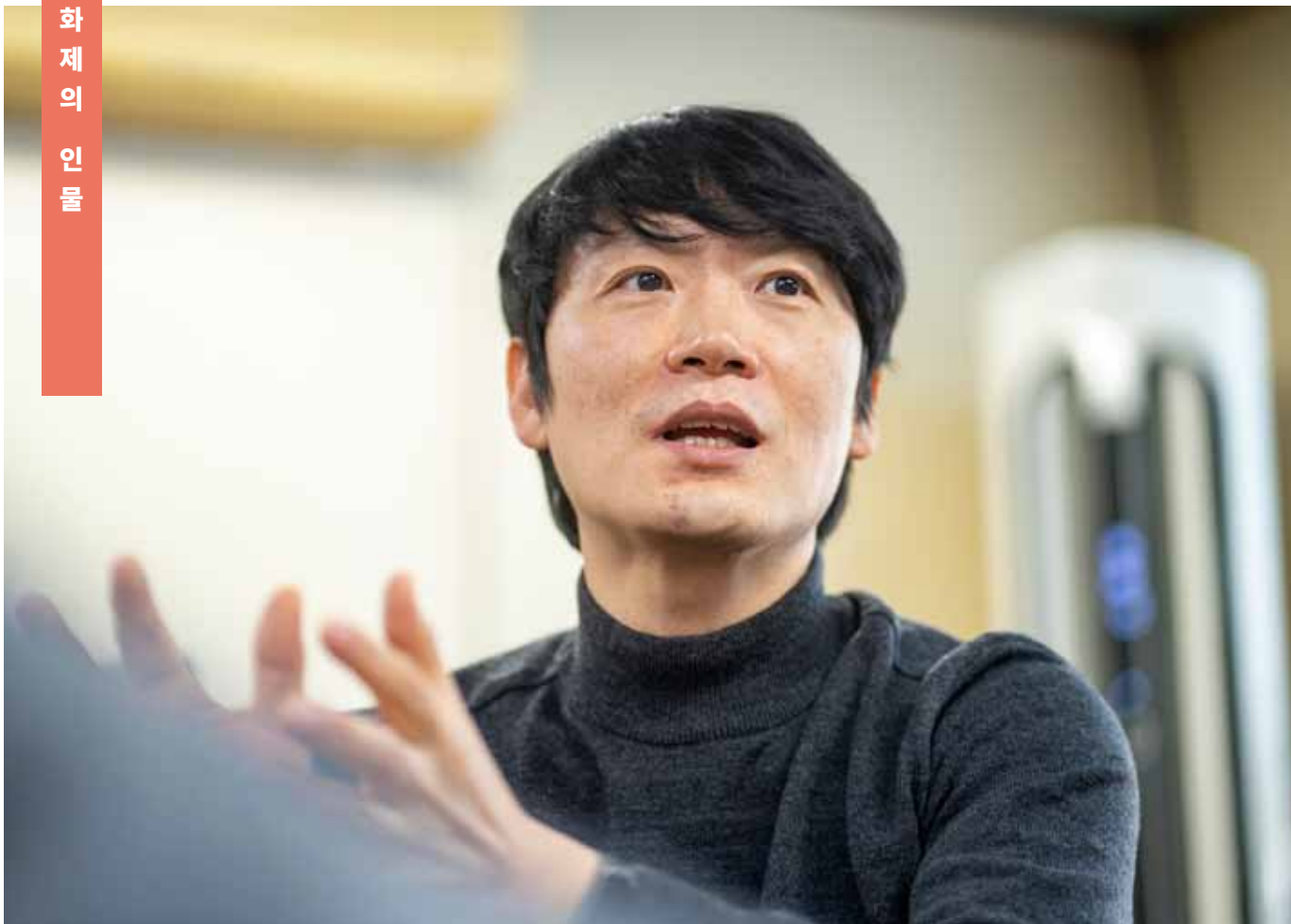


사진 © 양희석

동네의사의 전지구 기본소득이라는 꿈

정상훈

- 동네의사,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저자

인터뷰어

류보선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군산대학교 국문과 교수

벽(癖)이란 말이 있다. 사전에는 ‘1.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性癖) 2. 고치기 어렵게 굳어 버린 버릇’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무언에 과잉으로 집착하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에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버릇을 지칭하는 말이다.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그 벽의 밑바닥에 그 사람의 의식 말고 무의식이 은밀하나 강렬하게 작동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러니 고치자 고치자 해도, 고치자고 결심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이전보다 더 그것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의식의 통제 바깥에 어느 것에 의해 작동되는 그 무엇. 없애고자 하면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해져 없애자 다 집한 그/그녀를 지독한 곤경에 빠뜨리는 그것.

그런데 때론 이 벽(癖)이 타인과의 소통과 친밀성의 관계를 막아세우는 벽(壁)이 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벽이란 조금만 단디 결심하면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그녀를 아끼는 누군가는 그것을 고쳐보라고 권유하고 응원하고, 당사자는 이번에는 정말 이 벽에서 해방되리라 굳게 다짐한다. 하지만 이 벽은 당사자의 의지 너머의 것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내 결심이 단호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있다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바로 오해가 시작되고 이는 곧 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처럼 나의 얼룩이기도 하고 타인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 벽이거니와, 당연히 나에게도 몇 가지 벽이 있다. 그중 심한 것은 책을 사모으는 벽이다. 주기적으로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신간을 둘러본다. 아! 거의 모든 책들이 뿜어내는 강렬한 휘광의 진리의 빛이라니! 그 외의 거의 모든 책들에서 풍겨나오는 질은 지성의 향취라니! 그리고 몇몇 책들에서 발견되는 잔뜩 웅크리고 호랑이의 도약을 준비하는 잠재성들이라니! 어떤 책을 접해도 그 책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대략 열 가지는 떠오른다. 게다가 설득의 수사학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그것을 이겨내기에 내 귀는 너무 얇다. 흔쾌히 사고, 망설이다 사고, 장바구니에서 지웠다가 다시 찾아 사고, 끝내 사고 만다. 그러나 결재가 끝나는 그 순간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한 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후회에 휩싸이고, 책이 도착하는 순간 그 책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순식간에 스무 가지도 넘게 떠오른다. 해서, 연구실에, 집의 서재에, 거실에, 무엇을 놓을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의 모든 곳에 책이 가득가득 쌓이건만 책의 탑이 높아질수록 내 머리는 비어간다. 전형적인 외화내빈이다.

이 소모적인 외화내빈을 잘 알면서도 이 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들인 책의 양에 비하면 극소수에 해당할 몇몇 책에서 어떤 황홀경을 맛보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망할 벽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때가 있는 것이다. 아주 간혹.

나의 이 고질적인 벽 때문에 뜻밖에 진리의 빛이 유독 강렬한 책 한 권을 만났다. 정상훈의 『동네의사와 기본소득』(루아크, 2020.11월 출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도 반가웠지만 ‘동네의사’라는 말은 더 반가웠다. 명의도 아니고, 응급외상 전문의도 아니고, 행동하는의사회 의사도 아니고,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도 아니고, 의사파업에 반대하는 의사도 아니고 ‘동네의사’였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아니, 망설이는 것이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지 열 가지 이유도 더 떠올랐다. 주문했고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읽었다. 놀라웠다. 거기에서 이곳저곳에서 저자의 이력을 수소문해서 듣는(아뵘싸, 그는 행동하는의사회를 창립한 이이기도 했고, 국경없는의사회 의사로 아르메니아, 레바논, 시에라리온이라는 사지를 오고간 이였다.) 순간 망설일 필요가 없어졌다. 바로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좌담은 2020년 12월 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사진은 사진작가 양희석씨가 어려운 시간을 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도전으로서의 ‘첫 책’과 ‘첫 책’의 보람

첫 책을 내셨다. 아직 따끈따끈한 상태다. 첫 책이니 책을 내신 소감도 남다르겠다. 주변에서 여러 반응을 접하셨을 텐데, 그것도 궁금하고.

- 첫 책이었는데 기대보다 책이 예쁘게 나왔어요. 작은 1인 출판사였거든요. 제가 처음 책을 내다보니까, 저자와 출판사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사장님과 무척 친밀하게...

합이 잘 맞으신 모양?

- 네.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었어요. 표지 디자인을 보내 주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웃음) 조금 더 심오한 무엇을 표현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주위 반응을 들어보니, 예쁘게 잘 나왔고, 작은 책이지만 눈에 확 띈다고 하더군요. 사실 요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나 기본소득은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무척 쉬웠다,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았는데 책이 쉬워서 술술 읽혔다,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책을 쓰면서 쉽게 읽히는 책을 쓰고 싶었거든요.

‘동네의사’라는 진리의 빛과 ‘동네의사’라는 별종의 탄생

책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내겐 ‘동네의사’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의사 앞에 붙일 품나는 단어가 많은데 굳이 ‘동네’를 붙인 이유가 궁금하다. 근사했다. 참신하기도 했고.

- 이 책은 제가 의사가 진료실 안팎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저를 누구라고 규정해야 하나?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국내 의료인 단체와 국경없는의사회에서 활동했고, 또 정당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일을 했네요. 그래서 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하나? 혼란스러움과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프리랜서

의사, 그때그때 자리가 나면 가서 일하는 프리랜서 의사, 그것이 저에 관한 가장 솔직한 소개였습니다.

또 저에게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본소득을 더 쉽게 소개하면 좋겠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본소득이 연결되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야기 전달자도 친근하게 느껴지면 좋겠다. 흰 가운에 흰가 권위가 느껴지는 의사가 아닌. 그런 점에서는 ‘동네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법한 전달자로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여름 의사 파업, 정확히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있었죠. 그때 저는 ‘동네의사’라고 정하기를 잘했다고 느꼈어요.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때, 어떤 의사는 ‘동네 의사’를 자처해야겠죠.

살아온 이력을 보면 의사 앞에 세상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수식을 붙일 수 있었다. 예컨대 국경없는의사회도 그렇고 ‘기본소득’과 합을 맞추려면 ‘행동하는의사회’도 짝이 잘 맞는다 싶었다. 그런데도 ‘동네의사’를 선택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의사상을 구현해야겠다는 의지 혹은 결단의 반영이라고 봐도 되나.

-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치관이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 내부의 불화는 있었거든요. 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는 네가 의사인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제가 예전에 의사단체 대표로 활동할 때도 진료 행위로 남을 돕지 않았습니 다. 장애인 의 목욕을 돕는다는지 같이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운을 벗고 행동하는 걸 강조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저 안에서 화해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가족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와 불화 문제도 있었습니 다. 이 책에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의사단체를 비롯한 여러 사회운동에 참여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냉소적이셨거든요. ‘너는 엄마한테는 못하면서 밖의 사람들만 잘해 주려고 하는구나.’ 아들의 큰 뜻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사실 저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삶을 사셨거든요. ‘우

리 엄마의 삶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이 삶의 문제와 제 이상,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그게 스스로를 동네 의사라는 칭하는 것이었나.

- 의사라는 걸 긍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그런 연결을 발견할 수 있게도 되었고요.

의사이시면서, 의사 일에 애정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 영 뜻밖이다. 계기가 있으셨나?

- 기존의 의료계 선배들로부터 저렇게 살고 싶다는 본 보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의사 진료거부사태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충격받았죠. 하지만 정확히 20년 전에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선배들의 행동에 실망하면서 의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자신들의 경제 이익을 앞세운다, 특권을 앞세운다는 걸 발견했구요. 그렇다면 의사들의 권위와 특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서는 뭔가 바꾸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0년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굳은 신념 때문에 시인이 시인이기 위해서는 시인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편 바 있다. 진정한 의사이기 위해서 의사를 거부해야 했던 마음이 1930년대의 시인들이 놓여 있던 역설적 상황은 닮아 있는 듯하다.

코로나19와 우리의 혈벗은 몸

2020년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해다. 의사의 시선으로 보자면 더욱 더 그럴 것 같다, 거기다가 2020년은 선생이 ‘동네의사’로 다시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2020년은 당신에게 어떤 해인가.

- 현대 사회가 ‘벌거벗은 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책 머리말에도 썼는데, 코로나19의 유행이 우리 민낯, 혈벗은 몸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동안 가리거나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사실 제 책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볼 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나 장애인, 여성 문제, 모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먹고살기 바빠서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더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나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 응시하고 고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을 현대 사회가 ‘벌거벗은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벌거벗은 상황을 보기 힘들어 이걸 빨리 덮고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벌거벗은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자고, 덮으면 된다는 이들이 많아서 우리 사회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있다. 이런 저의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 이렇게 벌거벗은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하고 나아갈지는 이제 우리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서 도피하기 위해,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해 배우고 또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특권의 무기화 혹은 2020년 의사파업의 퇴행성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의사파업도 있었다. 코로나로 전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8월부터 9월까지 꽤 긴 기간 동안 이어졌다. 덕분에 국민들 모두가 의사의 민낯도 보게 됐다. 2020년의 의사 파업에 관해 서려면 감회가 특별했을 텐데……

- 제가 의사라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인터넷에서 시끄러웠던 소위 ‘짤방’ 있잖아요. ‘전교 1등’, ‘덕분이라며’ 같은 것들은 단적으로 의사집단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권은 사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잖아요. 공동체가 아니면 그들의 특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대항해서 특권을 무기로 쓰고 말았습니다. 의료계를 바꿔보겠다고 제가 의사단체를 만들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절망이었어요.

나빠졌다면 어떤 점에서 더 나빠졌다는 건가.

- 201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그 결이 달랐어요. 선배 의사들은 노골적으로 이윤추구, 약사들과 밥그릇 싸움을 벌였지요. 하지만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은 ‘의료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의약분업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국 의료에 쌓여 있던 문제들을 바꿔보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런 움직임이 대세를 바꾸지 못했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젊은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더 강경하게 고수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선배 의사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다른 ‘대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니,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이해 혹은 어머니와의 화해; 기본소득의 힘

『동네의사와 기본소득』의 또 하나의 중요한 화두 ‘기본소득’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가자.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와 열의가 만만찮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언제 짚으셨나?

- 궁극없는사회에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구호활동 현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동네 의사로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외로 나갔죠. 이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사진 © 양희석

이력을 보자면 가정은 거의 돌볼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셨던 모양이다.

- 굳이 말하자면 가장은 제 처고요. (웃음) 그때 금민 선생님을 통해서 처음 기본소득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제 삶이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돈을 벌지만, 사람들, 사회와 접점이 없던 때라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엔 ‘와우! 이거 대단한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사고칠 수 있겠는데……’ 하는 느낌이었는데, 선생은 ‘황당한 생각이다’ 정도의 느낌이셨는 모양이다.

-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기본소득과의 만남이 그렇게 밋밋했다면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의 대안이랄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으로 받아들이게 된 또 다른 계기가 있다는 것인데 다가온 또 다른 순간이나 계기가

있었다는 말인데……무엇이셨나?

- 2015년 세 번째 해외 구호 활동을 다녀온 다음, 국경 없는의사회 활동은 일단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구호 활동 다녀온 세 번째 지역이?

- 시에라리온

에볼라?!

- 2016년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했는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기본소득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기본소득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루이소체 치매를 앓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굉장히 불효한 사람입니다. 사회를 바꾸겠다면서 어머니한테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저희 어머니는 혼자 사셨거든요. 그런 분이 몸 쓸 병에도 걸린 겁니다.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만 해도 어머니는 평일이면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셨어요. 저는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머리 크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몸을 만지고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어머니에게 열정이 넘치던 3~40대, 아니, 여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5, 60대 때라도 기본소득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어머니에게도 다른 삶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동네의사와 기본소득』에도 감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지나간 삶이 선생을 기본소득으로 이끄는 장면은 인상적이다. 예컨대 새롭게 조우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머니의 인생을 다시 맥락화하고, 어머니와의 화해를 거쳐 나를 힘들게 하던 과거와 화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인생과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기획하는 과정은 하나의 새로운 대안이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도 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었다. 하나의

정책적 대안은 미래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인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조망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영감을 받았다고나 할까. 하여튼 선생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꿈은 개념적, 정책적인 대안으로써만 아니라 선생의 인생과 일상 속에서 우려나오는 것이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어머니를 통해 기본소득을 새롭게 보게 되자, 국경 없는의사회 활동 경험과도 연결되더라고요. 국경 없는의사회 활동하면서 괴로웠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습니다. 당연히 물은 계속 부어야죠. 물이 다 새면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하지만 빠진 밀은 어떻게 하나? 아르메니아에서 결핵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에 이주노동을 가서 끊임없이 결핵에 걸려 오거든요. 걸려 오니까 치료해야죠. 하지만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고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념마저 사라진 시대, 저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활동하는 내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런 상상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세계 기본소득’ 논의는 무척 미약하더라고요. 사실 한 나라에서조차 제대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국가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경제발전을 위한 끝모를 경쟁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기본소득이 가장 실현 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이런 해답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힘이 세다;

기본소득 확산과 이야기의 필요성

『동네의사와 기본소득』에서 제가 감지한 특이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듯 기본소득이 선생의 인생과 일상에서 스며나온 것이기에 절박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분명하달까 단호하달까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다

는 건 이런 걸 함축한다. 최근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이론가들은, 아마도 기본소득을 현실 속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일 터인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느낌이다.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높은 차원의 기본소득보다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기본소득은 선배당에 해당하고 건물의 1층이라고 비유하면서도 먼저 배당하고 1층부터 짓자고 하지 않고, 선배당은 있을 수 없고 사상누각이라도 2층 하나만 필요하다는 사람들한테 1,2층을 같이 짓자고 말하는 식이다. 기본소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의 원칙이랄까 분명한 상을 조금조금씩 스스로 포기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또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이 대안적 가능성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부류도 생겨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논의에 비해서 선생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태도가 분명하고 선명하다.

- 일단 저는 이론가가 아니니까요. (웃음) 세상을 바꾸려면 물론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다수의 지지만큼 중요한 것은 상당한 숫자의 열성적 지지자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점은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믿으면서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을 보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를 한 것은 소수, ‘상당한 수’의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다수의 지지를 끌어냈지요. 기본소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럼 현재 기본소득운동에서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뭘까? 그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야기죠. 사실 다수는 이야기에 움직이지 않아요. ‘고문당해 죽은 박종철’에 분노해서 사람들이 움직였죠. ‘최순실의 지시를 따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앞으로 기본소득운동도 어떻게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서 이야기로 발화가 될 것인가, 그런 점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기본소득의 충분성

저는 이론가가 아니라는 말이 묘하게 마음을 끈다. 제가 기본소득 공부를 기본소득을 주도하는 이론가들(?)에게서 해서 문득 어떤 의문이 들어도 감히, 하고 묻지 못한 게 많다. 그런데 선생의 ‘이론가가 아니니까요’라는 말을 들으니 이론가도 아니면 이론가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강박이 일순간 풀리는 듯한 느낌이다. 제가 현재 기본소득에 관한 담론들 중에서 제일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충분성’을 둘러싼 논의들이다. 기본소득 이론가들은 말한다. 기본소득이 불평등 경제 혹은 경제적 불평등을 혁신적으로 혹은 혁명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그리고 선별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부담을 지는 사람이 너무 분명하게 갈려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낙인 효과도 없고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기본소득이 이런 역능 혹은 효과를 내려면, 다시말해 기본소득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충분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모두의 것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독점하는 사람들, 예컨대 슈퍼리치들이나 개인의 몫이 과다 계상된 사람들의 과다 계상분을 적절하게 환수하여야 기본소득은 목적하는 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데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조건 정도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보다 많이 지급하려면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액은 선별의 것들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를 두고 비판이 들어오면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본소득의 의의를 말할 때는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해 그것의 필연성을 주장하고 예상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말한다고나 할까. 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대신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강화시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러한 전향적이고 도발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믿는 편이다.

그런데 『동네의사와 기본소득』에 제 막연한 생각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은 기획을 발견했다. 여간 반가웠던 것이 아니

다. 『동네의사와 기본소득』에는 월 6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15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아지겠냐 하는 얘기도 나온다. 기본소득에서 충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충분성을 무척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첫 번째 쪽글부터 충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덕분에 먹고살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의사들만큼 잘 살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가능한 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다양한 가치, 잠재력, 가능성.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기본소득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에 학생들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입시를 위한, ‘좋은’ 대학교를 위한 삶을 거부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소득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상이 가능해야 열정을 불태우는 열성적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충분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론가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충분하면 좋지만 충분성에의 집착이 오히려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정책화하는 데 장애요소가 될 개연성도 높으니.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혹은 충분성의 아포리아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기본소득으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을 책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목소리로 기본소득을 열정적으로 주장한다면, ‘정책적 고려’는 부차적이지 않을까요?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기본소득운동은 주체를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실 가능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얼마나 많은 영역의 주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게 할 것인가? 그런 주체를 어떻게 만나고 발굴하고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한다면 현실적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귀가 얇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그 종착지는 다른 여러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혼란에 빠지고 한다. 안심소득제라든가 기본자산제라든가 전국민고용보험제라든가 일자리보장제 등등. 이 대안들과 비교해서 왜 오로지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

- 다른 많은 정책,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 어린이에 관한 정책들이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대전환의 계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다른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고치는 수준이라면, 기본소득은 이후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할까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세계 기본소득; 향후 기본소득 운동의 두 과제

10년 전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접했다 하셨다. 그때와 지금과는 기본소득으로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천양지차요, 격세지감이라 할 만한 듯하다.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혹은 정책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고, 기본소득을 활용하는 정치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혹시 기본소득이 일반인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기본소득을 주도하고 있는 운동단체, 정치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 제 책을 읽은 지인이 말하더군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기도, 그렇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책에서 기본소득운동이 우리 사회 다양한 운동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면 해야 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기본소득. 그런 기본소득이 단지 정치인의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다 보면 기본소득의 정신과 가치는 퇴색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사진 © 양희석

다. 현재 기본소득운동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많은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운동과 아직 만나지 못했고, 일부 정치인이나 이론가들의 주장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주제는 가난한 국가들의 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국가니까 기본소득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프리카, 당신이 다녀온 시에라리온에서 가능하겠나?’ 1인당 GDP가 천 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결국, 세계 수준의 모색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많은 연구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황당하다고 느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세계기본소득’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야겠죠. 그렇다면 10년, 20년 후라면 좀 더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합니다.

현재 기본소득의 논의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무관심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기본소득만이 아닌 전지구 기본소득의 실현이 향후 기본소득 운동의 주요한 과제라고 보는 모양이다. 단연 중요한 문제제기인 것 같다. 오랜 국경없는의사회의 경험이 느껴진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들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시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해 제언 혹은 조언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론가들, 기본소득 이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 이론을 설명하는 단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에서는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그럼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과 가깝게 만날 수 있을까? 저도 작은 정당에서 활동해 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뽕족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라는 문제 설정에서 전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 입에서 기본소득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전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저도 ‘동네 의사와 기본소득’을 썼겠죠.



사진 © 양희석

‘액화노동’의 시대 새로운 분배제도가 필요하다

이승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인터뷰어

이관형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기본소득이 온다』(2018)는 국내 기본소득 연구의 소중한 성과물이다. 이승윤 교수는 이 저작의 공동저자로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이다. 그런 그가 2020년 9월 출범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장관급)이 됐다.

그의 취임을 놓고 언론은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 “기본소득 전문가가 청년정책위의 수뇌부에 오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국 단위 청년 기본소득 도입을 필두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각종 위원회들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러그려한 명망가들이 그러그려한 좋은 얘기 나누는 모임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어 왔다. 만 서른에 교수가 되었으니 경력으로 보아서는 중견급이다. 그렇다 해도 40대에 접어든, 젊은 교수에게 장관급 자리를 맡긴 것은 파격이다. 외피가 아니라 내실을 기하기 위한 인사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청년 노동자 권익보호에 관심을 견지해온 이승윤 교수가, 아니 이승윤 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흑석동 이승윤 교수 연구실로 찾아간다. 흑석동 하면 중앙대보다도 중대부여고가 먼저 떠오른다. 중대부여고는 이제 없다. 중대부고로 통합되어 강남 어디론가 이전했다는데, ‘라떼’는 여고, 남고 따로 흑석동에 있었다. “어디에서 나처럼 늘어갈까?” 모처럼의 매콤새콤한 짝사랑의 기억은 변화한 주변에 놀라 페이드 아웃된다. 거대한 중앙대병원과 제법 여유가 있던 캠퍼스를 빼곡히 채운 건물, 건물들. “모든 대학이 다 이렇구나.” 과거 몇 번 놀러 왔던, 수십 년만의 중앙대에서 그래도 몇몇 오래된 건물이 반가움을 안긴다. 청룡 연못은 꿈꿨던 얼어붙어서인지, 줄어든 느낌이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간 《기본소득》에 아시다시피 ‘화제의 인물’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승윤 교수님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제의 인물이 아니실 수가 없지요.

- 저도 놀랐어요.

인터뷰 준비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조위’)가 뭘 하는 곳인지 누리집을 좀 뒤져봤습니다.

- 그러셨어요?

정부측 인사 스무 분은 거의 전부 장관이시네요?(총리, 17개부처의 장관, 광역단체장 대표로 전북지사, 기초단체장 대표로 수원시장이 참여함)

- 네, 맞습니다. 장관과 총리까지.

총리님이 위원장 하시고, 부위원장은 두 분이 계시고, 그 중 민간 부위원장이 이 교수님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잘 모르겠는데 우주비행사였던 고산이라는 분도 위원회에 계신 것 같고.

- 위원회가 매우 독특해요. 제가 그동안 정부 위원회를 안 해 본 건 아닌데, 청조위는 느낌이 다릅니다. 민간위원 20

명 중에 열두분이 34세 이하예요. 심지어 현재 대학생인 20대 초반 위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의 사회질서와 통념과는 많이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의 위상이 낮고 이를 반영하듯이 정부 위원회에는 단체나 기관들의 대표, 교수들이 대부분이지 청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청년들이 많은 이 위원회에서, 청년들로 인해서 제가 감동받는 일이 많습니다. 청년위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상당히 따뜻하고 열정이 넘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아직 현실과 덜 부딪혀봤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희망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저는 이제 상당히 비관론자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상을 가지고 무조건 도전해 나가는 이 에너지,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사회의 많은 것들은 이런 희망과 이상을 지닌 청년들에 의해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다소 낮은 청년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청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학부생 등 청년 대거 등용, 기존 위원회와 다른 파격 보여

우리 사회에는 레디 메이드된 ‘청년담론’이 있다. 또한 이 담론을 회전문처럼 반복하는 소수 청년 엘리트들이 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 밖의 청년’이 오히려 다수이다.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정과정을 보니까 공모를 해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인터뷰를 포함한 선정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선정과정 자체는 잘 모릅니다. 선정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들을 통해 나중에 들었더니 이분들도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리에 공모한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아직,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요. 아무런 보수가 주어지지 않는 데도 말입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보수가 없나요?

- 아무도 모르시는데, 페이스북에 올려야 할까요? (웃음) 장관급이라고 말씀들은 하지만,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활동수당이나 보수도 전혀 없는 직책입니다. 우리 남편이 신문을 보더니 농담으로 저보고 ‘장관급이지만 무보수임’이라고 꼭 쓰라고.

그래요?

- 그동안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명예퇴직 교수 등 비교적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예요. 저도 교수직이라는 안정적 직업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이 위원회일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노사분규 가는 건가요? (웃음)

-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열정페이 하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지속 가능하지 않다. 다시 아까 질문하신 걸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청년들이 많았던 것은 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여러 청년활동가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젠더 등 그간의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쿼터가 아니라서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청년위원분들은 여러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맡은 부위원장자리도 빨리 청년에게 넘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원 스무 분 중에 열두 분만 청년인데, 저는 스무 분 모두를 청년으로 해도 전혀 문제없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청조위 1기로서 저희가 할 일은 이 위원회의 전체 위상을 좀 더 올리고, 정부측 위원 스무 분이 다 장관급이신데 청년민간위원들도 정책과 관련하여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등하게 대화나 토론을 하자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관계에 따라서 빅 마우스와 스몰 마우스로, 혹은 말하고 명령하는 자와 듣고 따라야 하는 자로 갈리는 경우가 많지요. 청조위에서는 대화와 토론이 대등하게 이루어지고 정책결정에서도 청년위원들의 목소리가 대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예, 정부측 위원과 민간측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상대가 장관들인데 대등하게 의견 말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청년기본계획 수립과정, 민관협치의 새 모델로 평가받아

- 청조위의 초기 위상수립과 관련하여 저처럼 40대 초반의 여성인 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초반에는 아주 전형적으로 서울대 60대 초반 남성 교수 혹은 중진급의 의원이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자부할 수 있는 건 이번에 기



사진 © 양희석

본계획을 짧은 시간에 수립을 하면서 민간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위원회는 정부에서 안을 갖고 오면 이걸 심의하고 한두 번 만나서, 1년에 많으면 2번 만나서 의견 주고, 자문 의견 정도를 쓰고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년들이 워낙 에너지가 많고 저도 아직은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정책수립 방향부터 저희가 세웠어요. 초반부터 곧바로 민간위원들끼리 회의를 여러 차례 갖고, 분과를 나누고, 이 분과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정부에 제안하면 정부에서 정책안을 만들어 오고. 이 과정을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20회 이상 협의와 논의를 위한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위 자체 논의도 많았고, 외부 다른 청년대표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측과도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활동을 한 위원회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처와 청년 위원들이 직접 만나서 협의하고 페이퍼 작성하고, 또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나서 청년정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도 했습니다.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역할을 해 주시고, 청와대의 청년 비서관실은 각 정부부처에서 저희 안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고 김광진 청년비서관님은 훈장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청년정책이 민간 영역의 청년 목소리가 가능한 담긴 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좋았고, 청년정책추진단은 저희와 민간 협치를 잘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 발표하는 날 깜짝 이벤트를 했어요. 총리님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 위원님들끼리만 논의해서 깜짝 이벤트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청조위 구성도를 보니까 정부측 실무조직으로 국무조정실 안에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있더군요. 거기 에다 감사패를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 예, 거기와 청와대 청년정책비서관실에 드렸습니다. 민간 협치의 새 모델을 수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감이 잡힙니다. 각 부서별로 청년정책들이 따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통합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즉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혹은 거중조정기구가 필요했는데, 청조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 네. 그런데 정책조정 이상으로 나가본 거죠.

조정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까지도.

- 네. 청년정책 수립은 총리실이 주관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초기 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가 함께 참여하여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몇 개의 정책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 정책들을 각 부처에서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진 © 양희석

청조위, 청년 정책 관련 정부부처간 단순 조율 넘어 정책 수립의 장으로 만들고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말씀하셔도 되는 거면

- 네. 일단 청년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게 저희의 가장 큰 과제였죠.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는 건 주무부서가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든 고용노동부든. 이걸 K-뉴딜처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야 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 소위 ‘합본’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가부는 경력단절 프로그램 하나, 보건복지부는 청년자산형성 하나,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국토부는 청년주택정책, 이렇게 해서 각각 하나씩 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합본해서, 이게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피하고자 각 부처의 개별적인 추진과제를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청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청년을 중심으로 정책방향 제안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처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고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참여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본 거죠. 12월 23일에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을 추진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실무위와 전문위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원들이 직접 발로 뛴 게 많거든요. 이제 각 부처들은 올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 즉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책수립이 제대로 됐는지 저

희가 또 한 번 심의조정을 하고 정책의 전달체계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청조위의 제안이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히 체크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맞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와 지자체가 정책을 잘 설계하고 약속을 지키는지 정책 모니터링도 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올해 청조위의 계획은 일단 상반기에는 각 부처의 시행계획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 체계를 잡고, 그 다음으로 기본계획에 미처 담지 못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아야 할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제가 청년출발자산제라는 걸 제안했어요. 모든 청년이 일정한 금액의 자산을 배당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자산으로 럼프 썸(lump sum;일시불)으로 받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처럼 정기적인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청년출발자산기금에다가 묶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 그러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나

오는 이윤을 지급할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꽤 구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했고, 몇 가지 논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데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 결과로 생각한 것이 공론화였습니다. 자산으로 받든, 배당으로 받든, 수익금으로 받든, 저는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이 기초자산제의 장단점은 뭐고, 청년기본소득의 장단점은 뭐고, 여러 논의들이 현재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숙의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가능할지에 대해 논쟁이 많았습니다. 청년위원들도 공감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 토론의 과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공론화에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를 해서 찬성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을 제도화하여 시행할 예산이 과연 있느냐? 준비를 해 놓고 공론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거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 몇 가지를 공론화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제1당론으로 한다고 했고, 그 첫 지급대상은 청년일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안들이 안 나와서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가 될 확률은 높을 것 같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다음 대선 정치권의 화두가 될 가능성 있어

- 맞습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권 초에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기초자산과 같은 정책들이 제안되었으면 이번 정부에서도 좀 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는 아마 다음 대선주자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대선주자들께서

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청년들이 직접 이게 무엇인지, 장단점은 또 무엇인지, 만약 제도를 도입한다면 나는 어떤 제도를 더 선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든 다른 형태의 배당이든, 민주시민으로서 배당을 받는다면 책임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공유부를 배당 받는다는 것은 공유부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청조위에서 나서지 않아도 올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청년 단체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본소득을 놓고 스터디도 하고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도, 예컨대 기초자산제는 어떠냐 등에 대해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청년을 둘러싼 새로운 분배제도 혹은 소득보장제도가 많이 논의가 될 것 같고, 그 핵심에는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배당, 청년기초자산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의 사회진출,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구학적 문제 얽혀 어려움 가중, 특단의 조치 필요

그러면 좀 더 원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 흔한 질문이지만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게 왜 청년인가? 왜 청년들의 처지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크게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경제성장을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자리가 많은, 막 확장하던 시기의 사회경제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공공교육, 공공직업훈련이 많이 부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등록금이나 학원비 등을 모두 개인이 부담하잖아요. 저성장 시대, 즉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이 증가하는 시대가 아닌 경우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개인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인적투자인 거예요.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 이 몸값을 올리려고 하다 보면 사

적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스펙 쌓기.

- 네, 공적투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공정론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 그에 합당한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나의 정당한 몫이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저성장 시대로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전에 386 세대라든가 전 세대가 누리던 경제적 노동시장 환경과 다른 환경으로 들어갔다는 것, 여기에 기술변화와 디지털리제이션digitalization까지 층층히 개입하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모호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구구조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서 역종모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고령인구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사실은 청년세대에 던지는 함의가 되게 커요. 지금 19세~34세 청년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20% 정도가 되는데,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계산을 해 봤더니 제가 태어날 때의 동년배들 인구수에 비해서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 숫자가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아름다운 말로 바꿔주세요. ‘쪽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쪽수’가 줄어든다? 확 와 닿네요.

- 예전에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기업가랑도 친구고, 정부에 있는 분하고도 친구고, 변호사하고도 친구고, 다 대학교 동창이고 친구들이예요. 사회 전반에 아는 사람들이 짝 깔려 있는 거죠. 짝 깔려 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세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 쪽수 자체가 떨어지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투표에서 표 수도 그렇고.

- 네. 청년세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제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다. 아주 급진적으로는, 청년에게는 1인 2표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중요한 변화들은 청년세대가 이끌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세대의 경우, 경제적 기반은 약해지고 있고 인구구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갈 세대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를 만든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높이고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지방의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마련한다든가와 같이 제도로써 ‘박야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분배제도를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얻는 반대급부로 분배가 이뤄지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돌입했으니까요. 저는 기본소득도 재분배 정책이라기 보다는 분배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분배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언론과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보완재가 아니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의실현 조치다.” 복지국가 모델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 복지국가가 20세기 복지국가라는 거고, 21세기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일단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고 거기에 나온 반대급부로 살고, 이게 안됐을 때 재분배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잖아요? 예를 들어 실업보험이라든가 퇴직, 국민연금 등을 통해 재분배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은 1차 분배과정 자체가 벌써 빠졌거린다는 거죠.

분배과정 자체에서 소외돼서 직접 분배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재분배만 갖고는 곤란하겠죠?

- 그렇죠, 그게 21세기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복지국가 갖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복지국가를 진화시켜야 된다는 거

지요. 이와 관련하여 청년의 비경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경활인구라는 것은 순수한 의미로는 구직활동을 안하기로 완전히 결심한 인구집단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청년 비경활 인구의 경우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행을 해야 하니까. 가구도 구성을 하고 싶고, 숙련도 쌓고 싶고, 여러 경험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신의 삶을 구성하기 위한 이행기입니다. 그런데도 청년 비경활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적신호인 거거든요. 정말로 비경활인구가 많아도 문제고, 실제로는 비경활이 아닌데 비경활로 잡혀도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지난 4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으면 비경활로 잡히는데, 졸업 후 첫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니까 평균 10개월이 넘어요.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사실은 구직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무척 긴데, 학원을 다닌다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안 한 걸로 잡히니까 사실은 실직자로도 안 잡히고 비경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0세기 복지국가는 1차 분배는 최저임금으로 조정을 하고 근기법으로 노동환경 조정하고, 실직했을 때는 실업을 보조하고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이런 제도들이 현실을 포괄하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직자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데, 사실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인데 비경활로 잡히고 있고, 비경활로 잡히는 청년들은 실직, 실업보험에도 포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업부조로 포괄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자산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많은 청년들이 실업부조로 포괄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과 같이 일을 하면서도 '고용' 이력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상태인지 실직상태인지 매우 모호한 경우 상태로 일을 하는 경우,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로 포괄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1차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분배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분배제도와 재분배제도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일의 개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세기 복지는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계, 1차 분배 과정 자체를 손봐야

실제로 이화여대 학생들과 중앙대 학생들도 취직이 잘 안 됩니까?

- 취직이 어렵죠.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실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제자들이 다 원할치가 않았습니까? 사회진출하는 게.

-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화여대 있을 때 얘기입니다. 무척 적극적이고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동안 안 보이더니 4학년 초반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물렸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내내 생계급여 대상자였대요. 대학 와서는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항상 돈을 벌어서 써야 했다고 합니다. 핸드폰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 친구들과 연락이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 친구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은 사회복지가 너무 좋고, 공부도 더하고 싶고, 공부를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대요. 자기 적성에 맞는 것 같고 너무 의미가 있대요. 그런데 부모님과 오빠를 생각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맞대요. 오빠도 대학에 다니다가 돈을 벌어야 겠다고 판단해서 대학을 그만 뒀대요. 자기 혼자만 대학 다니는 것 자체가 부모님과 가족한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온 가족이 말렸다고 합니다. 너만은 해라. 근데 온 가족의 염원은 이 친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붙는 거였던 거예요. 자기는 답이 하나밖에 안 보인대요. 무조건 공무원 시험에 붙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으로 가족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 이것밖에는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빠는 학교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계속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거죠. 수입도 일정치 못하고 자리도 불안정한 생활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그걸 보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자기도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결국 공무원 시험에 붙으라는 애

기인거죠.

청년 내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

명문대학에 점점 집안 어려운 친구들이 못 들어오는데, 그나마 들어와서 다니던 학생조차도 배척이 될 수 있겠군요.

- 그렇죠.

얼마 전에 서울의대는 학부모의 83%인가가 9분위, 10분위라고 들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면 청년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계급, 계층 문제를 포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그게 문제인 게 청년 전체가 불안정한 건 아니거든요. 청년들 집단하고 35세부터 64세까지 비교하는 걸 분석해 봤더니 청년세대 내에서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양극화더라고요. 무척 심각합니다. 최근 들어 더 심해진 거예요. 저는 불안정 노동자 집단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청년문제를 봤는데 양극화로 인해 좋은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더 늘어났고, 중간이 훑 끼치고 나쁜 일자리나 잠재 실업에 있는 청년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이 두 개가 늘어나면 공정론, 공정성 갈등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 지대가 없고 모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이 청년층의 젠더 문제, 인천국제공항 문제 등으로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중간이 없이 양극만 있으면, 게다가 그것이 수많은 사적투자를 통해 자신들이 정당하게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할 때, 한쪽에서 내는 세금이 무조건 취약계층에게 간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갈등을 완화시키는 담론형성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더 모두에게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세개혁이라든가 다른 자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느 계층에서 뺏아서 다른 계층에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배의 몫을 올려가면서 연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최근에 저는 ‘참여소득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소득을 생각했던 건, 이것도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급여를 보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선이 54만 원이다, 아동을 키우는 것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돌봄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몇 개 카테고리를 주고, 이걸 하는 경우에 참여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방식이랑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서 유해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주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용이성, 실행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전자 방식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돌봄 노동, 시민사회활동, 녹색 활동 등을 하시는 분들부터, 사회적으로 유용한데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아서 가치가 평가절하된 것들을 발굴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1차 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 사유로 임금 받는 일을 포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기본소득의 원칙과 철학 지키기 위해

참여소득 통한 우회 필요할 수도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제 제자 중 한 명이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자기는 취직준비를 사실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할머니를 돌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소득활동을 하셔야 해서 자기가 돌본다고 해요. 이 돌봄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용한 활동이에요. 그런데 무보수잖아요. 할머니를 손주가 봐주겠다고 하는 것이 할머니를 위한 돌봄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어찌보면 할머니에게 더 유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또 여러 조건이 부과되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 그러니까 해당 활동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지요.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억대의 돈이 들었답니다. 관련된 활동가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서로서로 많이 돕는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유용한 활동을 하는 지지집단이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따로 만드느니 차라리 그 예산을 이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 사회 서비스를 확충했다,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재는 인정을 안하고 반대급부도 주어지지 않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의 가치를 인정하여, 이 활동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축적된 부를 분배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다시 말해 참여소득을 더 구체화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논란이 된, 재난지원금 때문이기도 했어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우려한 것은 소비활동촉진을 통해 경제성장의 윤활유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논리는 기본소득의 철학을 상당히 훼손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친환경적인 활동, 생태지속가능성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됐어요. 우리는 현재의 시장소득과 소비활동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넋지^{nudge}하는 방법으로 참여소득과 같은 허들이 하나 필요하다, 이 허들을 거쳐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의 일치네요. 저도 요즘 참여소득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더군요.

- 저도 처음에는 참여소득 반대했었어요.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청년들이 1차 분배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은 필요하다. 그런데 양극화, 계층 문제 관련해서 참여소득 발상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면 젠더는 어떻습니까? 청년정책하고 젠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젠더 문제도 지금 청년층 내에서 양극화된 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다음 또 경력단절이 있는 거거든요.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젊은 여성은 출산이나 결혼할 시기가 되면 퇴사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 뽑지 않거나 아니면 뽑아서도 대체가능한 직무를 주거나 아니면 훈련에 적게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했는데 나가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하셨지요?

청년정책에서 우리가 일반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기초자산 얘기했고, 그러나 계층화,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참여소득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사적인 자기 투자에 기반한 스펙 쌓기 무한경쟁, 차별 정당화하는 공정성 논리에 포획

- 계층문제 때문에 참여소득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아직은 호혜성 원칙이 너무 강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처분소득이 느는 것이 반드시 생태 친화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넋지하는 기제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평가절하됐지만 매우 중요한 활동이 돌봄 영역인데 여기를 거의 다 여성이 해 왔던 거죠.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만으로도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여성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성들 중에서도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돌봄으로 물러나라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돌봄이 재평가되어 숭고하고 유용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평가 혹은 관점의 전환에서 돌봄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됩니다. 돌봄은 남성도 할 수 있고, 여성도 할 수 있



사진 © 양희석

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돌봄은 여자만 하는 것이고 돌봄에 대한 기존의 낮은 평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지는 일만 잘 나가는 일이 아니고, 이걸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담 스미스 밥상은 누가 차렸냐?’ 밥상 차리는 일은 드러나지 않고, 가치부여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매우 가치 있었던 일이고, 특히 지금 시기에 함의가 큰 것 같아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돌봄 노동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꼭 육아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에 대한 돌봄 노동도 이걸 다 일자리 창출, 다시 말해 규격화된 일자리를 통해 돌봄 노동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공공영역에서 해 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치 부여를 달리게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노동이 우리 사회의 부를 축적하는 데 공동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공유부를 이들에게도 똑같이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논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우리 친정 부모님이 경기도에 사시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게 두 분이 따로따로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엄마도 따로 받았어?’라고 여쭙었더니, ‘당연하지’, 이러면서 ‘나도 내 몫은 따로 받아야 돼’ 그러시더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니네 아빠보다 못하나?’ 그러시더라고.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인정받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실험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청년기본소득 설문결과도 얘기를 들어 보면 자존감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요. 일단 참여소득을 준다고 했을 때는 돌봄 노동부터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젠더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함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공적·제도적 인정, 노동과 젠더 문제 완화 가능성 높여

그런데 기본소득을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 저는 불안정 노동이나 비정규직 노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박사학위 끝나면서 그러면 복지제도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는가,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을 연구하고 있는 찰나에 가이 스탠딩을 만났어요. 가이 스탠딩이 옥스퍼드에 상당히 자주 왔는데, 그때 자주 접했죠. 식사도 여러 번 하고. 제 페이퍼도 많이 읽어 주시고. 그때 프리캐리어트(precariat)라는 단어로 교집합이 있었던 거고,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진짜 신선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한국에 오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쓰신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님도 다른 맥락이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매력이라는 정도로 생각했지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4~5년간을 불안정 노동자를 주로 연구를 하니까 지금 복지제도랑 노동시장 변화랑 부정합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을 생각하게 되어서 기본소득

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공부를 하면서 대안적 소득보완 정책으로는 기본소득의 철학이 충분히 담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은 대안적 소득보장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부 분배정책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시장을 더 깊게 이해할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적 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 자체가 대안적 소득보장 제도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능도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의 철학 자체는 재분배 복지제도가 아니라 1차 분배에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는 새로운 분배제도라는 생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활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조직, 단체, 이런 데는 일부러 관여를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치에는 당연히 관심이 많죠. 우리의 삶은 정치적인 것이지만 정당정치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정당정치랑 비슷해질 수 있는 건 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당 말고 다른 활동 단체들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한 피하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단체 참여가 저의 학문적, 과학적 연구 결과를 수립하는 데서 어떤 장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편파적이지 않으려고요?

- 편파적이라기보다,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면서 제 생각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로움을 유지하고 싶는데 조금이라도 저의 생각의 자유로움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문적 자유로움과 그 결과들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기 위해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학자시니까 앞으로 어떤 것들을 규명해 보고 싶다, 필생의 과제여도 좋고, 중단기적인 것도 좋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책 작업하는 게 있는데요. ‘액화노동’이라는 주제로 작성을 해 보고 있어요.

생소하네요. 액화노동? 잘 모르겠네요.

- 제가 만든 단어예요. 멜팅 레이버(melting labour)라고 이름을 짓고 개념화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최저임금제, 근기법, 노조법 등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기존의 노동 혹은 노동 형태, 제 표현방식대로 하자면 ‘고체 노동(solid labour)’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형태나 의미, 가치규정 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과 이런 제도적 노력들 사이에 부정합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선 그동안 노동이 무엇이냐고 할 때, 1차적인 의미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것들만 노동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유용해도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노동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돌봄 노동이 그 예입니다. 돌봄 노동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가부장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봄 노동은 현재의 제도들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돌봄 노동과 기존 제도들 사이에는 부정합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화로 인해 작업공간의 경우 사적 공간, 회사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호하고 노동 시간과 아닌 시간 사이의 경계도 그러합니다. 저는 노동의 영역에서 경계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보고자 액화노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액화노동과 노동 주권의 교차가 일어날 때 어디서 정합성과 부정합성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의 미래에서 인간다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단어들을 사용하면 액화노동의 시대에 노동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복지국가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또한 이것을 생태주의와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속가능한 노동주권,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주권 확보 노력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동 형태 변하는데 제도 변화 못 미쳐 양자간 부정합 노정, 그물로 물 낚는 격

다 이해는 못했는데, 액화노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



사진 © 양희석

가 갑니다.

- 지금의 제도는 그물과 같습니다. 의미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고체노동은 보호가 되는데, 점증하고 있는 경계가 모호한 현재의 여러 노동, 즉 물처럼 액화된 노동은 잡을 수가 없어서 보호되지 않는, 허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조금 더 개념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태주의는 제가 10년 후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 당장 해도 부족할 만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주의와 지속가능한 지구와 노동주권을 지켜내는 복지국가 설계, 이것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관심이 갑니다. 앞으로의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스트레스는 청조위를 맡게 되면서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그게 사실 제일 슬퍼요.

일단 하실 때는 하셔야죠.

- 1년만 더 자원봉사하고, 무임금으로.

다시금 쇼킹합니다. 장관급 무임 노동.

- 그거 써주세요. 다들 제가 자동차도 나오는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기사 딸리고. 나중에는 연금 나오고.

- 전혀 아닙니다.

별로 안 부럽네요.

- 전혀 부러워하실 것 없어요. 회의비는 나오죠. 3시간 해도 15만 원 정도, 다른 건 없습니다.

장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통과를 앞두고 살바싸움을 이어가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관해 이승윤 교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지면관계상 옮기지 못합니다.

훨훨 새떼가

신경림

시인

훨훨 새떼가 날아오른다
 멀리 오리온자리까지 날고 싶었던
 내 어린 시절의 꿈들이 날아오른다
 어두운 구석방에서 쥐어보던 힘없는
 우리들 젊은 날의 빈 주먹이 날아오른다
 바른 세상 만들겠다던 고른 세상 만들겠다던
 우리들 철없던 날의 맹세를 비웃으면서
 가마우지 떼가 날아오른다 비오리 떼가 날아오른다
 끼룩끼룩 나를 놀리면서 자꾸만 놀리면서
 모든 꿈이 저녁 하늘 노을보다도 헛되었다고
 꼭두각시 춤이었다고 모두가 헛되었다고 달래면서
 훨훨 새떼가 날아오른다
 함께 가자고 물병자리까지 함께 가자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 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처럼 가벼워진 나를 등에 오르라며
 함께 가자고 사자자리까지 함께 가자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미련이 가없어
 엉거주춤 땅에서 발을 못 떼는 나를 울면서
 흰뺨검둥오리가 날아 오른다 왜가리가 날아오른다
 훨훨 새떼가 날아오른다

비대면 시대의 밤은 길어

신경림
시인

큰부리새자리로 여행을 떠나야지
울란바토르도 제주도도 갈 수 없는
비대면 시대의 밤.
별과 별 사이를 오가다가
사람 사는 별 만나면 거기 짐을 풀고.
작은 짐승이 되어, 하늘 높이 붙은
내 땅을 멀리 올려다보면서
나는 조금은 서러울 거야.
햇별이 잘 드는 냇가를 찾아가
내 속 깊은 데 오래 갇혀 딱딱해진
내장들을 꺼내 빨래 널 듯 널 거야,
고집과 편견 따위로 돌이 돼버린 지 오랜 것들.
그것들 나뭇잎처럼 가벼워지면
주섬주섬 챙겨 넣고, 별자리 지도
달랑 한 장 들고 돌아와야지,
비대면 시대의 여행을 끝내고.
내 속의 것들 돌처럼 다시 굳겠지만.

난기류

정세랑
소설가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어마어마한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다. 태풍 한가운데라 다른 비행기는 다 취소되었는데 잠시 잠잠할 때에 무리해서 날아오른 비행기였다. 그날 하루 종일 유일하게 이륙한 것이었고, 착륙할 때쯤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었다. 한 시간이 좀 넘는 비행이 내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좌석에서 엉덩이가 뜨려고 해서 안전벨트를 꼭 조일 정도였고,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울었다. 착륙 후 기장의 방송이 나올 때 어째선지 다들 박수를 쳤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두 달 내내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꿔다. 땅에 추락할 때도 있었고 바다에 추락할 때도 있었다. 한 번 타본 적 없는 탈출용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실제로 추락한다면 아마 충격으로 그대로 죽을 텐데, 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매일 그런 꿈을 꾸다보니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다.

피곤에 겨운 채로 연말의 동창 모임에 나갔다. 다들 돌아가며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부모님이 주말 농장을 시작해서 채소를 얻어 먹는데 상추는 쓰고 무는 퍼석하고 가지는 씨앗만 가득해서 전문 농업인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고 했고, 회사에 버젓이 있는 복지 혜택을 이용할 때마다 생색을 내는 직장 상사 흉을 보며 진저리를 쳤고, 학생들을 때리던 교사가 교장이 되었다며 욕을 했다. 내 차례에 뭐라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악몽에 대해 가벼운 푸념을 늘어놓았다.

“난기류 정도로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아.”

항공 승무원인 친구가 웃었다. 그 자리에 승무원 한 사람과 정비사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내가 아주 철저하게 정비하니까, 믿고 타도 돼.”

정비사 친구의 그 말은 꼭 부적 같았다. 이후 몇 년 동안, 비행기를 탈 때마다 동창들을 떠올렸다. 내 친구가 들여다보는 비행기는 안전해,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게 직업인 친구도 있는데 가벼운 난기류에 두려워하는 것은 부끄러운 엄살이야……. 두려움도 사적인 것이니 우정을 용해제 삼아 녹여도 될 것 같았다. 어떤 안정제보다 지속적인 효능이 있어서 이제는 문제 없다고 여겼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왔다. 화상 회의로 그럭저럭 일할 수 있는 분야도 있었지만 현장에 가지 않고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분야

도 많았다. 위험과 2주 격리를 각오하고 출장을 결정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전체가 보류되기도 했다. 손해와 난항에 대한 토로가 동창들과의 단체 메시저에 이어졌는데, 항공 분야의 친구들이 차례로 무급 휴직과 해고를 겪게 되자 다들 할 말이 없어 조용해졌다. 비행기를 타는 게 무서웠던 것이 비행의 원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비정함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는 걸 그런 식으로 곱씹게 되었다. 아기 사진,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이 조금 올라오다가 그마저도 끊겼다.

지병이 있는 부모님과 만나는 것을 피하다가, 방역 단계가 잠깐 내려갔을 때 본가를 찾았다. 대형 서점에서 승무원 친구를 마주쳤을 때 놀라지 않았다. 친구의 본가도 한 동네에서 20년을 머물렀으니 대단한 우연은 아니었다. 친구는 넘겨보던 책을 슬쩍 보여주며 머쓱하게 웃었다. 미래 전망과 유망 직종에 대한 책이었다.

“막막해 죽겠어. 그렇지만 주변에 더 아슬아슬한 사람이 많아서…….”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로 봐온 것도 참혹했지만 친구가 더 많은 걸 목격했을 것이었다.

“미리 공부 좀 해둘 걸 그랬어, 미련하게 살았나봐.”

바로 옆 주식 책을 집어든 채,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오른 항공사 주식 이야기를 하며 묘한 얼굴을 하던 친구는 정비사 친구의 소식도 전해주었다. 두 사람은 따로 자주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복직이 불투명해지자 이직에 유용하다는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다. 비행기를 고치던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고장 난 것 같아 한숨이 나왔고, 친구 앞에서 한숨을 쉬기 싫어 어금니로 눌렀다.

“다음 모임에서 길게 만나.”

말하고 나서야 한동안 모임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알았다.

이 시기가 끝이 나긴 나는지, 끝나면 남을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어 진이 빠졌다. 다시 비행기가 예전처럼 날게 되어도 베테랑 정비사와 승무원은 교체된 후일 것이다. 난기류에 대한 악몽이 계속될지 전혀 다른 악몽을 꾸게 될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마스크 안에서 숨이 가빠졌다. 단단한 것들에는 녹이 슬고 거품으로 된 것들은 터질 때까지 부풀어오를 텐데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거품의 표면에 아는 얼굴들이 비친 것만 같았다.

그분이 오셨다고?

김경욱
소설가

사반세기 넘게 소설가로 살다 보니 별 소설 같은 일도 다 겪는다. 나도 모르는 신작 발표 사실을 동료 작가에게 듣게 될 줄이야.

- 이번 소설은 실화 같던데? 진짜 이사했어? 나도 이사하면 그분이 오시려나.

같은 해 데뷔한 인연으로 문단 말석에서부터 함께 잔뼈가 굵은 소설가의 카톡. 간만의 기별이었다. 출간 기념으로 대낮부터 한잔하다 일출을 보자며 장거리 택시를 잡던 호시절은 지난 세기 얘기고, 출간은 커녕 지면에서도 피차 이름 구경 못 한지 한참 됐다.

웬 잠꼬대인가 했다. 나로 말하면 4년 째 같은 집 전세살이에 엇비슷한 기간만큼 개점휴업(원고 청탁이 없어 글을 못 쓰는 건지 글을 못 써 청탁이 안 오는 건지 몰라도) 상태였다. 오늘은 한 줄이라도 쓰자며 노트북을 열었다가 어느 순간 나무위키 각주를 열심히 읽고 있거나 문틀에 끼우는 턱걸이봉 가격비교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다. 카톡 몇 자 적는 데도 영 글발이 안 풀려 그냥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절필하는 한이 있어도 소설가 소설은 절대 안 쓴다더니? 진작 좀 쓰지 그랬어.”

“소설가 소설? 내가?”

“멋쩍으면 술이나 한잔 사.”

전화를 끊자마자 내 단편이 실렸다는 잡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뜯지도 않고 쌓아둔 우편물 더미에서 나온 『대산문화』 최신호. ‘창작의 샘’ 코너를 장식한 소설 두 편 중 하나에는 분명 내 이름 석 자가 있었다. 동명이인인가 싶었지만 본문 첫머리의 작가 소개글조차 내 것이었다.

‘인디언들이 사냥감에게 그랬듯 원고지가 되어준 나무들에게 이 말부터 전한다. 미안하고 고맙다.’

이력서 같은 프로필 대신 실는 나만의 자기소개였다. 한낮에도 어둑어둑한 뉴욕의 한 스튜디오에서 고양이 한 마리와 체온을 나누며 글을 쓰고 있다는 식의 미국 작가 흥내라고 매도하면 곤란하다. ‘이 책을 위해 베어진 나무가 불쌍하다’ 같은 리뷰가 본인 책 밑에 달린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하리라. 어쨌든 내가 쓴 소설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

“글이 죽어라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센터 창작워크숍이나 출간 기념 북토크 같은 자리에서 어김없이 받는 질문이다. 처음 몇 번은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지만 언제부턴가 나만의 모범답안이 생겼다.

“집을 바꾸세요. 저는 2년마다 집을 바꿉니다. 전세를 재계약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갑자기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물론 지어낸 얘기다. 영감 타령은 아마추어나 하는 짓, 프로페셔널은 그냥 책상 앞으로 가는 법 아닌가. 꼭 책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부엌 식탁이든 무릎 위든 노트북을 올려놓을 수만 있으면 어떤 글이라도 쓸 수 있다. 그런 내게 단 한 줄, 단 한 단어도 써지지 않는 때가 올 줄 상상이나 했겠는가.

*

몇 년째 글 한 줄 못 쓰는 소설가가 주인공이라니. 도입부를 읽다 잡지를 덮고 말았다. 문화센터나 북토크에서 주인공이 떠든 얘기도 실제로 내가 한 말이었다. 질 나쁜 장난도 유분수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내 창작수업을 들었던 작가지망생일까. 이사했는데도 여전히 죽어라 안 써진다고 항의한 수강생은 없었는데.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처럼 온몸이 떨렸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글 한 줄 못 쓰고 있는 소설가 얘기만 아니었다면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까.

그분이 오신다.

노골적인 제목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리듬감이라곤 없이 서걱거리는 문장은 또 어떤가. 멀쩡한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도둑맞다니. 어느새 나는 잡지 맨 뒷장에 적힌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투고작들 중에 특별히 선정해 실어드린 건데.”

편집자도 황당하다는 투였다.

“제가 투고했다고요?”

“메일 보내셨잖아요. 오랜만에 그분이 오셨으니 독자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쓴 메일도 아니었지만 구걸이나 다름없는 소리에 귀밀이 뿔뿔해졌다. 크게 주목받은 기억은 없지만 아무도 내 원고를 찾지 않을 땐 깨끗이 접는다며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필름이 끊긴 간밤의 행적을 떠올리며 애쓸 때처럼. 내 이름을 훔친 자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 메일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 메일인데 함부로……”

“제 메일이라면서요.”

“어, 그러네요. 맞다. 작가님께서 보낸 메일함을 확인해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냈으면 이런 전화도 안 하죠.”

“그런가요.”

편집자도 나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눈치였다.

휴대폰 캡처 화면을 확대해 보낸 사람부터 확인했다. 익숙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몇 년 전까지 쓰다 해 지한 계정이었다. 누가 어떻게 그 계정을? 그리고 보니 창작숙제도 그 계정으로 받았다. 내게 양심을 품은 누군가 그새 꽤한 걸까. 편집자가 들려준 대목은 그나마 점잖은 편이었다.

‘한국문학 명예의 전당과 같은 귀지에 제 글이 실린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발가벗고 들이대는 문장에 당혹감을 넘어 헛웃음이 비어져 나왔다.

입술을 깨물며 더는 내 것이 아닌 계정으로 메일을 보냈다. 너는 누구냐. 왜 그랬느냐. 혹시 내 창작수업을 들은 적이 있느냐. 냉철하면서도 피가 끓는 문장, 담백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 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 썼다. 오리지널 작가의 문장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겨우 여섯 줄인데 육백 쪽짜리 장편이라도 탈고한 것처럼 기진했다. 무시하는 것인지 겁을 먹은 것인지 답장은 오지 않았다. 십 분도 안 돼 수신한 것으로 나오는데도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설마 당사자가 모르고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막상 진짜에게 연락이 오니 마비됐던 현실감이 돌아왔다?

나는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며 두 번째 메일을 보냈다.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아니라 무를 수 없는 실전임을 일깨워줬지만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다. 청탁 끊긴 작가라고, 무늬만 소설가인 주제에 소설 창작책이나 가르친다고 가짜 나머지 나를 무시하는 것인가. 가만있으면 꼴이 더 우스워질 터였다. 예고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는 고등학교 동기에게 연락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겠네.”

머릿속을 맴돌던 말이 법조인 입에서 나오니 몇 배는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원고료는 못받은 거지? 사기죄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하고 배타적인 이익이 실현되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야.”

동기가 벌써 고소장이라도 써내려가듯 말했다. 의료계, 법조계에 아는 사람 하나쯤 있어야 된단던 옛 어른들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적어도 계좌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이없게도 원고료마저 내 통장으로 들어와 있었다. 잡지를 내는 재단명이 틀림없었다. 그냥 내 글이 맞다고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만큼 쓸쓸한 액수였다.

“네가 써놓고 깜박한 거 아냐? 왜, 예술가들은 잘 그러잖아? 신이시여, 이것이 진정 내가 만든 작품입니

까?”

동기마저 농담 같지 않은 농담을 하니 억울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편집자에게 전화해 원고료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원고 말미에 적힌 계좌로 정상 지급했다며 곤혹스러워하기에 잡지 맨 뒷장에서 본 정기구독 계좌로 이체했다. 잔고는 원래대로 돌려놓았지만 편집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계속 귓가에 남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작가님 이번 작품 재미있게 읽었다는 평이 심심찮게 들려오던 참인데.”

문제의 소설을 다시 펼쳐든 이유가 꼭 그 얘기 때문은 아니었다. 사기죄가 어렵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이라도 물어야 했다. 도입부만 대충 훑어도 견적이 나오는데 재미있게 읽었다는 평이 여기저기서? 이래서 한국문학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소리를 듣지. 내용증명을 쓰는 심정으로 나는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기 시작했다.

소설이 안 써지면 이사를 하라고 순진한 작가 지망생들에게 사기를 치던 소설가가 어느 날 갑자기 글을 한 줄도 못 쓰게 된다. 현실이 된 거짓말. 놀랄 것도 없는 발상이었다. 자기가 지어낸 방법에 진짜로 매달리게 되는 전개겠지. 아니나 다를까 우연찮게 이사를 할 시점이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당일부터 거짓말처럼 글이 술술 풀리면 분량이 안 나오니 장애물이 등장해야지. 역시나 불안하게 울린 아내의 전화.

“홍사가 있던 집이래.”

소름이 돋았다. 홍사. 정확히 예측대로였다. 마치 내가 쓴 소설을 복기하는 것처럼. 뒤도 뻘뻘했다. 누가 그런 천벌 받을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며 펄쩍 뛰는 집주인. 쉬쉬하는 동네 사람들. 찝찝해하는 아내. 홍사라는 소리에 오히려 잠들었던 상상력이 깨어나는 소설가. 사실 이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순간부터 정해진 수순이나 마찬가지로여서 소설을 마저 읽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내가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머릿속이 분주할 뿐.

물론 내 작품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다. 설명적이고 논리적인 문체부터 내 스타일과 거리가 멀었다. 소설이 아니라 논문을 읽는 느낌이었을까. 시적인 문장을 위해 소설은 멀리하고 시집만 탐독하는 것도 모자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이 즐겨들은 클래식’ 넘버들만 무한반복재생하며 자판을 두드려온 나였다. 캐릭터도 올드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이 써지지 않는 소설가는 문학박물관 맨 안쪽에 전시될 화석 아닌가. 특히 홍사라는 소리에 점집을 찾는 아내의 모습은 그간 한국문학이 여성 캐릭터에 덧씌워온 부정적 선입견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었다. 작중인물을 묘사할 때 생물학적 성별은커녕 한 명의 호모사피엔스만 떠올리는 내 손끝에서 나올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결말이 결정적이었다. 최초 발설자(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계약을 농친 경쟁 부동산중개업자였다)가 착각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도 이사 날보다 앞서 빈집을 찾은 소설가. 소설 쓰는 법을 잊어버린 소설가만 홍사라는 지푸라기를 붙든 채, 자신도 모르게 영감의 원천이 돼버린 정체 모를 불길한 기운 속에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홍사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끝까지 따라 읽은 독자를 우롱하는 결말이

라니. 한국 소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열린 결말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었다. 불확실성은 실존의 원형적 조건이라는 등, 모호함이야말로 현대예술의 본질이라는 등 번드르르한 주장으로 아무리 미화돼도 작가적 책무의 방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30년 가까이 소설을 써오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열린 결말이라는 문학적 MSG를 동원하지 않았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담백하게 승부하고 정정당당하게 심판을 받았다. 흥내 낼 거면 제대로 할 것이지. 다 떠나 작가 본인이 제 새끼 아니라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그나저나 내용증명은 어디로 보내지?”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작가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런 카피가 아깝지 않을, 사반세기 넘도록 갈고닦은 문학적 역량을 남김없이 쏟아 부어 완성한 초안을 훑어본 동기가 깜박했다는 투로 물었다. 뒤미처 확인해 보니 편집부에서 원고와 함께 받은 주소마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수강생들한테 집 주소까지 공개했었다. 자비로 낸 것이 분명한 책을 보내겠다며 주소를 물어온 몇몇의 얼굴이 스쳐갔다. 누구일까? 무선자판 두드리는 시대에 웬 필사냐고 면박 준 수강생들 중 하나일까? 육필 원고라면 필적대조라도 해볼 텐데. 유일한 단서인 메일계정조차 본사가 해외라 추적이 불가능할 터였다.

여기까지가 SNS는 창작의 휘방꾼이라 여기던 내가 난생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된 곡절이다. 일종의 공개수배랄까. 나를 사칭해 함량미달의 소설을 발표한 장본인은 하루 빨리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권한다. 눈 밝은 독자들은 주변에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으면 주저 말고 제보 바란다.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란 과연 무엇인가 운운하기엔 철없는 장난질의 폐해가 결코 작지 않다.

소설대로 이사까지 했는데도 ‘그분’은 감감무소식. 나는 여전히 한 줄도 못 쓰고 있다.

* 김경욱, 「그분이 오신다」, 『대산문화』 2020년 가을호.

봉인된 시간.3

신경숙

소설가

새는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오년 전이었다면 이집 마당과 이웃집 사이의 낮은 담 바깥에 서 있던 세 그루의 후박나무 위로 날아가서 쉬었을 텐데....지금 그 나무는 없습니다. 이 섬에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는 후박나무와 녹나무와 동백과 삼나무입니다. 특히 이 마을은 더욱 그런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후박나무나 녹나무 혹은 동백이 몇 그루씩은 심어져 있습니다. 하긴 이 섬에는 일부러 찾아 나서지 않아도 어디에나 후박나무 숲, 녹나무 숲, 동백 숲...그리고 삼나무 숲이 있지요. 제주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 마을로 들어오다 보면 양쪽으로 높다랗게 삼나무들이 서 있는 길이 10키로는 이어지는 곳을 지나오게 되는데 그 길을 처음 마주쳤을 때 갑자기 옷매무새가 여며졌습니다. 울창한 삼나무들이 쪽 늘어서 있는 모습이 나무 하나하나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만큼 장엄했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지나게 되면 하던 말을 멈추게 되고 차창바깥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 섬은 바람의 섬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며칠이고 불어대지요. 키가 큰 삼나무는그 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으로 심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삼나무가 양편으로 펼쳐진 길에 들어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던 바람을 삼나무가 막아주고 있다는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오년 전에 이집에서 머물렀을 때 마당과 이웃집 사이의 낮은 담 뒤로 아름드리 후박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삼나무가 마을 바깥쪽의 도로변에 있다면 후박나무는 대부분 마을 안쪽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그 집을 에워싸듯 아름드리 후박나무가 자라고 있지요. 이집은 집안이 아니라 낮은 담 바깥쪽으로 후박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들의 잎새가 후덕해서 오후가 되면 앞뒤로 그 그늘이 늘어지면서 그림자가 출렁이곤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봐도 담 밖의 땅에, 이집에서 봐도 담 밖의 땅에 심어져 있던 후박나무. 양쪽 집 담 밖의 땅은 누구 소유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아침에 그 후박나무 세 그루의 허리께에 나무껍질이 벗겨

저 있는 걸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이 어찌나 컸는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었지요. 처음엔 그 자국이나 무껍질을 벗겨내서 생긴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무에 무엇을 둘러놓은 줄 알았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세 그루의 후박나무들의 같은 위치의 껍질들을 참 정교하게도 벗겨놔서 무엇인데 저렇게 선까지 맞춰서 묶어놓았나 했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슬리퍼를 끌고 다가가서 봤더니 나무 등치의 허리께라고 생각되는 곳 위 아래를 육십 센치 정도쯤 껍질을 벗겨놓은 것이었어요. 가까이 가니 생나무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도대체 왜? 사실을 확인하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잘못 보았나 했습니다. 전 날까지만 해도 멀쩡한 모습이었거든요.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름드리 후박나무 세 그루는 둥근 테를 두른 것처럼 껍질이 벗겨져 있었어요. 세 그루 모두 키가 비슷했는데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모양으로 껍질을 벗겨내서 멀리서 보면 원래 나무가 그런 모양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유정씨에게서 누군가 나무 밑둥 껍질을 벗겨놓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껍질에 혈관 같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나무는 수분을 그 혈관으로 빨아올려서 나무꼭대기까지 실어 나른다고 했습니다. 수분을 조달하지 못하게 나무등치 허리께의 나무껍질을 벗겨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섬에서는 큰 나무를 부러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 밑둥 껍질을 벗겨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분이 빠진 나무가 가벼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러뜨리는 거라고..... 왜 저렇게 다 큰 나무를 부러뜨리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땅 주인이 하는 일이라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유정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땅주인이 이웃집이나고 했더니 그렇더군요. 이웃집인데 왜 후박나무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느냐 물으니 유정씨네가 이 집을 구해서 고칠 때부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웃집에서 몇 번이나 민원을 넣는 통에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후박나무와 마당 사이에 낮은 담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 살던 사람은 이웃집과 수시로 후박나무를 사이에 두고 왕래를 했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유정씨가 이 섬으로 들어와 살기 위해 이 집을 구하고 오래된 집을 고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웃집 사람의 텃세가 시작되었는데 처음엔 어쩌든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어떻게 해도 이웃집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노력할수록 더욱 관계가 나빠졌다고요. 이웃집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은 후박나무는 이웃집의 조상이 심은 것이니 후박나무 뒤로 담을 쌓으라고 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가 했는데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집을 고치는 마지막 작업으로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심란한 얼굴로 유정씨를 바라보자 유정씨는 타지인이 이 섬으로 들어와 겪는 이런 일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적대감이 있는데 살다가 보면 이해하게 된다고도 하더군요. 살다가 보면 이해되는 일이라니. 유정씨는 설명하기가 복잡한 듯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 이웃집 사람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에서 후박나무 쪽으로 창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창이 열리는 일도 없었지요. 이웃집 사람이 아름드리 후박나무를 부러뜨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는 알고 싶었지만 만날 일이 없으니 알 도리도 없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잠이 깨어 어둠 속에서 후박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물조리개에 물을 받아 낮은 담을 넘어가 후박나무에 물을 쏟아붓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름드리 후박나무에게서 수분이 빠지는 데는 일 년쯤 걸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집에서 떠난 일

년 후에 그 후박나무는 이웃집 사람에 의해서 부러졌을까요? 껍질이 벗겨진 채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새와 고양이가 어느 날인가는 후박나무를 사이에 두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새는 까치 같았습니다. 짹짹, 소리를 냈으니까요. 새소리가 커서 나가보니 후박나무 꼭대기에 까치와 고양이가 나뭇가지를 사이에 두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고양이를 피하는 것인지 놀러먹는 것인지 날아가지는 않고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까치를 쫓아가는 고양이 사이로 퍼지던 햇살. 까치는 까치 소리를 내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후박나무 위에서 노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담아놓은 것이 제 핸드폰에 들어 있을 겁니다. 눈 속에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은 나날을 보내는 중에도 이집이 그리워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면 후박나무위에서 까치와 고양이가 놀던 동영상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까치는 짹 짹거리며 다른 나뭇가지로 올라가고 등과 발목이 흰 노란 털의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내며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재보느라 발을 동동 거리던 시간. 까치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도무지 고양이가 그 높은 후박나뭇가지 위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후박나무 위의 까치와 고양이의 장난질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같지가 않았지요.

제가 다시 그 동영상을 찾아보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선생님께도 보내드릴게요.

이웃집 사람은 그 아름드리 후박나무를 쓰러뜨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듯합니다. 한그루도 아닌 세 그루의 아름드리 후박나무가 사라진 자리는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나무가 없으니 이웃집이 더 환히 보일 뿐입니다. 거기에 후박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몇몇이나 기억할는지요. 제가 오년 전에 황망한 마음으로 가방을 꾸려 이 집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일별했던 것도 그 후박나무입니다. 안으로는 날마다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었겠지만 겉에서 보기엔 허리께에 나무껍질이 벗겨진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허둥지둥 짐을 꾸려나가면서 후박나무쪽을 응시하며 죽지 마,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보지, 했던 것도 같습니다. 어쩌면 후박나무에게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속삭인 말인지도 모르지요.

통통 부은 눈으로 후박나무가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정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 답답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처에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생겼거든요. 혹시 자전거를 탈 마음이 일어나면 함께 빌리러 가게 연락주세요.

유정씨의 문자 마지막에 통통한 흰 고양이가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는 이모티콘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정씨는 제게 고사리를 뜯으러 가자고 하고, 이것 좀 보세요,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인적이 끊긴 거리에 나타난 퓨마 사진을 보내더니 이제는 자전거를 타러가자....고 하는군요. 제가 어지간히 유정씨로 하여금 신경 쓰이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대면 시절이라 제가 이집에 도착했을 때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던 유정씨가 저를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짚어졌습니다. 유정씨가 이 섬으로 들

어운 지는 벌써 오년은 넘었을 테니 이제 이 섬사람들은 유정씨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곳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고 늘 홀로 있는 듯하던 유정씨 생각에 저는 몸을 일으켜서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다가 얼굴을 들어 이집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어서 눈꺼풀이 사라진 제 눈동자에 붉은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단정하게 얹어져 있는 물바가지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그고 눈을 몇 번 껌벅거렸습니다. 눈이 아플 때마다 제가 하는 버릇입니다. 차가운 물이 눈동자에 닿는 이 느낌을 저는 좋아했습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나면 맨 먼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은 후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눈을 껌벅거리는 게 하루의 시작일 때도 있었지요. 그렇게 눈을 씻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눈이 맑아지는 것 같고 기분도 상쾌했어요. 그러다가 도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 후부터 물을 받아 눈을 씻는 일을 그만두었지요. 오래 해오던 습관이라 하루아침에 멈추게 되진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잠자리에서 나오면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얼굴을 물 속에 담그려다가 아...하고는 받아놓은 물을 다시 빼곤 했지요. 그런데 방금 저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얼굴을 물 속에 담그고 눈을 껌벅거렸군요. 거울 속의 제 눈은 여전히 붉은기가 퍼져 있습니다. 제가 유정씨가 있는 여기로 돌아온 것은 저 스스로 여기를 황망하게 떠났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께 제가 이 집을 허둥지둥 떠날 수밖에 없었던 때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직 그 어떤 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이집의 유정씨가 내준 저 책상에 앉아 선생님께 메일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캐리어를 들여놓지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소파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나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폭식을 하고...그리고 오늘이군요. 세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유정씨에게 자전거 빌리러 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정씨가 아랫집 돌담 위에 올려져 있는 전복껍질을 바라보고 서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나가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짧은 커트머리와 큰 키만으로도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유정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년 만에 만나는 데도 유정씨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약간 긴 얼굴에 단정하게 자리잡은 인중 옆의 작은 점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유정씨가 말할 때마다 점도 따라 움직이곤 하지요. 움직이는 점이 귀여워서 유정씨가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유정씨의 얼굴을 뻗히 바라보며 웃곤 했거든요. 흰 셔츠 위에 걸치고 있는 회색빛 가디건도 오년 전에 입던 옷이었어요, 긴 주름치마도요. 오년 만에 만나는 데도 그 공백을 느낄 수 없이 유정씨의 모습이 그대로인 게 안심이 되었어요.

- 그 사이 동네가 많이 변했어요.

분명히 내 통통 부은 얼굴과 붉은 눈을 살폈을 텐데도 유정씨는 그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동네가 많이 변했다고 첫말을 꺼냈습니다.

- 전에는 산보를 그렇게 자주 하더니...

유정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 이번엔 집 바깥으로 나와 보지도 않느냐고 묻고 싶은 것을 눌러 참는

듯했습니다. 나는 아랫집 마당의 후박나무 밑을 가리키며 술병이 하나도 없네요? 했습니다. 오년 만에 유정씨를 만나서 건넌 첫마디가 이 말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후박나무 아래서 술을 마시던 아랫집 남자. 술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째로 입에 대고서 마시던 아저씨의 안부를 묻는 것을 유정씨가 모를 리가 없지요. 제가 바라보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유정씨는 돌아가셨어요, 이태 전예요, 했습니다. 결국 술을 마시다가 저 나무 아래에서요, 라고요. 오년의 세월이 그냥 흐른 것은 아니군요. 그는 늘 아침부터 술을 마셔서 대체 그의 하루는 어떤 것일까, 가끔 궁금했었지요. 술에 취하면 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섬사람들의 언어로 이루어진 노래를 흥얼거리던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군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가락이 처절하고 위험하게까지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하던 그 노랫소리도 이제 이 지상에 서는 들을 수가 없겠군요.

유정씨와 나란히 서서 골목들 빠져나오는데 유정씨가 나중이야 알았는데요, 작은 목소리로 혼자 말하듯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가족이 4.3 때 모두 학살당했다고 해요. 이 마을과 저 아래 종달리라고...우리 전에 지미봉에 오르느라고 함께 가본 마을, 그 마을 이름이 종달리인데, 여기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때 가장 많이 피해를 당했다고..... 그때 저 집도 가족이 모두 몰살당하고 그 아저씨 혼자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했습니다. 죽은 자의 과거를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는군요. 나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후박나무는 여전히 너그러워 보이는 잎새를 달고 바람에 흔들리고 낮은 돌담 위에 올려진 소라와 전복껍데기가 희끄무레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코로나19 이후 보게 된 ‘그 꽃’과

기본소득의 마음

류보선

문학평론가,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1.

‘평범의 악마성’과 ‘안 하는 편을 택’할 권리;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자>의 경우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자>를 봤다. 꽤 오랫동안 앓았고 그렇지 않아도
막연하던 길을 아예 잃었다.

처음 제목을 접하는 순간 되도록 보지 말자, 했었다. 요즘은 웬일인지 마음이
아프면 그만큼 온몸이 아파 오는 터다. 파스칼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영화는 보지
않는 편이 마음과 몸의 안위와 고요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였다. 제목대로 ‘젊은이의
빛나는 순간’이 펼쳐진다면 그 교훈식 설정 때문에 속이 끓어오를 정도로 짜증이
일 게 뻔했다. 그런데 만약 이 영화가 많은 문제작이 그러하듯 아이러니식 명명을
한 거라면 그때 정말 명치가 아릴 정도로 숨이 막혀올 거였다. 제목 자체가 이렇게
대놓고 <젊은이의 양자>이니 그 실제 내용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참담할 것인가.

영화가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어도 반어적 내용이어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느 경우이고 간에 심신이 황폐해질 거였다.

하지만, 결국엔 보고야 말았다. 제대로 된 답을 찾아놓고는 막판에 그것을 고쳐 시험을 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건만 왜 아직도 결정적인 순간이면 현명했던 첫 선택을 바꾸는지 모를 일이다. 뒤늦은 오판은 대개 사소한 목소리로부터 시작된다. 대개 ‘설마’로 시작되는 작은 질문이거나 ‘혹시’로 비롯되는 작은 의문들이다. ‘설마, 직감에 기댄 것인데 내 판단이 맞겠어?’ ‘이제까지 그토록 아픈 동서고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설마 또 아프겠어?’ ‘혹시 이러다 한국영화사의 전혀 새로운 돌연변이의 출현 장면이나 한국영화사의 한 정점을 놓치는 것 아닌가?’ ‘혹시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비약시킬 역사적 사건 혹은 사건성을 외면하는 것 아닐까?’ 그래도 ‘설마’와 ‘혹시’가 합쳐지지만 않으면 가까스로 처음의 선택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설마’와 ‘혹시’는 원래 쌍생아였던 것일까, 아무리 막아 세워도 순식간에 합체가 되곤 한다. 이 둘이 합쳐져 ‘맞지도 않는 내 판단 때문에 한국영화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놓치는 것 아냐’라는 문장으로 완성되는 순간, 결국 첫 번째 선택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젊은이의 양지>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뒤집혔다. 봤다. 보았으므로 며칠을 앓았다.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지>는 채권추심 콜센터 센터장인 그녀를 꼭지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여기 채권추심 콜센터를 관리하는 계약직 센터장이 있다. 그녀의 임무는 콜센터 직원들을 독려하고 독촉해 카드빚 채무자들로부터 연체된 카드빚을 받아내는 일이다. 계약직 센터장이기에 그녀에게는 실적이 중요하다. 실적이 탁월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본사 임원의 자리에 올라설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어떤 때는 열정적으로,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다그친다. 성실한 여느 직장인이 그 위치 쯤에 있으면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하는 일이 카드빚에 쫓겨 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일에 몰두할수록 누군가는 점점 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심연으로 빠져든다. 혹은 어쩌다 그녀가 높은 실적을 올릴라치면 그만큼 더 많은 모더니티의 추방자,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는 삶이 발생한다.

그녀를 꼭지점으로 두 명의 젊은이가 등장한다. 한 명은 그녀의 딸이다. 그녀의 딸은 요즘 말로 취준생이다. 혼자서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시험 공부에 몰두하는 착한 딸이다. 물론 엄마를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베버의 말처럼 직업을 통해서만 자아실현이 가능한 오늘날이기에 그녀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존재증명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 한평생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자리는 많지 않고 간혹 있는 그런 자리에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이 펼쳐진다. 탈락의 쓴 잔을 받아들이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때문에 기대 수준을 낮춰서라도 직업을 가지려 하나 그녀의 어머니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녀 자신도 엄마의



반대를 무릅쓸 용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미래의 기약이 전혀 없는 취준생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녀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종종 떠올리기도 한다.

다른 한 명의 젊은이는 그녀의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고등학생이다. 그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래서 줄곧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풍경에 신나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미래의 사진작가이다. 존재자가 아닌 존재이기에, 다시 말해 인간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기에, 그는 도저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오늘 받을 돈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가언명령이 유일한 철칙인 그곳에서 그는 하루하루 피폐해지고 소진되어 간다. 그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수록 누군가는 죽음 이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는 극한상황 빠져드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콜센터에 근무하는 대부분은 누군가를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을 지켜내건만, 그의 경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안다. 온 세포로 받아들이라고나 할까. 자신이 하는 일이 날개도 없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낭떠러지에서 미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그의 정신적 고통은 그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간다. 살아야겠기에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한다. 한때 그에게 존재자가 아닌 존재의 짙은 흔적을 보여주었던 콜센터장인 그녀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남을 배려할 상황이 아니다. 인간이려 하지 말고 직무에 충실하라!!고 호통친다. 그 말에 쫓겨 그는 채무자의 집을 찾고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다. 결국 그는 누군가를 죽음으로 떠민 자신의 괴물성 혹은 악마성을 감당하지 못한다.

물론 <젊은이의 양지>는 이런 인물들의 실존형식을 단순하게 병존, 병치시키지는 않는다. 두 젊은이에게 대타자의 대리인 역능을 행하는 그녀를 꼭지점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한다. 그녀는 그녀가 놓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젊은이를 상징질서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렇다고 특별한 유혹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노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그 말, 성공하라고, 성공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라고,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말을 할 뿐이다. 그뿐이다. 그런데 그것뿐인 그녀의 권유 혹은 강요가 두 젊은이를, 그리고 더불어 그녀 자신도 한계상황 너머 극한상황으로 이끈다. 이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짓고 규율하는 상징질서가 정글이기 때문이다. 흡스식으로 말하면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사회이고, 앵겔식으로 말하면 정신적 동물왕국의 시대. 이런 시대에 성공이란 곧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패배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런 시대에 성공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은 수많은 존재들을 모더니티의 추방자로 만드는 것을 외면하라는 명령이기도 하다. 아직은 존재자가 아닌 존재이기를 꿈꾸는 두 젊은이는 대타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녀가 내리는 (가언)명령 때문에 힘겨워한다. 두 젊은이가 존재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성공에서 멀어질수록 대타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녀의 위치는 불안해지고 그럴수록

그녀의 명령은 단호해진다. 이 악순환은 두 젊은이를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간다. 하지만 흔히 그렇듯 대타자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대타자 대신 대리인인 그녀가 그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고 그녀 역시 불안정한 존재로 전락한다.

이러한 플롯을 감안해서 읽자면 <젊은이의 양자>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절망적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영화가 아니다. 그것 외에 유독 젊은이들에게 가혹한 이 디스토피아적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영화이기도 하다. <젊은이의 양자>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이라는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평범의 악마성’에 대해 말하는 영화다. 대타자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는 것, 그리고 대타자의 순종하는 신체로 살아가는 것은 곧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는 것. 아니, 수많은 존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그러므로 <젊은이의 양자>를 본 이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분노하는 악마들에게서 뜻밖에 우리를 발견하고 한다는 사실에 전율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이 평범하다고 느낄수록, 다시 말해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순종하는 신체일수록 악마적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그 자기성의 감옥으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사회 안에서 생존해야 하므로 그 탈주 혹은 탈존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만큼 해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존재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행위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예컨대 완강한 현실원칙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존재들부터 더이상 이기려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존재들부터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는 바틀비처럼 ‘~을 하지 않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비겁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귀국하자’를 모토로 삼았던 한 베트남전 참전 용사처럼 세상에서 요구하는 ‘용기’와 ‘비겁’의 장소를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젊은이의 양자>에 나온 문구를 빌자면 ‘오늘 받을 돈은 내일, 또 내일로 미루며 눈치껏 일하고 직장 상사의 비난에는 용기 있게 무관심하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 하여튼 우리 모두는 지금처럼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보다 절박한 정언명령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 비록 그 때문에 모더니티의 추방자가 될 위험에 처한다 해도,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회 바깥으로의 여행 길에 오른다 해도. 이렇게 <젊은이의 양자>는 극한상황을 제일 먼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더욱더 극한상황으로 몰아넣는 ‘아이히만’과 다르지 않은 어른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적어도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영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젊은이의 양자>를 멀리하게 될까 저어되지만, 결론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말한다. <젊은이의 양자>를 본 후 며칠을 앓았고 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가 두려웠다. 내가 <젊은이의 양자>의 그녀와 다르지 않게 살고 있음을,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 스스로가 그동안 그토록 경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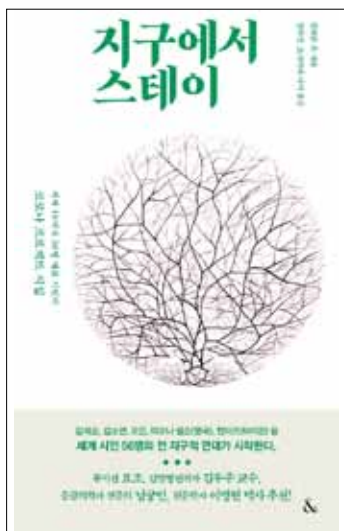
오던 아이히만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젊은이의 양자>는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 스스로 속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괴물로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비겁하게 자기를 외면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존재인지를 아프게 보여주는 영화다. 비록 <젊은이의 양자>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원망스러운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보는 이의 마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뒤흔들어 진정한 자기를 찾아나서게 만드는 영화, 그 영화가 <젊은이의 양자>다.

2.

‘우주엄마’들의 세계사와 ‘거짓말처럼’ 다가오는 것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문학

존재자들은 파편화된 상태로 살아가기에 자신이 어떤 세계 속에 있는지 잊고/모르고 살 때가 많다. 이곳에 사는 거의 대부분이 그저 주어진 일을 하며 산다. 한데 간혹 자신이 세계 속의 개인임을, 사회적 관계의 총화임을, 그 결과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나선형적 선순환 운동의 작은 밑알이 되기도 함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다. 루카치는 전쟁이나 대공황 등 역사적 사건이 각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총체성을 감지하고 인식하게 한다고 말한다. 카렐 코지크는 일상성의 중지가 자신의 삶이 놓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계기로 작동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벤야민은 역사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순간 ‘현재시간에 의해 충만된 시간으로써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알랭 바디우는 사건과의 우연하고도 격렬한 조우가 그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순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그런가 하면 고은은 ‘내려갈 때 보았네/올라갈 때 보지 못한/그 꽃’이라고 노래한다. 그렇다. 평범한 일상이 정신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의 연속적, 일상적 리듬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지독하게 괴물적인 존재자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지금의 관성적이고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단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진리의 빛 혹은 사건에 노출되는 순간은 대개 개인마다 제각각 도래하지만 어떤 경우엔 지구인 전체에게 다가오는 때도 있다. 오늘날이 그러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실존형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온 지 1년, 오늘날의 지구인 전체는 이전의 삶의 기계적인 반복 혹은 반복-기계의 삶에서 벗어나 그간 볼 수 없었던 것,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보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중이다. 화려한 불빛과 그 사이를 사람, 사람, 사람 들이 넘칠 듯 오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거대한 공허와 어두운 심연을 사람의 발길이 잦아들면서 마주하게 되었다고나 할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필요 이상의 과잉의 문명을 구축해놓고는 그 과잉을 유지하기 위해 죽자사자 우리 모두를 소모시켰으며, 어찌자고 헛되도다! 헛된 과잉과 사치를 위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의 생명 전체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몰아넣은 것일까.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로 삶의 리듬 혹은 속도가 느려지면서 예전의 일상적인 리듬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시무시하고도 외설적인 실재들의 연쇄를 목도하게 되었다.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며, ‘알고 보니 내가 아이히만’이라는 것과 같은 진실을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 각자가 우주적 존재임을, 우주 속의 존재이므로 어쩔 수 없이 우주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삶이 결정되고, 인간 각자의 개별적인 행위가 미세하나마 우주적 질서에 떨림을 준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세찬 눈발 속에 잠깐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 음식을 주문하는 행위가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감지하게도 되었다. 그런가 하면 빠른 속도일 때는 보지 못했던 ‘그 꽃’들도 보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준 커다란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라고나 할까.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구인 전체에게 가져다준 인식론적 전회와 뼈저린 각성들을 한 자리에 모은 책이 있다. 바로 김혜순 외 여러 나라 시인이 쓰고 김태성, 요시카와 나기가 옮긴 『지구에서 스테이』(&(앤드), 2020.11)라는 시 앤솔로지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세계 18개국 56명 대표 시인의 코로나 프로젝트 시집’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는 바, 이 책은 이 문구 그대로다. 『지구에서 스테이』는 코로나19가 전지구에 퍼져나가면서, 그러니까 전지구인이 1년 전보다 한결 지체된 리듬으로 살게 되면서 여러 나라의 시인들이 목도하고 발견한 실재적 풍경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지구에서 스테이』의 시인들이 지구인들의 마음의 무늬를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시인들이란 존재가 흔히 일컬어지는 것처럼 지구인들의 마음에서 일고 있는 변화를 앞서서 표현하는 아방가르드들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스테이』를 통해서 본 지구인들은 각 사회의 상징질서에 순종하는 신체이기보다는 우주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위를 재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처럼’ 이전에는 외면당했던 실재적 진리와 윤리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6명의 시중 『지구에서 스테이』의 정동을 가장 잘 대변하는 두 편의 시를 옮겨본다. 모처럼 시 감상을 해보시라 권한다.

우주엄마/김혜순

우주는 무한하나 그 속엔 낙이 없구나(누군가의 명언)//이 알 속에는 나만 있구나(어느 달걀노른자의 명언)//엄마는 물 마시고 싶고/우주엄마는 물 만져보고 싶고//엄마는 창밖의 푸른 하늘로 다이빙하고 싶고/우주엄마는 검은 채널 돌려 우리엄마 시청하고 싶고//엄마는 마지막 예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고 싶고/우주엄마는 검은 우물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엄마는 병원에서 집에 가

는 게 소원/우주엄마는 엄마를 우주로 데려가는 게 소원//엄마는 아무것도 없
는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리고/우주엄마는 점점 다가오고//우주엄마가 다
가올수록 엄마는 더 아프고/엄마는 이제 그만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고//
머나 먼 우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별 중에 어디서/내가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까//우리엄마는 나한테 그런 전화나 하고/우주엄마는 엄마의 몸을 깨트려 별들
이 무한하게//엄마의 알을 깨고 거기 엄마 대신 환한 노른자처럼 눕고 싶은/머
나먼 우주의 검은 엄마는 나에게 딸아 딸아 내 이쁜 딸아 부르고

거짓말처럼/김소연

약국에 갔다/신분증을 내밀고 신원을 입력한 후에 약사는 내게/공적 마스크 3
장을 건넸다/손세정제는 없나요/내가 묻자 약사는 대답했다/우리도 구하고 싶
습니다/제주도에서 교사가 사망했다고/빌딩 위 전광판에서 뉴스 앵커는 전하
고 있었다/마스크를 하고 수업을 하던 초등학교 교사였다/나는 산책이 늘었다/
나는 요리가 늘었다/나에게 시간이 너무나도 늘었다/축제가 사라졌다/장례식
이 사라졌다/옆자리가 사라졌다/재난영화의 예감은 빗나갔다/젓빛 잔해만 남
은 도시가 아니라/거짓말처럼 푸른 창공과 새하얀 구름이 날마다 아침을 연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테라스에서 나팔꽃이 손이 뻗어 코스모스를 감고 있었다/
황조롱이가 나타나 앞집 지붕 위에 앉아있었다/몸바이에 나타난 홍학과 함께/
레인섬에 나타난 바다거북이와 함께/산티아고에 나타난 퓨마와 함께/손을 내
밀어 페이크 악수를 한 후에/늠름한 메타세쿼이아 숲으로 사라진 내 뒷모습을/
누군가 카메라에 담았다.

이처럼 코로나19 일 년은 우리에게 ‘우주엄마’의 세계감으로 ‘거짓말처럼’ 새로
운 것을, 아니 보면서도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없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전회의 계
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이전에는 무심히 넘겼을 것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는 작품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고, 나 또한 이전이라면 건성건성 했을 구절에 더 눈이
가곤 한다. 아마도 황정은의 『연년세세』(창비, 2020.9)가 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런 상황 때문이리라.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되는 순간마다 모자로 변하는 아버지의 희비극을 통해
서 수많은 추방자, 루저들을 양산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는 한편(「모자」의 경우),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곱씹는 인물
을 통해 자신이 행한 죄도 부정하는 무책임의 사회를 통렬하게 고발하는 단계(「디디
의 우산」)를 거쳐 황정은이 『연년세세』에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모계의 역사
의 복원이다. 『연년세세』는 부계의 역사에 의해 흩어지고 단절된, 그러다가 끝내 소멸
해버리곤 했던 어머니-딸/며느리-손녀로 이어지는 또 다른 가족의 계보학을 치밀하

게 복원해낸다. 단지 그것뿐인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컨대 『연년세세』가 만들어낸 역사상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아들/사위-손자로 이어지는 아버지 중심의 역사는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 인간 사회를 오로지 만인이 만인과 투쟁하는 전쟁터로 가속화시켜 왔다는 것, 그런 전쟁터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안고 돌보는 친밀성의 관계를 존속시켜 그나마 인간 사회를 지속가능하도록 한 힘은 어머니-딸/며느리-손녀로 이어지는 모계의 역사였다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 중심의 계보학이 공고화되면서 인간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연년세세』는 가족의 역사를 포함한 우리의 대문자 역사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모어(母語)를 매개체로 계승되어 오던 인륜적 가치가 얼마나 치명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역사에서 빠져나가는지가 아프게 재현한다.

나는 노먼이 한국어를 안다는 걸 알아. 그게 노먼의 모어(母語)니까. 안나가 노먼을 갓난아기 때부터 달래고 재웠을 테니까 한국어로, 그래 언니, 노먼은 한국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먼은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 아주 조금이지만,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 노먼이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내가 배웠어 한국어를 어른이 된 뒤에. 캐서린에게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안나가 캐서린에게 해준 이야기를 듣고.

나는 생각해.

양갈보, 양색시.

노먼은 그 말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말 자체를 용서하지 않기로 한 거야. 안나를 고립시키고 무시하고 경멸한 그들과, 그들의 언어를.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아주 강한 동조였다고 생각해. 안나를 양갈보라고 부른 그 사람들과 말이지. 그는 안나의 언어를, 자기 모어를 결명 속에 내버려둔 거야. (『다가오는 것들』의 일절)

코로나19 이후 한국문학은 코로나 이전,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현재적 의미로 충만한 그것의 목록 속에 없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황정은은 특이하게도 ‘우주엄마들의 세계사’로 인간의 역사를 다시 구성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획이 좀 더 정밀하게 맥락화된다면, 황정은은 이전의 한국문학사의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건성을 충실하게 자기화한 혁신적 세계를 발명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은은 물론 지금도 그런 역능을 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문학을 앞서서 이끄는 바로 그 작가일 것이다.

3.

능력주의의 폭정과 겸손의 윤리학;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의 경우

『공정하다는 착각』을 들고 마이클 샌델이 돌아왔다. 마이클 샌델에 줄곧 관심이 있던 분들은 귀환이라니? 뭘 귀환? 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이다. 이 말이 맞다. 그는 내내 우리 곁에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강렬하게 각인시킨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에도 그는 멈춤이 없었다. 『민주주의의 불만』,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등등의 저술을 통해 오늘날의 핵심적인 화두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었고 또한 그때마다 경청할 만한 입장을 개진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에게는 마이클 샌델이 오랜만에 홀연 다시 나타난 느낌이다. 아마도 『공정하다는 착각』의 무게감, 밀도, 문제성 같은 것들 때문일 것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은 적어도 내겐 『정의란 무엇인가』를 접할 당시의 충격에 못지않은 자극으로 다가왔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정의’라는 핵심적 화두를 풀어내는 철학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말법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면, 『공정하다는 착각』은 인간 사회의 치명적 증상에 대한 진지하고도 다면적인 분석으로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나 할까.

『공정하다는 착각』의 가장 깊은 심급에 놓여 있는 문제의식은 ‘오늘날 미국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들어가며’에서 드러나듯 마이클 샌델은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 이 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호 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절박한 상황에서 보인 미국의 지리멸렬한 대응에 공포와 전율을 느낀다. 서로 뭉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대립, 대결하고, 그 노골적인 대립 때문에 서로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뭉치는 무대책,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단결’을 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혼란에 마이클 샌델의 위기의식은 최고조에 달한다. 그는 이 치명적인 증상을 치료 혹은 치유하지 않으면 미국 전체가 파국으로 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이 증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도대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감행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여야 할,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미국인들은 왜 건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아니 왜 잠시만이라도 그 대립과 대결을 멈추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공정하다는 착각』의 출발점이다.

『공정하다는 착각』이 조각 난 공동체 혹은 공동체의 와해의 원인으로 우선 지목하는 것은 현재 미국 사회에 더 나아가 세계 전역에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적 불만’이다. 전세계가 세계화가 되면서, 자동화 사회가 되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미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 때문에 최

근 들어 바우만이 표현한 ‘모더니티에서 추방되어 쓰레기가 되는 삶’이 기하급수적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사회에 대해 불만과 원망, 더 나아가 원한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할 터, 이를 샌델은 ‘포퓰리즘적 불만’이라고 명명한다. 샌델이 이 ‘포퓰리즘적 불만’에 주목하는 이유는 ‘포퓰리즘적 불만’ 안에는 쓰레기로 전락한/전락할 존재들인 대중들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정당한 불만도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과 대화를 거부하는 대중들의 불만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 ‘포퓰리즘적 불만’은 들뢰즈가 큰 의미를 부여했던 ‘질서화되지 않은 혁명적 에너지’로 작동하기보다는 주로 트럼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정치세력과 결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샌델이 ‘포퓰리즘적 불만’을 불안하게 주목하는 것은 후자의 측면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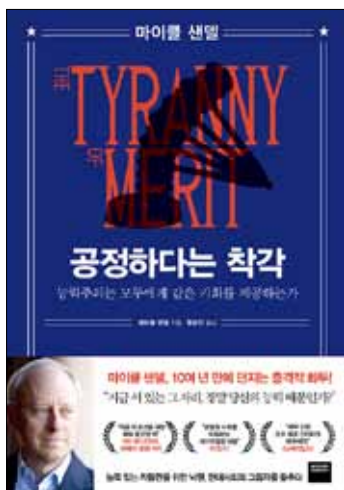
『공정하다는 착각』은 ‘포퓰리즘적 불만’이 왜 그들의 이념과 이익을 대변해오던 진보 정당이 아니라 트럼프와 같은 권위주의인 정치세력과 결합하는가 하는 질문을 이어가는 바, 이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흔히 말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도 잊지는 않고 있지만 샌델이 보다 주목하는 것은 그 경제적 불평등 혹은 불평등 경제를 도덕적으로 떠받치는 ‘능력주의’이다. 아마도 『공정하다는 착각』에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능력주의’가 공동체를 조각내고 국가 사회주의적인 파시즘의 부활을 이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샌델의 분석과 진단을 압축하면 이렇다. 능력주의가 정당한 정치철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우선 모든 사회구성원이 온전하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특세 이후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능력주의가 계속 유지될 경우, 그러니까 기회와 조건의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능력주의를 고수할 경우, 이때의 능력주의란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 샌델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 샌델이 지목한 능력주의의 폐해는 축약하자면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능력주의의 신봉자라는 것이다. 능력주의가 초래하고 있는 불평등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기회와 조건이 평등한 사회의 건설’인 만큼 머지않아 능력주의의 폐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굴욕감

때문에 살아가는 일본일초가 지옥인 사람들에게 우리를 믿고 10년만 기다려보라고 하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트럼프 같은 인종적, 국수주의적 능력주의자는 능력주의가 초래한 ‘포폴리즘적 불만’을 교묘하게 활용한다. 그 결과 사회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불평등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려는 정치세력보다는 ‘포폴리즘적 불만’을 그때그때 이용하기만 하는 정치세력 쪽에 밀착해가는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할 만한 치명적 증상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더욱 더 공정해질 것이라는 맹신’이 가져온 이 두려운 상황으로 벗어나기 위한 길도 제시한다. 원인을 ‘능력주의’에서 찾은 만큼 해답도 이와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샌델이 제시한 길은 어떤 의미에서 절충적이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물음이 ‘능력주의가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능력주의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샌델이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시장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뒤편 주는 대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능력주의적 신념은, 연대를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든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속의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신의 은총인지, 어쩌다 이렇게 태어난 때문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몰라도 덕분에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겸손함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가혹한 성공 윤리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서,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공정하다는 착각』의 핵심적인 내용이 응축되어 있는 마지막 문단이다. 이 문단에서 샌델이 강조하는 것은 ‘오만이 아닌 겸손’이다. 지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질문을 하고도 그 답이 ‘오만이 아닌 겸손’이라는 점은 못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지나치게 윤리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그러면 패자들은 ‘굴욕’이 아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공정하다는 착각』에는 능력주의의 폭정을 넘어서 수 있는 혁신적인 제안들이 중간중간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시장 가치적인 능력의 평가가 아닌 공공선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능 평가 체계의 과감한 도입, 행운적 요소가 전적으로 개인적 능력으로 포장되



는 것을 막기 위한 제비뽑기식 대학 입시 제도의 도입(이는 가라타니 고진이 제안하고 지젝이 유쾌하게 동의한 그리스식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연상시킨다),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의 강화 등등. 하지만 이러한 몇몇 제안들의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공정하다는 착각』의 핵심적인 치유책인 겸손의 윤리학이 겸손의 정치경제학과 결합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겸손의 윤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구동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이클 샌델의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4.

함께 있음 자체를 나누는 공동체와 기본소득의 마음 ; <나의 아저씨>의 경우

뒤늦게 <나의 아저씨>를 정주행했다. 2020년 12월 31일에 보기 시작했는데 정주행을 마친 것은 2021년 1월 1일이었다. 어쩌다 보니 나의 50대를 <나의 아저씨>로 마감하고 나의 60대를 <나의 아저씨>로 시작한 셈이 되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육신이 흐느적흐느적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맑소’라는 「날개」의 서두를 장식하는 아포리즘의 참의미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몸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짹짹해졌다. <나의 아저씨>로 인해 나의 50대를 보람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나의 60대를 제법 근사하게 출발했다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그만큼 <나의 아저씨>는 살아 있는 내내 붙잡고 있을 만한 화두가 여럿인 드라마였다. 앞서 말한 <젊은이의 양자>를 보고 나서 길을 잃었다면, <나의 아저씨>를 보고 가야 할 길의 갈피를 엿보았다고나 할까. 만약 나의 60대 이후가 풍요로워진다면 그건 상당 부분 <나의 아저씨>가 가져다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사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는 편은 아니다. 어떤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작으로 이름이 높을 때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어들기 위해 잠깐 그 드라마의 몇 장면을 기웃거리는 정도다. 한국 드라마가 내 취향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는가. 그리고 나의 취향이란 얼마나 평범한가.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 내 취향에 맞지 않는 드라마가 없을 리가 없다. 그래서인가 한 번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보는 편이다. 그런데도 한국 드라마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좀 낯부끄러운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나는 한국의 드라마를 볼 때 좀처럼 스토리에 집중하지 못한다. 영화를 볼 때나 외국의 드라마를 볼 때와 다르다. 이상하게도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스토리와 신성한 디테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매혹적으로 묶어세우는 플롯에 주목하는 대신 다른 것에 눈을 빼앗긴다. 주로 남자 등장인물들의 옷. 보는 걸로 그치면 천행이겠건만, 웬걸 거기



서 끝나지 않는다. 미니시리즈 한 편의 본방을 사수하고 나면 참담한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한 두 번이 아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처치하기 힘들 정도로 옷이 쌓여 있다. 이 참담한 상황 앞에서 처음에는 드라마에 집중하자 다짐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 드라마 쪽을 기웃거리지 않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그랬던 것인데, 어느날 우연히 <나의 아저씨>와 조우했다. 순식간에 16부작을 돌파했다. 그 정도였으면 좋았으련만, 유튜브의 흩어져 있는 ‘짤’들 찾아보다가 또 한 번 정주행을 했다. 그런데 그래도 <나의 아저씨> 얇이가 끝나지 않고 있어 문제이다. 할 일이 태산이고, 밀린 원고가 언덕인데, 다시 ‘짤’들을 기웃거리고 있는 중이다. 곧 또 한 번의 정주행이 시작되리라.

<나의 아저씨>에 대한 나의 독후감은 이 드라마에 매혹되었던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예컨대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그것과 거의 유사했다. “와! 16화까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인간의 심리를 완벽히 묘사한 작품이네요. 엄청난 각본,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출연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인 세바스찬 로체의 그것과 거의 근사했고. “솔직히 넷플릭스에서 본 <나의 아저씨>라는 한국 드라마는 놀랍도록 복잡한 이야기 구조와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모든 부분에 훌륭하며 가슴 아프고, 현실적이고, 섬세합니다. 눈부신 연기, 위대한 각본과 연출까지. 부디 이 놀라운 작품을 보시라”.

아마도 파울로 코엘로나 세바스찬 로체의 ‘엄청난 각본, 환상적인 연출, 위대한 각본과 연출’이라는 표현 속에 이 요소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한 가지를 구체화시켜 덧붙이자면, <나의 아저씨>의 절묘한 아이러니적 상황의 연출과 그 상황의 일관된 지속은 단연 압권이었다. <나의 아저씨>는 사실 이전에 수없이 반복된, 그래서 진부하거나 통속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드라마다. 서로 처지가 다른/다르다고 오인하는 두 남녀가 우연히 조우하고, 서로 다른 실존형식을 지닌 만큼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거쳐, 서로를 이해해가는 쉽지 않은 공감의 과정을 거쳐 우정 혹은 사랑이라는 친밀성의 관계라는 종착지에 도달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나의 아저씨>는 이를 전혀 다른 플롯으로 구성해내며 그것 때문에 장면장면마다, 그리고 작품 결말에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안겨준다. <나의 아저씨>가 수없이 반복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한 드라마로 완성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드라마가 취한 장치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나의 아저씨>는 영화 <타인의 삶> 등에서 흔히 활용되던 도청이라는 모티브를 적극 차용한다. 그러면서 이 두 남녀 사이의 관계를 중층적으로 구조 속에 위치시킨다. 일상 생활에서는 그녀의 임면권을 가진 직장 상사와 인턴 직원 사이이지만, 거기에 또 한 겹의 관계망이 형성된다. 속이는 그녀와 속는 그, 도청으로 그의 모든 생활을 꿰뚫는 그녀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 그 결과 그와 그녀 사이의 관계는 한순간도 단순하지가 않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부조리해진다고 할까. 그가 그녀에게 연민을 느낄수록 그것은 그녀에게 더



욱 속는 것이 되고, 그녀가 그에게 공감을 느낄수록 (그것이 불법도청이라는 범죄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이므로) 그녀의 죄과는 강화된다. 이렇게 그와 그녀의 관계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율배반적인 관계 혹은 배리적 관계를 이루거니와, 이러한 배리관계는 내내 지속되다가 드라마의 끝부분에서야 해소된다. 아마도 <나의 아저씨>에서 그녀와 그가 구축한 친밀성의 관계 혹은 ‘마주한 공동체’가 감동적인 것은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들 끝에 서로가 서로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통합하는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아저씨>의 일관된 아이러니적 상황과 어조의 아이러니들을 두고 ‘아이러니의 승리’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물론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한 작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일지 몰라도, 내가 <나의 아저씨>에게서 지나가듯 느낀 아쉬움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나의 아저씨>의 결말에서 보여준 그녀의 실존형식. 이름에 대한 집착 탓인지, 이 작품의 근저에 깔려 있는 불교적 색채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마지막 장면의 그녀는 탈-존적 존재이거나 탈주적 존재이기보다는 너무 편안함에 이른 해탈적 존재에 가깝게 다가온다. 해서 작품 초반부와 중반부까지 보는 이를 매혹시키던 야성과 도발, 아웃사이더 특유의 예민함과 격렬함이 현저하게 탈색되고 대신 순종하는 신체에 너무 가까이 다가선 존재가 된다. 들뢰즈의 표현법을 빌어 비유하자면, ‘질서화되지 않은 혁명적 에너지’를 잃고 태연한 일상적 존재가 되어 버린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아쉬웠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의 그에게서 이미 맛본 것이기도 한데, <나의 아저씨>의 그녀가 ‘착한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 ‘악한 죄인’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만약 그녀가 ‘악한 죄인’이라면 그와 그녀 사이의 친밀성의 관계 혹은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본 <나의 아저씨>보다 더 복잡했을 것이고, 정말 그랬다면 악한 이웃까지를 감싸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실재적 윤리가 요구되는지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탐색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현재의 <나의 아저씨>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나의 아저씨>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근거없는 기대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적확할지 모른다.

하여튼 <나의 아저씨>는 모처럼 만난 품격 있는 드라마였고 내 ‘생애 최고의 작품’ 중 하나였다. <나의 아저씨>가 나에게 그토록 강렬한 황홀경을 안겨주었던 요소는 두 가지였다. 먼저 하나는 <나의 아저씨>가 ‘평범의 악마성’이라는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말의 불빛 혹은 희망을 던져주었다는 것. <나의 아저씨>의 ‘그’는 <젊은이의 양자>의 ‘그녀’와 거의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 역시 그녀처럼 대타자의 대리인 혹은 하수인의 자리에 위치해 있으나 그 역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위기에 빠져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다르게, 상징질서가 그에게 부과한 역할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두가 신처럼 떠받드는 근대성의 핵심원리인 계산가능성과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목적없는 합목적성,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인 목적도 없이 오로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그를 위해 모든 인간을 효율적인 도구로만 사용하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거나 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그는 그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승진에서 밀리고 심지어 ‘왕따’가 되는 난경으로 내몰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인간, 아니 모든 생명을 그 자체 목적으로 환대하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 시대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휴머니스트이자 생태주의자라 할 수도 있다. 하여튼 그는 대타자가 욕망하는 대로 욕망하지 않고, 그 대타자의 대리인이기를 거부한다. 대신 주변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비록 자신이 점점 더 ‘쓸모없는 실존’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를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그는 대타자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안 하는 편을 택’함으로써 대타자로부터 주변의 존재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숨쉬게 한다. 그렇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상징질서의 명령을 전달 ‘안 하는 편을 택’하는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악의 평범성’ 혹은 ‘평범의 악마성’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젊은이의 양자>를 보고 절망에 빠졌다가 <나의 아저씨>에서 나를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발견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평범해도 괴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아무리 상징질서가 무언가를 강요해도 내가 진정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하는 편을 택’하면 된다는 것. 그 정도의 용기만 있어도 우리는 괴물로, 악마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아저씨>는 설득력 있게 보여주거니와, 이 점이야말로 <나의 아저씨>의 단연 빛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나의 아저씨>가 감동적이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나의 아저씨>의 그가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충실한 하수인을 ‘안 하는 편을 택’할 수 있게 한 힘으로 그의 영웅적 결단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그를 그답게 한 힘의 원천으로 또 하나의 요소를 지목한다. 바로 후계동 사람들, 혹은 후계동이라는 가상의 공동체이다. 그는 후계동이라는 독특한 공동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동체의 일원이다. <나의 아저씨>의 후계동은 자본주의적 합리성과는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일찍이 장-뤽 낭시는 자본주의적 계산가능성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만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음, 즉 공동-내의-존재를 위한 함께 있음,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 자체를 나눔, 다시 말해 ‘나’와 타인의 실존 자체가 서로에게 부름과 응답이 됨”의 공동체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적이 있다. <나의 아저씨>의 그가 속해 있는 후계동은 장-뤽 낭시가 이상적으로 설정한 공동체에 가깝다. <나의 아저씨>는 ‘그녀’와 ‘그’의 성장과 우정이라는 핵심 플롯 외에 후계동이란 왁자지껄한 상상의 공동체의 함께 있음과 나눔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바, 이는 <나의 아저씨>의 관심이 현존재들의 탈-존의 방법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탈-존을 위한 공동체의 건설에까지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나의 아저씨>는 후계동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의 왁자지껄한 함께 있음과 무조건적인 나눔의 장면들을 통해 인간이 자

본주의적 합리성으로부터 ‘안 하는 편을 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위해서는 후계동과 같은 자본에 대항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항하는 또 다른 공동체의 건설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만만치 않은 통찰이라 할 만하다.

한때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화두가 있었다.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라는 제목에서 촉발된 것이었는데, 우연히 조우하는 사물마다 이 명제를 바꿔 적용하곤 했었다. ‘그래, 그렇다면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인문학이 없다고 상상해봐’, ‘사랑이 없다고 상상해봐’ 등등. 한데 요즘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다른 것이다. 아무데나 이 명제를 들이대곤 혼자 쓴웃음을 짓곤 한다. 다름아닌 ‘기본소득이 있었다고/있다고 상상해봐’라는 것.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내내 떠올렸던 질문도 이것이었다. 그녀에게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그녀와 그녀의 할머니는 그토록 오래 불행의 어두운 터널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후계동 그들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다만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을 수 있는 순간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고 더 요란하게 왁자지껄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의 아저씨> 장면장면마다 기본소득을 적용하면서 얻은 기대하지 않은 성찰도 있었다. 아마도 기본소득에 관한 내 공부의 깊지 않아서일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이 도래하면 현재의 우리 모두가 겪는 불행이 상상 이상으로 급감할 것이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증상들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때문에 기본소득에 큰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뿐 다른 것이 아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도달할 종착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인지 충분히 질문하고 성실하게 답한 적은 없었다. 한데 <나의 아저씨>의 아무 대목에서나 기본소득이 있었으면 하는 터무니 없는 상상을 하면서 왜 오로지 기본소득이어야 하는지 그 기본소득을 통해 만들어가야 할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막연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가령 기본소득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아저씨>의 그의 것과 많이 닮아 있을 듯했다. <나의 아저씨>의 그가 그 어떤 생명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동등한 생명체로 환대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수단이 아닌 그 자체 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돌본다면, 이야말로 기본소득의 기본원칙과 너무나도 친연성이 높은 것 아닌가. 또 <나의 아저씨>의 그가 자본주의적 계산가능성으로 사람과 사물들 사이를 가르고 위계질서를 세워 누군가는 천대 무시하고 누군가에게는 절대복종하는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든 희귀종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 역시 끊임없이 구별짓고 차별하는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서 그 어떤 존재라도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 그의 권리를 인정하는 유일한 정책이지 않은가. 이뿐만 아니다. <나의 아저씨>의 그가 그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을 후계동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기본소득 역시 궁극적으로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다만 함께 있기 위해 함께 있음, 즉 공동-내의-존재를 위한 함께 있음,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 자체를 나눔, 다시 말해 ‘나’와 타인의 실존 자체가 서로에게 부름과 응답이 됨”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고자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기본소득 공부 때
문에 나는 <나의 아저씨>에게서 한 줄기 불빛을 볼 수 있었고, <나의 아저씨> 덕분에
나는 기본소득이 왜 유일한 대안이며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가
늠할 수 있었다고.

물론 기본소득이 정책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나의 아저씨>의 그의 마음
과 같은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후계동 같은 상상 속의 공동
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나의 아저씨>의 그가 수시로 거센 역
풍에 비틀거리고 쓰러지듯이, 기본소득이 정책화되어도 시장의 논리가, 구별짓기라
는 인류의 오랜 관습이, 현존재들의 끝을 모르는 과잉의 소유욕과 독점욕이 후계동
의 길을 집요하게 막아설 것이다. 그러나 가야 한다. 후계동이 아닌 그곳은 인간이 오
로지 기계로 살아가야 하는 지옥이므로, 전 세계를 후계동으로 만들어야 인간은 비
로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므로. 하지만 인간이 언제까지나 지옥에서 살 수
는 없을 터,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언젠가 지옥이 아닌 세상, 그러니까 기본소득
세상은 오고야 말 것이다. 물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전지구가 후계동인 그런 황홀경
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황홀경 속에서 꼭 한 번은 살아보고 싶다. 이번
생에 불가능하다면 <나의 아저씨>의 그녀처럼 꼭 한 번 후계동 그곳에서 다시 태어
나서 기본소득 세상의 충만함을 맛보고 싶다.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간절한 꿈을 꾸게 해준 <나의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

21세기 복지국가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나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주목할만한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노동,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왕성한 저술활동을 해온 우어슬라 휴스(Ursula Huws) 교수(Hertfordshire Business School)가 쓴 『복지국가의 재발명: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정책』(Reinventing the Welfare State: Digital Platforms and Public Policies)(Pluto Press, 2020)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로 저자는 국역본 『사이버타리아트』(신기섭 역, 갈무리, 2004)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서평자는 Ursula Huws 교수와 2019년에 나온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편집자: Malcolm Torry)의 4장 “Employment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Richard Gilbert, Ursula Huws and Gunmin Yi)을 함께 집필한 인연이 있다.

아래에서는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서론인 1장은 이 책의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 또는 복지국가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절의 고용 및 복지 모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향수에 빠져 전후 복지국가 제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복지국가 제도의 바탕이 되었던 원칙들에 주목하면서 21세기의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여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그 원칙들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고용 및 복지 모델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저자가 볼 때, 전후 복지국가 모델이 성립한 후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70여 년 동안 복지국가는 노동, 젠더 등의 면에서 엄청나게 변형되었다. 2장부터 4장까지는 20세기 복지국가, 노동시장, 젠더평등이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준다.

2장은 복지국가의 제도들이 생활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증진하며 재분배를 통해 사회의 평등을 제고하는 형태에서 오히려 빈곤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의,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의 역진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형되어왔다고 주장한다. 재분배 기능이 단지 약화되어 왔음을 적시해온 수많은 학자들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재 복지국가의 재분배 기제는 오히려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는 그 근거로 영국에서 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세 부담과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로 복지국가는 주거, 보건, 교육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사적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많은 기업들이 정부계약으로부터 막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 기존의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 제도들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제도로의 통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의 수준 하락과 수급 조건성(conditionality) 강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윤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아울러 전 지구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조직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사이의 연대가 붕괴되어왔다는 것, 복지수급자들, 이민자들, 이주노동자들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악마화하는 흐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난하고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흐름이 전개되어왔다는 것 또한 지적하고 있다.

3장은 비정규, 임시, 플랫폼 노동의 급증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기존의 표준적 고용 모델을 침식시켜왔음을 드러낸다. 먼저 주 5일 40시간 노동, 유급 연차휴가, 고용조건과 직무, 초과근무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용계약, 사회보험의 보호 등으로 대표되는 표준적 고용 모델은 항상 불완전했으며 보편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른바 복지국가 황금기에는 가족임금제와 공사분리에 기초한 전통적인 성별분업 구조에 기반하면서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참가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시간제, 임시직 노동이 급증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저자는 컴퓨터 활용과 통신기술의 발달이 노동의 재배치와 원격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용이해진 전 지구적 노동분업,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은 표준적 고용 모델을 한층 더 침식시켰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영시간계약 노동과 임시직 노동과 같은 불안정 노동의 급증, 실제로는 자본에 종속적이지만 겉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동자(“가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에서 디지털 및 알고리즘적 형태의 통제와 관리로의 변화를 뜻하는 노동의 일반적인 ‘플랫폼화’ 경향의 전개 등으로 귀결되었음을 지적한다.

4장은 젠더 분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핀다. 노동시장과 복지제도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을 각각 악화시킴으로써 악순환구조를 낳는 형태로 상호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젠더평등과 삶의 질, 일 생활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20세기 영국 복지국가의 첫 번째 형태인

애틀리 버전(Attlee version)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영국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독립적인 시민으로 대우하기보다는 남성과는 다른 존재, 즉 어머니, 배우자, 돌보는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젠더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환기시킨다. 대학교육의 팽창, 상대적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 피임약의 도입과 성적 자유의 확장 등으로 특징되는 1960년대와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70년대를 지나면서 비록 여성의 공식노동시장 참가는 증가하긴 했지만, 종사하는 직업과 산업 면에서 남성과의 분리가 강하게 존재했고 시간제 일자리 종사 비율도 훨씬 더 높으며 주로는 이차소득자의 지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였음을 지적한다. 저자에 따르면, 가정에서의 젠더 분업은 여성들이 집에서 무급으로 수행하는 돌봄, 요리, 청소 등의 기술들이 노동시장에서 낮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사실,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인한 시간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가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일시적이거나 산발적으로 일하게 되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직장에서의 성과 면에서 남성에 비해 크게 불리하게 된다는 사실 등이 상호작용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분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분업 형태는 결코 불변인 것은 아니며, 노동조직과 노동과정에 도입되고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들과 혁신들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새로운 기회요인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과정을 단순화하는 자동화나 관료조직에서의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과정의 표준화는 노동자나 관리자로서 남성에 비한 여성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저임금화나 탈숙련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특별히 여성의 원격근무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정보처리업무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층 분할 구조(two-tier segmentation)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이유를 저자는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서의 상당히 불평등한 젠더 분업에서 찾는다. 복지급여와 복지서비스의 삭감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여성의 강제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결합하여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서의 시간압박을 초래했으며, 가사노동의 시장화와 상품화 경향, 그리고 시간빈곤이 소득빈곤을 낳음으로써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간 악순환 경향을 추동했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소득빈곤이 시간빈곤을 뒤쫓는 악순환과정이 심각한데,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은 추가소득을 필요로 한다”→“노동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할 필요가 있다”→“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이 더 줄어든다”→“시장에서 가사서비스를 구입한다”→“플랫폼이 성장한다”→“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증가한다”→“노동자들은 추가소득을 필요로 한다”(시점과 종점을 총 여섯 문장 중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음)로 묘사된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 가사노동에 임하므로 이러한 악순환과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악순환과정은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서의 상당히 불평등한 젠더 분업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달성할 가능성은 요원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노동시장, 복지제도, 젠더평등의 역사적 전개와 변화를 분석한 후, 저자는 5~8장에서 21세기의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5장은 복지국가 재분배 기제의 역진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비판하고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 재분배 기제의 역진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진술의 대표적인 예

로 저자는 ‘영국 복지국가는 너무나 관대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이주자들이 영국으로 들어온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너무도 많은 복지 식객들(welfare scroungers)이 있다’, ‘세액공제는 진보적인 혁신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기업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다’, ‘소득세 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벌주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은 투자를 몰아내고 일자리를 파괴한다’, ‘민간 부문이 국가에 비해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오해들 내지 잘못된 가정들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긴축 기조의 지속, 복지국가의 공동화를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진술을 체계적으로 논박하는 한편 보편성과 재분배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얼핏 보기에는 저소득, 저임금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각종 세액공제 제도가 실제로는 저소득, 저임금 가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구조를 지속하거나 고착화함으로써 고용주들을 위한 거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보조금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McKinsey Global Institute와 유니버설 크레딧 등의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러 반론들에 맞서면서, 그 이하로는 더이상 떨어지지 않는 임금의 최저수준 내지 하한선을 설정한다는 점, 젠더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젠더평등에 기여한다는 점, 노동시장에서 차별과 분리를 감소시킴으로써 취약한 집단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다국적기업들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우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6장은 진정으로 재분배적인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논한다. 재분배의 원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보편성의 원칙이며, 보편적 복지는 사회연대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편성과 재분배를 함께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모델의 설계에서 최근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책대안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① 개인의 자립과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고, ② 기존의 복지청구자들, 무급노동과 유급노동 사이의 경계가 유동적이고 이동하는 지식기반 경제에 의존하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낙인효과, 오류, 시간 지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③ 아동빈곤을 비롯한 빈곤의 감소, 사회연대의 증진, 공동생활의 장려,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의미에서의 ‘긍정적 유연안전성(positive flexicurity)’의 제고(Gilbert, Huws and Yi, 2019),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와 고생산성으로 대표되는 고진로 경제(high road economy)로의 전환, 노인, 장애인 등의 자립과 존엄성 제고, 문화예술활동의 증진 등을 촉진할 수 있고, ④ 무엇보다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관료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와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재분배에 부정적일 수 있는 위험들도 경고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열악해질 위험, ② 높은 최저임금과 과업에 따른 임금지급체계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분배가 역진적으로 이루어질 위험, ③ 기업별과 산별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들, 기업연금을 비롯한 기존 기업복지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사회보험의 고용주 부담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협상력이 약화될 위험, ④ 거주가 아니라 국적에 따라 수급자격을 부여할 경우 이주 또는 인종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적이고 착취적인 노동시장의 이

층구조를 형성하며,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할 위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위험들을 피하는 것은 곧 보편적 기본소득이 진정으로 재분배적이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저자의 이러한 경고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정책들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보편적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다양한 사회개혁과제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 이를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과 동시에 수많은 사회개혁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

7장은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새 헌장(이하 새 헌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새 헌장은 전체 노동시장을 아우르는 새로운 법적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는 우선 고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 자영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프리랜서를 위한 일련의 새로운 권리와 보호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조세와 사회보험 제도, 복지 수급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규칙의 마련,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될 권리, 연금, 상병수당, 모성수당 등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종속노동자들(dependent workers)의 권리와 이들의 노동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중개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 자영업자와 종속노동자 지위를 합리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며,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연대와 그들 스스로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새로운 기술 및 노동조직 환경에 맞게 노동자들에게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담아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복수의 장소에서 일하는 상황, 사이버공간에서도 건강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장(workplace)’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험을 통한 노동자의 보호, 노동자, 노동조합,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훈련, 심리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일반대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발생 시의 합리적인 보고절차와 처벌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알고리즘적 관리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거나 접속할 권한을 가지는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정하며 삭제할 것인지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젠더, 장애, 인종 등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는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해 채용을 결정하거나 고객 평가에 기반하여 고용 중단이나 지불 철회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의 지원을 받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한다. 고용주들은 직통 전화나 이메일 주소 제공을 통해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전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하지만 잘못 정의되었거나 서서히 약화되어 온 권리들을 업데이트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외에도 더 많은 과제들이 존재할 것임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새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노동조합의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한 시

민권을 실질적으로 신장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여러 개혁조치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 장의 끝에서, 저자는 실제 시행과 집행을 위한 방안으로 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건강과 안전, 훈련, 노동조건 등에 대한 법적 의무 명시, 강제보험 가입 등의 조건들을 부과하기, ② 지방당국이 집행할 수 있는 지방계약을 활용하여 모범사례를 촉진하기, ③ 전국적 집행절차들을 변화시키기(첫 번째 층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쉽게 접근가능한 일선 정보 서비스front-line information service를 확립하고, 두 번째 층위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전문 인력을 갖추어 일선 직원을 위한 훈련, 웹사이트와 간행물을 통한 노동자, 노동시장 중개기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전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자문 제공 등을 담당하는 서비스를 수립하며, 세 번째 층위에서는 국내 및 국제 기업의 현지 기업이나 지사를 조사할 권한과 능력을 갖춘 지역 수준에서 운영되는 조사관 팀을 결성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8장은 기존의 여러 공공서비스들이 국가에 의해서 공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재분배와 평등에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잠재적인 서비스들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수송, 음식 배달, 가사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저자는 각 지역의 수요와 필요에 따른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참여적인 형태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취하는 것, 전후 복지국가에서 추구했던 목표들뿐만 아니라 그것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젠더 평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도 더불어 추구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한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공공성 강화는 생태·환경, 젠더 평등, 일생활균형, 양질의 일자리 등 공공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9장에서는 역진적이고 역기능적으로 변형되어온 복지국가의 방향을 누진적이고 순기능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보편성의 원칙을 회복시키기 위한, 젠더평등, 노동자의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여기서 저자는 ① 세계화라는 맥락과 제약조건을 고려한 국민국가의 중요성과 역할(예를 들면, 새로운 정책의 제정,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공정한 과세), ② 선거 개혁을 통한 비례민주주의의 실질적 도입, ③ 일국내 정권 창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닌 초국적 수준에서의 다른 정부들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④ 전국적 긴축 기조에 맞서기 위한 지역 수준에서의 전략 개발의 긴요성, ⑤ 새로운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상향식bottom-up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지역 정책실험들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기술이 기존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21세기에 적합한 수단(모든 사람들이 빈곤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젠더평등과 삶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혁신이 필수임을 역설한다.

이 책은 영국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20세기 복지국가, 노동시장, 젠더평등이 소위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전통적인 고용 및 복지 모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는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 않음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향수에 빠져 전후 복지국가 제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복지국가 제도의 토대가 되었던 원칙들에 주목하면서 21세기의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여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그 원칙들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고용 및 복지 모델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보편적 기본소득,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관한 새 헌장, 공공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것 역시 이 책의 주요한 기여이다. 특별히 공공선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논의하면서 서술한 다음의 문장들은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참여소득(Pérez-Muñoz, 2016; 2018)이나 일자리보장 프로그램(Tcherneva, 2020)(을 평가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수요와 공급의 보다 정확한 매칭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옵션을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선될 것이다. 온라인으로 관리되는 통합된 지역 네트워크들은 지역 공급사슬에서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를 함께 연결하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지역경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역 생산자들을 위한 시장을 열 수 있다”(167-168면).

역진적이고 역기능적인 방향으로 변형되어온 복지국가를 누진적이고 순기능적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보편성의 원칙을 회복시키기 위한, 젠더평등, 노동자의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재창조 방안을 제시한 점 역시 주목할만하다. 우리는 저자의 다양한 제언, 곧 세계화로 인해 더 큰 제약에 직면하기는 했지만 국민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일국적 대응과 정책의 제약과 한계는 분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정부들과의 협력이 더불어 요청된다는 것, 긴축 기조의 지속과 우파 포퓰리즘의 발흥 위험을 피하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비례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 지역 단위에서 새로운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다양한 상향식 정책실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저자는 현재 복지국가가 빈곤층으로부터 부유층으로,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역진적인 재분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근거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역진성을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자가 들고 있는 근거, 즉 영국에서 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세부담과 가장 높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로 복지국가는 주거, 보건, 교육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사적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많은 기업들이 정부계약으로부터 막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 기존의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세액공제 제도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제도로의 통폐합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의 수준 하락과 수급 조건성 강화가 진행되었다는 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윤 과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각각 역진적인 재분배를 낳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로서의 복지국가 재분배 기제가 역진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서평자는 통상적인 재분배 기제, 즉 조세와 복지급여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소득 분포와 가처분소득 분포의 비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분배의 일부(재분배가 아닌 분배 과정에서 기업과 부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면 일부 국가의 경우 복지국가가 실제로 역진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과 동반되어야 할 개혁과제들을 적시하면서 저자는 일반조세^{general taxation}의 역진성에 관해서 지적하고 사회보험의 고용주 기여분 유지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특정 국가 내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상대적 비중 자체보다는 양자 간의 조화가 더 중요할 수 있으며(장제우, 2020), 일반조세도 기본소득의 지급과 결합될 경우 누진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Yi, 2020). 또한 사회보험의 고용주 기여분 유지의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서의 개혁을 더불어 제시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수록,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기존의 방식이 기업의 고용 유지 또는 신규 채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플랫폼 독점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윤 대비 고용인원이 적으며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이러한 경향이 경제 전체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제안과 같이 매출·이익 기준으로 사회보험의 고용주 기여분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홍민기, 장지연, 2020).

20세기 복지국가의 한계를 다각도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동 시장의 변화와 복지제도의 개혁과제에 적합한 21세기 복지국가의 재창조를 실현하고 싶은 모든 이에 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참고문헌

- 장제우. (2020). 『장제우의 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파주: 사이드웨이.
- 홍민기, 장지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정의당.
- Gilbert, Richard, Ursula Huws and Gunmin Yi. (2020). “Employment Market Effects of Basic Income”. In: The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p. 47-72), Cham: Palgrave Macmillan.
- Pérez-Muñoz, Cristian. (2016). “A Defense of Participation Income”. *Journal of Public Policy*, 36(2), 169-193.
- Pérez-Muñoz, Cristian. (2018). “Participation Income and the Provision of Socially Valuable Activities”. *Political Quarterly*, 89(2), 268-272.
- Tcheneva, Pavlina R. (2020). *The Case for a Job Guarantee*. Cambridge and Medford: Polity Press.
- Yi, Gunmin. (2020). “Seven Propositions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of the UBI-FIT Model”. Paper for the 32nd Annual EAEPE Conference 2020, 2-4 September 2020, Online Event: The Evolution of Capitalist Structures: Uncertainty,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 [3 September 2020.]

아시아미래포럼의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라는 주제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2020년 12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본소득은 여러 강연과 세션에서 자주 언급되고, 때론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기조연설자 중의 한 명인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동양아프리카학)가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팬데믹이 야기한 위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거론했고, 또 다른 기조연설자이자 사회 정책에 실험적 요소를 접목한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교수(경제학)는 사전 인터뷰에서 지자체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이 향후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의 젠더’라는 주제의 세션에서도 코로나를 돌봄의 재분배 위기로 정의 내리고 보편적 돌봄소득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팬데믹 시기에 돌봄 노동자를 위한 무조건적 현금 수당이 필요하단 의견이었다.

포럼 이틀날엔 두 세션에서 기본소득을 다뤘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세션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인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와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이란 세션이었다.

가이 스탠딩 “우리 모두의 회복력은 취약계층의 회복력에 달려있다.”

보통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에선 당일날 논의된 여러 주제와 토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메인 뉴스로 다룬다. 2020 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가이 스탠딩의 기조연설과 이어진 토론이 다음날 한겨레신문의 메인 기사였다. 국내에 번역된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등의 저서로 알려진 가이 스탠딩은 그가 2020년도 출간한 『Battling 8 giants: Basic Income Now』를 토대로 논지를 펼쳐나갔다. “팬데믹이 당도하기 이전에도 이미 세계는 지속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역설한 그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을 ‘여덟 명의 거인’이라고 지목했다. ‘거인 giant’은 영국 복지국가 체계의 기본 토대가 되었던 ‘베버리지 보고서’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2년에 내놓은 이 보고서에서 당시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다섯 거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 스탠딩이 제시한 여덟 거인은 불평등, 불안, 부채, 스트레스, 불안정 노동 계층의 만연화, 로봇과 자동화의 위협, 동식물의 멸종과 기후위기, 파시즘적인 포퓰리즘 등이다. 그는 “이 거인들을 단일 정책으로 죽일 순 없지만, 그들 모두의 위협을 훨씬 약화시키는 데 기본소득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 스탠딩의 메시지와 그가 만들어내는 논쟁은 한국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2020년 3월 11일,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가이 스탠딩은 스페인 유력 매체인 《엘 파이스》에 코로나 위기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한국에서도 재난 기본소득 논쟁이 가열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영국에선 고용유지나 해고자 지원 등을 위주로 코로나 대응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가이 스탠딩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기고하며 “프레카리아

트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할 것”, “현 정부의 정책으로 수백만 명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집에서 굶어 죽거나, 밖에 나가 일거리를 찾다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재난 기본소득 논쟁은 더이상 진전이 없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탄소세(환경세)에 대해서도 가이 스탠딩은 명쾌한 논지를 펼쳤다. 그는 아시아미래포럼 기조강연서 “환경세로 거둔 자금이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것”이란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세금제도가 수용될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가이 스탠딩과 국내 토론자들 사이에 충분한 논박이 오고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웠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스탠딩 교수의 분석에는 동의하지만, 기본소득이란 대응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의 평소 주장대로 “기본소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충분히 돕지 못하는 가성비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BIEN의 공동 창립자인 가이 스탠딩은 21세기 기본소득의 저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같은 표준화된 반대에 가장 많이 맞선 인물이지만, 이날 그는 짧았던 마지막 발언 기회를 재반박에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기회에 토론자 패널 중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기본소득은 페미니즘적인 정책”이라고도 덧붙였다.

새로운 복지체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기본소득

아시아미래포럼 이틀날엔 두 세션이 기본소득을 다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가 함께 준비한 ‘팬데믹 시대의 사회보장’이란 세션에는 백승호 교수가 네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앞선 세 명의 발제자들도 기본소득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오바

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아동가족국 차관보를 지낸 마리아 칸찬 조지타운대 공공정책대학원장은 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중산층’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분석하며 저소득층에겐 효과가 미약했고, 불안정 노동계층이 증가하고 가족구성이 달라지는 상황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대안은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과세 기반을 넓혀 모든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장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년 한도 내에서 청년, 여성, 노년기 등 생애맞춤형으로 설계된 기본소득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국내 학자는 사회보장 체계의 문제를 다루는 기존의 방법론인 고용보험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과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확대, 사회서비스원 도입 등을 주로 언급한 반면, 전면적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유보적이었다. 이호근 교수는 “전면적 기본소득이 더 나은 분배인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고, 복지급여와 관련해 매우 복잡한 법리와 법률 체계가 전제되는 데 기본소득 논의가 이를 너무 단순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고 묻는다”며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고, 그런 주장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고, 오히려 기존 사회보험을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와 기본소득의 병행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의 주장은 ‘중층적 안전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소득의 편중과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안전망으로서 ‘선분배’로서의 기본소

득이 1층에 깔리고, 2차적 안전망인 사회보험을 개혁해 기존에 포괄하지 못한 대상을 보호하며, 3차적 안전망인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다. 백 교수는 1층에 깔린 기본소득이 3층의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연계해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급자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보탤다. 은민수 고려대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는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이나 복지국가, 시민주의 체제 등과 대비시켜 보는 시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도 “이런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는 균형 예산을 조건으로 두고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다른 사회보장 체계나 복지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증세와 같은 기본소득 재원 방안이 확고히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비판은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운동의 주체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기본소득이 노동의 세력화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저는 오히려 반대 방향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기존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형성이 가능했던 것은 같은 작업장, 같은 시간대에 비교적 균질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 집단이 존재하는 토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토대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 교수는 “직접적인 임금 상향이 아니더라도 자본 측에 과세해 사회적 부담을 늘리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기본적 생계가 보장된다는 확실성이 있어야 위험한 노동에 대한 거부도가 높아지고, 집단의 협상력도 높아진다”며 “청년들 인터뷰를 해보면 극단적인 경쟁 시대에 노동소득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초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 열풍이 굉장하다”며 “이런 청년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가 있어야 연대의 가능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발표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청사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한겨레》측과 함께 마련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효과성 제고 방안’ 세션은 경기도가 2021년 실제 시행할 예정인 ‘농촌기본소득’의 실행 계획이 처음 대중에 공개되는 자리였다. 농촌기본소득 설계를 맡은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사는 이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목적은 보편적 기본소득이 인간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과 농촌 지역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기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논의된 ‘농민기본소득’과는 다르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인구소멸 위험지수, 고령인구 비율, 사회복지시설 대비 인구 비중 등 10개 지표를 활용해 7개 지표의 기준을 통과한 경기도 내 27개 면 지역을 1차로 추출했고, 이들 지역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각 지역의 신청을 받고 심사해 선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경기도쪽에 제출한 상황이다. 지급액은 월10만 원 안~월50만 원 안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고, 지급 기간은 2년이 유력한 상황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올해 하반기 시행될 계획이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토론은 주로 ‘어떻게 해야 정교한 정책실험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던 ‘서울시 청년기본소득 정책 실험’ 설계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시 주의할 점들을 공유했고, 김현철 홍콩과기대 교수 겸 코넬대 교수는 자신이 말라위에서 직접 수행한 정책실험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사는 먼저 정책실험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이 우리가 정말 지향하는 사회상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예로 들며 “실업자의 근로유인 효과가 실험에서 주로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였는데, 팬데믹과 탈성장, 기후변화 등을 감안하면 노동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은 왜 할 수 없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험에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세션에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11월 24일에 주최한 농촌기본소득 효과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안효상 상임이사사는 “기본소득은 기존 사회의 구조와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 도입되지 않는다. 조세체계 전반을 흔들며 재원을 마련해야 도입될 수 있고, 정책실험으로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미치는 효과 등을 볼 수 없다. 결국 기본소득에 적용되는 정책실험은 기본소득의 반쪽 면모만을 보는 실험일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다.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처럼 현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기본소득은 점점 단골 주제가 되어가고 있다.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생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기본소득 공론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재환

경기도 홍보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 리서치팀장

코로나19가 전 인류를 덮친 지도 1년이 넘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12일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수를 약 8천9백만 명으로 집계했다.¹⁾ 이러한 확산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종교집회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접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돼 버렸다. 전문가들은 만일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온라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선택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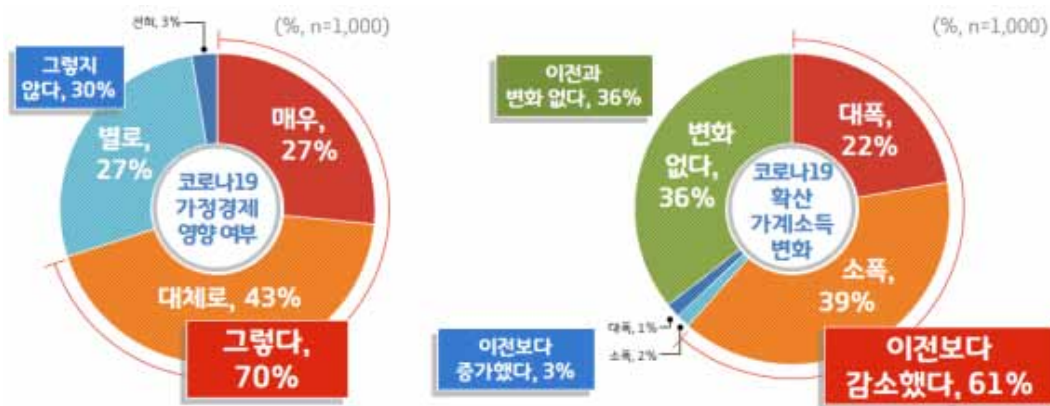
곳곳이 산산조각 난 것만은 아니다.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 의제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의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 소개할 기본소득^{Basic Income}처럼 말이다.

1) <https://www.who.int/>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관심이 깊어지다

2019년 여름에만 해도 기본소득은 우리 국민들에게 생소한 의제였다. 경기도가 '19년 7월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기본소득에 대해 '처음 들어 봤다'(45%)고 답했다. 나머지 55% 응답자 중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까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부분인 45%를 차지할 정도였다.²⁾ 이렇듯 기본소득은 미지의 신상품이었다. 시민사회에서의 토론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 전에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게 시급한 의제였다.

2020년 들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참고로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해 3월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로 가정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61%는 가계소득이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³⁾ 국가 차원에서의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그림 코로나19 가정경제 영향여부(左), 코로나19 확산 가계소득 변화(右)>

우리나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 방식을 결정하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됐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자, 자연스레 시민사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다.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주로 '선별하는 게 쉽지 않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민 차원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지난해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명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했다. 여기에 더해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각자의 재정상황에 맞추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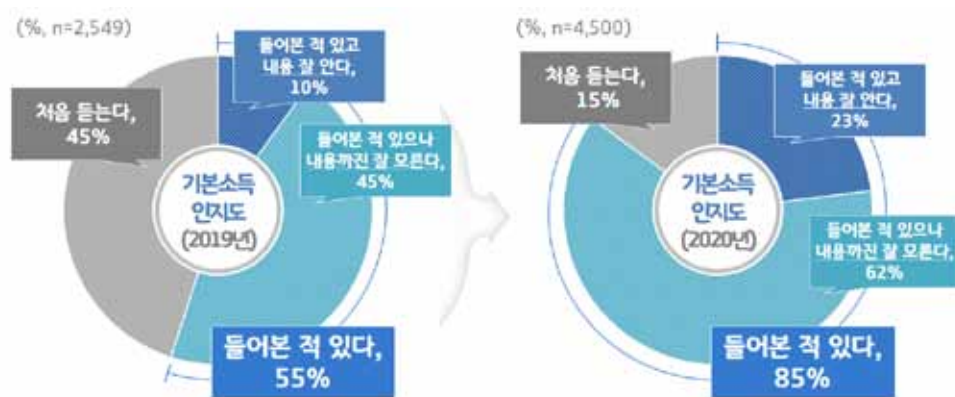
2) 경기도(2019).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3) 경기도(2020). 코로나19 확산 관련 긴급 여론조사 (코로나 확산세 보였던 '20.3.16~17 조사).

인당 5만 원(부천, 의정부, 김포, 의왕, 광명, 하남)부터 40만 원(포천)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했다.

정부가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였으나, 4월 22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다만 여러 논란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와 사회지도층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 때문인지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8월 경기도가 도민 4,500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85%로 분석됐다. 1년 전인 2019년 55%에 비해 30%포인트나 오른 결과다. ‘처음 들어 봤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⁴⁾ 그렇게 기본소득은 시민사회에 중요하게 파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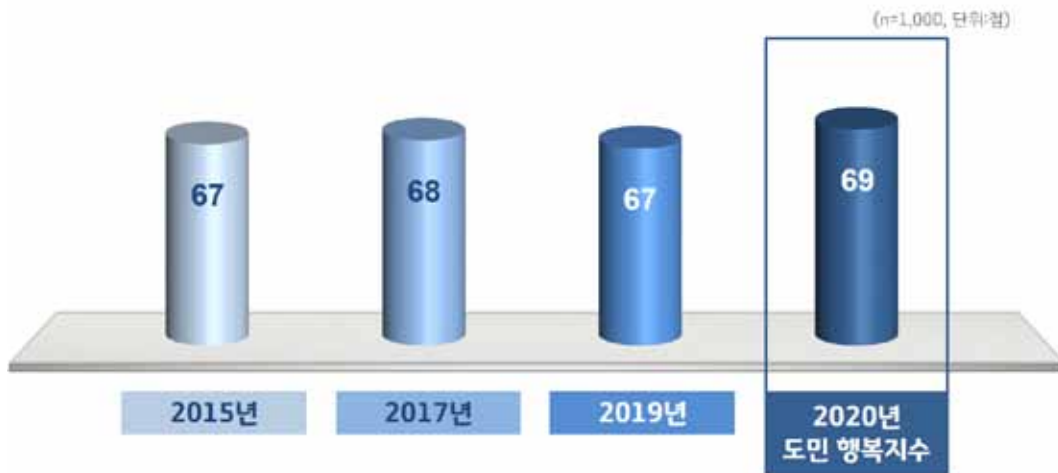
< 그림 2 기본소득 인지도 (2019년 vs. 2020년) >

모두를 행복하게, 기본소득

그렇다면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시민들의 행복감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경기도민 행복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원래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 1년 만에 행복도를 진단했다. 조사는 '20년 7월 24일부터 25일 간 양일간 진행됐는데,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시점이다. 결과를 보면, 2020년 경기도민 행복지수는 69점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오히려 2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⁵⁾

4)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5) 경기도(2020). 2020년 경기도민 행복도 조사.



< 그림3 경기도민 행복지수 추이 >

2019년 경기도민 행복도를 월 가구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행복도가 눈에 띄게 낮았다. 행복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또 기본 욕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 특정 소득수준부터 행복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행복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시점 이후로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이 정체된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인데,⁶⁾ 경기도민의 행복도도 이 같은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 그림 4 월 가구소득별 경기도민 행복지수 비교 (2019년 vs. 2020년) >

하지만 2020년 경기도민 행복도는 1년 전과 큰 변화를 나타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의 행복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계층의 행복도는 '19년 48점에서 '20년 57점으로 9점 상승했고 ▲월 가구소득 100만 원대 계층은 58점에서 63점으로 5점 ▲월 가구소득 200만 원대는 63점에서 67점으로 4점 ▲월 가구소득 300만 원대는 64점에서 70점으로 6점이 올랐다. 이들 계층이 전체 경기도민의 행복도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상승패턴은 월 가구소득 400만 원대까지 확인됐다.

이스털린은 기초생활수준이 충족되면 소득의 증가가 행복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

6) 매경시사용어사전.

명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이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민전체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 증진이 중요한 문제임을 함의하는데,⁷⁾ 이러한 현상이 지난해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됐던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행복도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쇼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을 상승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기본소득 공론화로 미래를 준비하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매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3회째다.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세계적인 석학들과 토론하고, 정책 내용을 쉽게 풀어 공론화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는 2019년 ‘복지정책의 미래와 기본소득’, 2020년 ‘기본소득 도입과 자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공론화조사를 실시했다. 미래 의제에 대해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경기도의 선언이었다. 2년 연속 동일 주제로 공론화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최초였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 전례 없던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는 일반 여론조사에 속의^{Deliberation}를 더한 조사기법이다.⁸⁾ 토론을 통한 숙의형 여론조사로, 기본소득과 같이 시민사회의 평균적인 이해도가 낮아 숙의가 요구되는 주제에 적합하다.⁹⁾

’20년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아무런 숙의 없이 4,500명의 경기도민을 1차로 조사한다. 이 중 이중추출^{Double Sampling}로 선정된 216명의 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자료집을 배포하고 난 후 2차 조사를(숙의토론회 개최 직전),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 일정이 마무리될 때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숙의자료집은 숙의토론회 개최 열흘 전에 배포하였다.

’20년 경기도 공론화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을 살펴보면, 1차 조사결과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50%)과 반대한다는 입장(42%)의 차이가 8%포인트로 크지 않았다. 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을 차지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게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여론이 숙의 토론을 거치면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은 2차 조사에서 66%, 3차 조사에서 7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1.6배 증가한 것이다. 3차 조사에서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7) 기획재정부(2012). 행복지수의 세계적 중요성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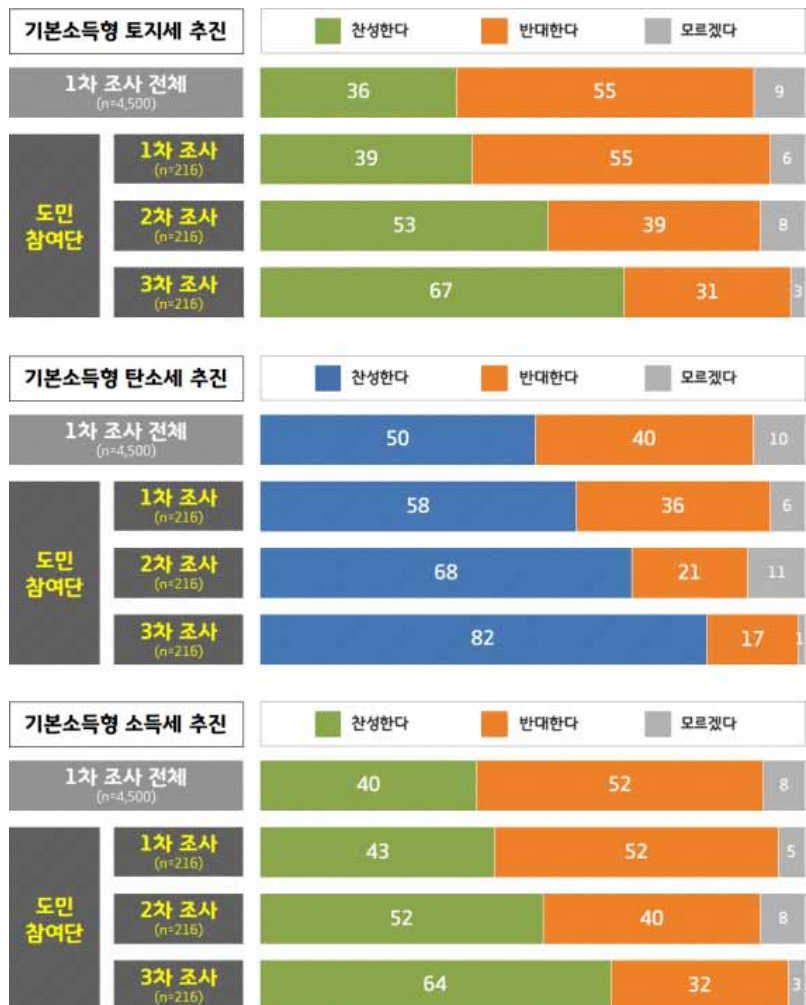
8) 배용진(2017.8.20). 27개국 공론조사 사례. 《주간조선》.

9) 한국행정연구원(2017). 「국가공론위원회 조직 및 운영방안」 이슈페이퍼, 제56호.



<그림 5 기본소득 도입 찬반 (2020 경기도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 추진에 대한 찬반도 살펴보았다. ▲ 기본소득형 토지세에 대한 찬성률은 39%에서 숙의 토론 이후 67%까지 1.7배 상승, ▲기본소득형 소득세는 43%에서 64%까지 1.5배 상승했다.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58%에서 82%까지 1.4배 상승했는데, 제시된 세 가지 재원 마련 방안 중 가장 높았다. 대국민 숙의가 잘 진행된다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그림 6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별 찬반 (2020 경기도 공론화조사 결과)>

기본소득 도입 시 증세 동의율 역시 속의 과정을 거친 후 드라마틱하게 변화했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현재보다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최초 34%에서 67%까지 증가한 것이다. 거의 2배 가까운 변화다.¹⁰⁾

기본소득 전국 공론화를 위해 발을 내딛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낯선 주제다.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해야 할 일도 많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도입부터 시행까지 단계별로 도민 의사를 수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책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집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의제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도민 여론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단순한 여론조사는 대중들이 깊은 생각 없이 응답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통한 공론조사”를 제시했다.¹¹⁾

연세대학교 최영준 교수는 경기도 공론화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될 지는 전문가도 정치인도 잘 모른다”며 “기본소득 공론화가 가지는 의미는 불확실한 미래를 시민들이 직접,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¹²⁾

공론화 무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2020년 도민참여단으로 참여했던 박세은 씨는 “기본소득은 전국 단위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며 “경기도만의 속의 토론 과정은 좋은 시도였지만 향후 전국적인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¹³⁾ 공론화의 공간적 범위를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춘석 (주)한국리서치 전무는 “시민들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의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하고, 정책과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의 소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¹⁴⁾ 2019년 경기도 공론화에는 2,500명의 일반도민과 165명의 도민참여단이, 2020년에는 4,500명의 일반도민과 239명의 도민참여단이 속의민주주의 과정에 함께 해주셨다. 기본소득에 대한 속의형 민주주의 의사수렴 과정에는 이들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다. 도민들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밝은 세상을 위해 경청하고 토론했다. 이들이 내딛은 첫 발걸음은 그 자체로 의미 있게 평가될 것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발의되었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실시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법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한다.

10)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

11) 경기도(2019).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

12) 경기도(2019).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영상백서.

13) 경기도(2020).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영상백서.

14) 김춘석(2020,10.6).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의 첫 출발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지난 10월 6일,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아쉽게도 코로나 여파로 국회에서 진행하진 못했다. 젊은 거리,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녹색당 성미선 운영위원장, 미래당 우인철 정책위원장, 여성의당 김진아 대표

21대 국회는 기본소득 국회라 불려도 무방하다. 5월 30일 개원 직후, 기본소득 관련 토론회가 수차례 열렸고, 토론회가 열릴 당시 ‘기본소득’ 이름이 들어간 법안만 3개가 발의된 상황이었다.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추가로 재난지원금 요구가 이어지면서 선별이나 보편이나 논란이 불붙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요구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제1야당의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이 들어가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언한 기초단체장도 청년 기본소득 실험 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 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 바로, ‘어떤 기본소득인가’에 대한 논의다.

지난 8월 10일,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 출범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렸다. 이후, 미래당까지 결합하면서 지난 10월 6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 주관으로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를 열었다. 어떤 기본소득을 어떤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 도입할 수 있을지 최초로 논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각 정당의 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좌장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강남훈 이사장이 맡았고, 4개 정당의 발제 후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기본소득당은 공통부를 배당해야 한다는 기조로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기본소득 60만 원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생계급여 이상의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며 60만 원 모델을 설계한 것이다. 60만 원은 모든 통합소득에 15%의 세율로 과세해서 마련하는 ‘시민 기본소득’, 종합부동산세 대신 토지가격 0.5%~2%의 토지보유세로 과세해서 마련하는 ‘토지 기본소득’, 탄소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1톤 당 10만 원의 탄소세로 과세해서 마련하는 ‘탄소세 기본소득’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빅데이터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 등 신설로 마련하는 ‘데이터 기본소득’,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기본소득’ 등도 제안했다.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도 덧붙였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기적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정기적이고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2021년 한시적으로 분기별 코로나 대비 지원금 50만 원씩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난 12월 1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소득공론화법 발의 계획을 밝혔고, 곧 발의가 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목적형 기본소득부터의 시행이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토지 기본소득’, 기후재앙에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탄소세 기본소득’부터 시행하는 것을 기본소득 도입을 위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에 참석한 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이사장,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교성 교수

한 구체적 모델로 제안했다.

녹색당 역시 ‘공유재’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소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으로 불안 해소, 불평등 완화, 생태적 전환, 노동 해방, 나아가 젠더 평등 등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봤다. 나아가 단기적으로 증세와 조세개혁을 이루고, 중기적으로는 기존의 사회체제 개혁과 생태적 전환의 과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유용한 수단으로써 기본소득에 접근했다.

녹색당은 2016년, 2020년 총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1년 도입모델로 ‘자율선택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만 17세 이하 국민에게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청소년수당 등으로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개인별로 금액을 인상해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만 18세에서 64세 이하 시민은 세 가지 유형 기본소득 중 ‘자율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놴다. 1인당 기본소득 총액 5400만 원 기준을 설정하고, 월 150만 원씩 3년, 월 50만 원씩 9년, 월 10만 원씩 45년 등 세 가지 유형 중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당은 월 100만 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다양한 차원의 검토와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가지 실험경로를 제안했다. 하나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세대에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식이다.

전자의 방식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민 30만 원 기본소득 긴급도입을 제안했다. 당장 불용예산, 낭비예산, 미집행예산 등을 조정하면 15조 가량의 긴급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혹은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월 30만 원 기본소득은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국민 기본소득 공동행동(가칭)’ 결성도 제안했다. 후자의 방식으로는 ‘청년-노인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했다. 청년층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기간 중 3년을 선택하여 매월 105만 원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총 3,800만 원을 지급하고, 노년층은 만 65세 이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정 세대에만 지급하는 것에 따른 저항을 일정부분 상쇄시키기 위해 ‘청년-노인 기본소득 동맹’ 방식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당은 신자유주의 팽창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코로나 19로 인한 여성 실직 등을 위기로 진단했다. 위기의 시대 속 기본소득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노동과 소득 간의 연결고리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각 당 정책 담당자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박유호 정책실장, 녹색당 김지윤 정책팀장, 여성의 당 윤지선 정책위원회 의장

를 끌어내는 개념이며,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복지정책 시스템이 여성을 아우르지 못한 현실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임을 주목했다.

한편, 여성의 노동, 여성빈곤, 여성의 자유, 성별분업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효과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서 저임금 시간제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해고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여성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가족중심 사회보장제도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시민에게 지급함으로써 가족 내 불평등한 분배관계를 해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여성 차별은 다각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기본소득과 함께 사회제도를 촘촘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간 재구조화, 돌봄노동의 공공화와 더불어 임금공시제, 채용공시제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교성 교수는 기본소득 이행전략 관련 토론주제를 발표했다. 완전 기본소득으로 이행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온건형, 개혁형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충분하지 않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과 특정 인구 집단에 지급함으로써 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과정을 제안했다. 각 정당에서 제안한 방식이 두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속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함께 현존하는 사회수당의 확대부터 시작하는 방향으로 기본소득 도입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함께 한 청중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날의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토론회 개최로 머물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는 공동행보를 이어갔다.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거세졌다. 또다시 정부여당이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못 박을 때, 4개 정당은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라고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정기적 지급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정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쉽게도 정부예산안에 4개 정당의 제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여느 때보다 강한 기세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때, 국민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는 또다시 불타오를 것이다. 4개 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안아 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이날의 토론회는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넓히는 출발점이었다. 연석회의가 4개 정당을 넘어 모든 정당과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기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본소득 4당 4색 토론회에 가다

김찬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

한국에는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다. 원내에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있고 원외에는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강령의 기본정책 1-1에 ‘기본소득’을 명시하고 있지만 윤희숙 안은 ‘최소보장소득(guaranteed minimum income)’이고 오세훈의 ‘안심소득제’는 변형된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서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당도 청년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6월에 발표한 ‘K-기본소득’ 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복지욕구별 차등지급’과 EITC 등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일종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아짐에 따라, 이렇듯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성격과 구상이 전혀 다른 ‘무임승차’ 정당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 사이의 교류와 연대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6일 ‘청년문화공간JU동고동’에서 반가운 행사가 열렸다.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개 정당 연석회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열린 ‘기본소득 도입방안 토론회-4당4색’ 행사가 그것이다. 이에 앞서 8월 10일 기본소득당, 녹색당, 여성의당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3개 정당 연석회의’를 결성한 바 있는데, 이에 미래당이 참여하여 4개 정당 연석회의로 확대된 것이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과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고,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로 그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 특히 그동안 기본소득을 지지해 온 4개 정당이 함께 모여 논의하게 된 것에 큰 의

미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강남훈 이사장은 현실적 도입에 너무 치우치면 ‘짜퉁’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고, 너무 변혁적인 방안을 주장하면 도입 자체가 실패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작게 도입되더라도 의미 있는’ 시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각 당의 발표는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의 ‘녹색당이 제안하는 기본소득’, 우인철 미래당 정책위원장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국민 30만 원 기본소득 도입’,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정책’,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기본소득과 여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녹색당은 2012년 창당 직후인 19대 총선에서 ‘농민기본소득’ 공약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 기본소득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월 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놓고, 1단계로 농민,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2단계로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1단계 ‘전환기 기본소득’, 2단계 ‘전 국민 완전 기본소득’(중위소득의 40%)으로 발전하는 단계적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김지윤 정책팀장은 지급 시기와 액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 기본소득’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만 18~64세의 시민에게 생애 전체에 걸쳐 1인당 5,4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월 150만 원씩 3년간 받는 유형1, 월 50만 원씩 9년간 받는 유형2, 월 10만 원씩 45년간 받는 유형3 사이에서 시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다. 만 1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만 18~64세의 인구 모두가 유형3을 선택할 경우 재원은 43조 정도가 소요되고, 이는 2019년 GDP의 2.25% 정도에 불과해 세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김지윤 팀장은 설명하였다. 김 팀장은 유형1과 유형2의 선택자의 경우는 초기에 소득,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의 인상과 불로소득의 종합과세, 부유세 신설, 생태세, 육류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의 신설을 통해서 다양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미래당은 2017년 창당한 ‘우리미래’가 당명을 변경한 당으로서, 2017년 창당 때부터 기본소득을 지지해 왔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청년 기본소득 3년’(‘청년 마음껏 3년법’) 도입을 주장하고, 만 19~34세의 청년이 본인이 원하는 3년의 시기를 선택하여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2020년 기준 월 105만 원)을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우인철 정책위원장은 이번 발표에서 장기적으로 월 100만 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지’로 설정하였다. 그를 위한 두 가지 경로로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 지급되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후자의 방식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구상하고 이것을 ‘청년-노인 기본소득 동맹’이라 명명하면서, 이런 모델에 따르면 초기에 기본소득 지급에서 제외되는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모두가 향후 기본소득 수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전자의 방식이 더 시급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긴급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본소득 도입운동’이 필요하므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재난지원금의 보편/정기/개별 지급을 더욱 강력히 주장하며,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2022년 대선의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치 활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하였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던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모두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노동당 총선공약으로 내놓았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직후 치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모두에게 월 6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제1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고, 2021년 전 국민에게 분기별 4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유호 기본소득당 정책실장은 먼저 월 60만 원이라는 지급액수의 성격을, 낮은 액수의 부분 기본소득과 충분한 기본소득의 이행과정에 있는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로 설명하였다. 월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위한 자원 모델로는 시민재분배기여금(15% 통합소득세)과 기존 복지급여 통합으로 209조, 토지보유세로 98조, 탄소세로 70조, 여기에 데이터세를 추가하여 총 378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정치자금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양당 중심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혁신하여, 매년 5만 원씩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그것을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 박유호 실장은 이 5가지 기본소득 설계안은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각각 독자적인 의제로도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5가지 중 부동산 불평등의 해법인 ‘토지 기본소득’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인 ‘탄소세 기본소득’을 시급한 과제로 우선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기적, 보편적 재난지원금 도입과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더하여, 기본소득 도입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제안으로 총괄하였다.

여성의당은 올해 3월 8일 여성의 날에 창당을 한 여성주의 정당으로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개별 시민 중심으로의 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의 실질적 지원’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 이러한 공약이 기본소득과 연결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윤지선 여성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본소득의 보편적 지급이 성차별 불평등 해소에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논의의 핵심으로 삼고, 기본소득이 여성의 노동, 여성의 빈곤, 여성의 자유, 성별분업의 측면에서 갖는 긍정적 측면과 한계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빈곤선 아래에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빈곤선 아래의 소득계층에서 여성의 소득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만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소득 간극을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윤 의장은 지적하였다. 또한 남성 중심적 고용관계, 결혼제도, 사회보장제도, 돌봄과 가사 시스템의 문제 등은 기본소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 의장은 기본소득이 성별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성별분업, 임금차별, 불평등한 돌봄 책임, 여성빈곤 문제 등 다양한 불평등 요인을 고려한 ‘촘촘한 사회제도의 재설계’와 연동되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조적 성차별 시스템을 타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맞춤형 사회제도가 도입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기본소득이 함께 연동될 때 성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네 정당의 발표가 있고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공저의 『기본소득이 온다』에 기술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4개 정당의 발표에 대한 논평을 진행하였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의 이행전략을 ‘혁명형’과 ‘온건형’, ‘개혁형’으로 일별하고, 단계를 건너뛰어 바로 완전기본소득으로 가는 혁명형 전략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아동수당과 같은 현재 존재하는 ‘무조건적’ 사회수당을 확대, 강화하는 방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한 방식을 플레이어의 표현을 차용하여 ‘긍정전략’이라 부르며, 현재의 사회보험 중심에서 사회수당 중심의 복지국가로 경로를 전환하여 아동수당은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대상을 확대하며, 청년수당과 장애인 사회수당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거쳐서 기본소득의 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급여를 받는 ‘한시적 시민수당’ 방안도 긍정전략 안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회수당 중심의 단계적 전략은 녹색당의 안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경제적 실현가능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 실현가능성만 문제가 될 것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자계급,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의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요한 연대는 청년, 여성, 녹색의 연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적녹보라’가 함께 모인 이번 4당4색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청중 토론은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김찬휘 운영위원이 나와, 질문의 형식으로 4당 발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먼저 녹색당의 ‘자율선택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발표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5년에 조기 수령하는 유형1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럴 경우 900조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무엇이며, 발표처럼 소득, 재산 등 일정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제한하게 된다면 기본소득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피력하였다.

두 번째 미래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판 파레이스의 완전기본소득 수준(월 77만 원)보다 높은 기본소득 목표 월 100만 원의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이 34%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 당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원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세 번째 기본소득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금액을 상회하는 월 60만 원을 구상한 것은 결국 생계급여를 폐지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제시한 4가지 중세 계획이 한꺼번에 실현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에 그 중세 계획의 일부만 실현되었을 때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또한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생계 수준의 기본소득’이라 하였는데, 그보다 작은 ‘부분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당의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문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되어야 성별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곧 작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국가혁명당의 당원 한 분이 나와 국가혁명당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 당의 ‘중산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커다란 주식회사 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국민배당금은 대한민국의 순 자산 7경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 답변 시간에서 작은 액수의 부분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모두 향후 재원을 늘리고 규모를 키운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 단계의 작은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생계급여 이하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는 생계급여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미래당은 월 100만 원의 기준은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액수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녹색당은 사람에 따라 지금 필요한 것이 삶의 방향 전환인가, 삶의 질 향상인가, 삶의 여유 추구인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기에 하나의 유형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개발해야 될 것이라 덧붙였다.

2시간의 토론회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모두 모여서 연합정당을 건설하여 함께 총선에 임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연합정당의 이름까지 만들었다. 만들지 못한 꿈속의 정당의 이름은 ‘녹색미래기본소득시대전환당’이었다. 네 정당의 이름을 합친 것이었는데, ‘녹색의 미래를 만드는 기본소득을 통해 시대를 전환하자’는 해몽을 나 나름대로 했었다. 토론회를 보면서 몇 달 전에 꾸었던 이 꿈이 다시 떠올랐다. 언젠가 이 꿈은 현실이 되리라.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독일인이 말했듯이,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녹색기본소득

(Climate Crisis and Green Basic Income)

이지은

기본소득 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지구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조건이다.

The earth is the very quintessence of the human condition.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서문 중

코로나19 이후 재앙적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고 있다. 2018년 10월 유엔 IPCC^{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1.5°C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한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다. 스웨덴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 기후 위기에 대한 대규모 시민불복종을 요구하는 ‘멸종 저항Extinction Rebellion’의 확산, 글로벌 기후 파업Global Climate Strike, 미국의 그린뉴딜의 부상과 같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혁명적 기후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오래 전부터 캐나다, 유럽 등지의 다수의 녹색당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을 지지해왔으며, 스위스에서는 eco-bonus 개념의 탄소세와 배당을 결합한 모델이 실시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의 녹색기본소득Green Basic Income¹⁾ 활동과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Basic Income News에서 다뤄졌던 주요 기사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출처를 명시하였다.

1) Pinto(2020)는 논의되고 있는 녹색기본소득Green BI를 두 가지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녹색성장 전략의 일부로 기본소득을 수용하는 환경주의적 접근environmental approach과 현재 경제체제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탈생산주의적 경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생태론적 입장ecological approach이다. 양자 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과 같이 중요한 지점에서 상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Pinto(2020)를 참고하라. 본 글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녹색기본소득 전반을 논의하였다.

1. 녹색유럽재단GEF: the Green European Foundation의 활동

녹색유럽재단은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연구·옹호단체로 Eurofoundation 중 하나이다. 2009년 ‘유럽 그린뉴딜’로 알려진 케인스주의 녹색자본주의 전략을 담은 「유럽을 위한 그린뉴딜」을 발간한 이래, 2019년 2월 「기본소득에 대한 유럽 녹색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 위 보고서에는 2017년~2018년 기간 동안 실시한 ‘모든 EU 시민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용, 유급노동을 넘어서는 무급노동에 대한 인정, 노동의 성별 분업에 대한 보편적 기본소득(이하 UBI)의 잠재력을 조사하였으며, ‘사회적 유럽’ 관점에서 EU 전역의 UBI 제안을 평가하였다(Yamamori, 2019). 이후 GEF는 기본소득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초국적 프로젝트인 ‘사고방식의 변화: 기본소득, 사회정의와 기후 영향에 대한 시민사회 대화’³⁾를 시작하여, 대중의 기본소득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일과 생산성 개념에 대한 토론을 심화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시민사회의 대화를 촉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긴급히 요구되는 생태적 전환의 도구로서 UBI를 탐색한다.

2. 탈성장 국제네트워크the Degrowth International Network의 ‘공개서한’

2020년 5월 13일 탈성장 국제네트워크는 생태·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 서한은 탈성장 국제네트워크 내의 협력 과정의 결과이며, 60개국 1,100명의 전문가와 70여 개의 단체가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하나의 운동이자 개념으로써 탈성장에 대해 10년 이상 논의해 왔으며,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 공생conviviality, 직접 민주주의, 삶의 즐거움과 같이 다른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일관된 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⁴⁾

공개서한에서는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의 새로운 근간으로서 탈성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서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전문은 한글을 포함한 18개 국어로 번역되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2) <https://gef.eu/wp-content/uploads/2019/02/GEF-Basic-Income-web.pdf>

3) <https://gef.eu/project/change-of-mindset-civil-society-dialogue-around-ubi-social-justice-and-climate-impact/>

4) 관련 내용은 국내에 소개된 『탈성장 개념어 사전』(2018)을 참고하라. 이 책의 편집자인 페데리코 데마리아, 요르고스 칼리스, 그리고 저술에 참여한 조안 마르티네즈-알리에 등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5) <https://www.degrowth.info/en/%ea%b3%b5%ea%b0%9c-%ec%84%9c%ed%95>

인간과 자연의 착취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제체제는 위기에 취약함에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세계 경제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있지만 인간과 지구를 돌보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지구의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폭로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구제해야 하며, 긴축이 아닌 자족(sufficiency)에 기반한 대응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모두를 위한 경제의 새로운 근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i)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킨다.

경제성장과 낭비적인 생산 대신 생명과 복지가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ii)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를 급진적으로 재평가한다.

돌봄노동을 중점에 두며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파괴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보다 재생적(regenerative)이고 깨끗한 유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ii)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한다.

낭비적 소비와 여행은 줄이되, 식량·주택·교육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 필요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혹은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등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최저·최대소득을 민주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도입해야 한다.

(iv) 사회를 민주화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 부문의 권력은 민주적 소유와 통제를 통해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 기본적 필요와 관련된 부문은 탈상품화·탈금융화한다.

(v)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한다.

현재와 미래세대 간, 국가 내 사회집단 간,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화해는 초국적, 교차적, 세대 간 재분배와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 특히 북반구는 현재의 착취를 중지하고 과거의 착취를 보상해야 한다. 사회·생태적 전환을 인도하는 원칙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되어야 한다.

3. 미국: 그린뉴딜과 기본소득⁶⁾

2019년 2월 7일 오카시오-코르테스와 상원의원 에드워드 마키는 미 의회에 그린뉴딜 결의안을 제

6) 본 장은 먼슬리 리뷰의 편집자이며 오레곤대 사회학 교수인 Foster(2019)의 글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출하였다. 같은 해 8월 22일 미국의 상원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는 지금까지 제안된 그린뉴딜 계획 중에 가장 포괄적인 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간 약 16조 3천억 달러의 공적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2019년 이후 제안된 그린뉴딜은 급진적 성격을 띠지만 과거 제안된 그린뉴딜은 온건한 개혁주의 전략에 가깝다.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2007년 그린피스 국제경제파트의 콜린 하인즈^{Colin Hines}와 가디언지 경제면 편집장 레리 엘리엇^{Larry Elliott}이 가진 회담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제안된 그린뉴딜의 내용과 발전과정에 대한 내용은 Foster(2019)의 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미국에서 제안된 그린뉴딜(안)이 생태사회주의 지향에 가깝다는 점이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마키가 제안한 그린뉴딜과 샌더스의 그린뉴딜 계획을 간략히 비교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마키가 제안한 민주당의 그린뉴딜은 녹색당의 그린뉴딜과 달리, 금융자본과 미국의 군사 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급진적 제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미국 내 산업과 인프라를 전면 재편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와 비교하여, 샌더스의 그린뉴딜은 더욱 포괄적인 안이다. 샌더스의 안이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마키의 안과 다른 점은 첫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명확한 시간표의 설정, 둘째, 화석연료 자본과의 직접적 대결, 셋째, 특정 공동체에 초점을 두면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필요에 기초한 정의로운 전환 추구, 넷째, 이전 녹색당의 뉴딜안과 같이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섯째, 해상 시추, 프래킹, 정상제거 탄광사업의 금지, 여섯째, 세계 화석연료 경제를 보호하는 군사력과의 대결, 일곱째, 그린뉴딜에 필요한 예산 명시, 여덟째, 그린뉴딜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오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 2019년 6월 공개한 조 바이든 후보의 구상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가량 줄여야 한다는 IPCC의 요구는 회피하고, 향후 10년간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2050년까지 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만 제시하였다. Foster(2019)는 최근 미국의 ‘민중적 그린뉴딜’ 전략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에 유비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적 개혁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대부분 자원의 직접적 보존이나 전반적인 소비의 감소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현 체제에 내재된 엄청난 규모의 낭비를 어떻게 생태적 이점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고려도 부재하다고 비판한다.

<표1> 미국의 그린뉴딜(안) 비교

오카시오-코르테스와 마키	버니 샌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순 제로 달성. 수백 만 개의 고임금 좋은 일자리 창출. - 10년의 국가적 동원: 미국 전력수요의 100%를 깨끗하고 재생가능한 배출 제로 에너지원으로 전환, 국내 또는 국제적 독점 반대, 가축농 지원,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배출 제로 차량 인프라 구축, 공공교통 활성화와 고속철도 투자, 기후 관련 기술의 국제적 교류 보장, 공동체-노동자-노동자협동조합 간 협력 창출, 노동자 대상의 일자리 보장/훈련/고등교육 제공, 보편적 의료보험 보장, 공공토지와 용수의 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전력 및 운송 부문 100% 재생에너지(미국 탄소배출량의 71% 감축) 전환, 늦어도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 목표. - 화석연료 대체를 위해 16조 3천억 달러의 공공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노동자와 일선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 기후변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의 노력. - 구체적으로 최대 5년간의 임금보장, 일자리 전환 지원, 이주 지원, 건강보험, 과거 임금에 근거한 연금, 주택지원 등

출처: Foster(2019)에서 정리

그린뉴딜은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상당량의 공공 재정이 경제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의 또 다른 이정표는 ‘일자리 보장 Job Guarantee’이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 전환할 때 많은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최후의 고용주 역할을 담당한다. 녹색 산업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Schuppert(2019)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새로운 일자리에 노동자가 진입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제때 만들어 질지이다.

따라서 그는 단기간의 완전고용이 상당히 비현실적임을 감안하여 UBI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UBI는 새로운 녹색경제에서 스스로 다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저임금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린뉴딜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그 혜택이 보편적이어야 하며, UBI가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Fabbri, 2019). Brighton & Hove 시 의원인 Osborne(2019)도 그린뉴딜과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기본소득을 통해 모든 시민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린뉴딜이라는 대규모 사회개혁에서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기본소득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탄소세와 탄소배당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탄소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이 공개되었다.⁷⁾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의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위원장, 15명의 전 경제자문회의의장, 2명의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즉,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세 부과와 배당금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van Parijs는 ‘다양한 분야의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들의 성명은 기본소득에 대한 폐인의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가이 스탠딩은 이 성명서는 ‘기본소득을 향한 중요한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Coelho, 2019). 성명서에는 다섯 가지 정책 권고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하 전문을 옮겼다.

- (i)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수단이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음으로써, 탄소세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활용하여 경제행위자들이 저탄소 미래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가격 신호를 보낼 것이다.
- (ii) 탄소세는 배출 감축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매년 증가해야 하며, 정부 규모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탄소 가격은 기술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탄소효율적 재화와 서비스의 확산을 가속시킬 것이다.

7) <https://www.econstatement.org/>

- (iii) 충분히 견고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세는 덜 효율적인 다양한 탄소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할 것이다. 성가신 규제를 가격 신호로 대체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청정에너지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규제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
- (iv)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국외 이탈(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 업체보다 미국의 기업이 더 에너지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탄소 가격 정책을 채택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 (v) 탄소세 증가에 대한 공정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미국 시민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가장 취약 계층을 포함한 다수의 미국 가정은 그들이 지불하는 높은 에너지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탄소배당”을 받을 것이다.

위 성명서의 핵심내용은 2019년 5월 6일에 시작한 유럽시민이니셔티브⁸⁾ ECI 지지서명⁸⁾의 내용과 유사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더 빠르고 더 공정하며 효율적인 해결책(The fast, fair and effective solution to climate change)”이라는 이름의 ECI 지지서명은 탄소부담금(Carbon Fee), 탄소배당(Carbon Dividend), 탄소국경조정(Border Carbon Adjustment)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서 탄소부담금과 탄소배당에 대한 이점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탄소부담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둘째, 저소득과 중간소득 수준의 가구에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 혹은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넷째, 탄소배출이 감소함에 따라 공기의 질이 나아지면서 더 건강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으며, 다섯째, 국가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나 보조금을 축소함으로써 경제적 저축이 가능하며, 여섯째,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는 결정들을 보상하며, 일곱째, 혁신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탄소국경조정(BCA)과 관련한 정책의 투명성과 간결성을 다른 국가에 장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Annex’ 참조). 지지 서명은 2021년 2월 6일로 종결된다.

5. 논의

코로나19 이후 녹색기본소득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기후 운동과 생태·사회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한편,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책으로서 보편적·무조건적·일시적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녹색기본소득에 위치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다수의 녹색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녹색기본소득과 그것의 생태적 효과는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8) https://europa.eu/citizens-initiative/initiatives/details/2019/000006_en

(Howard, Pinto, & Schachtschneider,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탄소배당 방식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저탄소 경제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다. 생태세-생태배당 모델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의 성원이 불평등하게 생태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기본소득만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Howard et al., 2019; Moriarty & Honnery, 2020 등). 기본소득이 어떠한 사회를 위한 지렛대로 기능할 것인지, 즉 녹색성장을 지지하는 환경주의자들의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는지 혹은 탈성장을 지향하는 맥락 속에서 기본소득이 주장되는지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Pinto, 2020). 무엇보다 향후 기본소득이 현재의 생산-소비양식을 가속화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소비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드러난 문제들을 급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현재의 생태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임을 깨닫고, 더욱 변혁적이고 야심찬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 Arendt, H. (1998). *The Human Condition*. Second E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elho, A. (2019.1.29.). United States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Basic Income News. <https://basicincome.org/news/2019/01/united-states-economists-statement-on-carbon-dividends/> (2021년 1월 12일 최종접속)
- Fabbri, D. (2019.4.9). United States: Green New Deal –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revolutions are linked. Basic Income News. <https://basicincome.org/news/2019/04/united-states-green-new-deal-the-environmental-and-social-revolutions-are-linked/> (2021년 1월 11일 최종접속)
- Foster, J. B. (2019.11.1.). On Fire This Time. Monthly Review. <https://monthlyreview.org/2019/11/01/on-fire-this-time/> (2021년 1월 12일 최종접속)
- Howard, M., Pinto, J. & Schachtschneider, U. (2019). Ecological Effects of Basic Income. Torry, M. (Ed.), *Palgrave International Handbook of Basic Income* (pp. 111-132). Cham: Palgrave MacMillan.
- Moriarty, P., & Honnery, D. (2020). New Approaches for Ecological and Social Sustainability in a Post-Pandemic World. *World*, 1(3), 191-204.
- Osborne, M. (2019.10.10.). 5 Reasons Why a Green New Deal and Universal Basic Income Go Hand in Hand. Bright Green. <http://bright-green.org/2019/10/10/5-reasons-why-a-green-new-deal-and-basic-income-go-hand-in-hand/> (2021년 1월 11일 최종접속)
- Pinto, J. (2020). Environmentalism, Ecologism, and Basic Income. *Basic Income Studies*, 15(1).
- Schuppert, F. (2019.03.21). Green New Deal: Universal Basic income Could Make Green Transition Feasible.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green-new-deal-universal-basic-income-could-make-green-transition-feasible-112898> (2021년 1월 10일 최종접속)
- Yamamori, T. (2019.2.23). Europe: European Green Perspectives on Basic Income. Basic Income News. <https://basicincome.org/news/2019/02/europe-european-green-perspectives-on-basic-income/> (2020년 12월 28일 최종접속)

녹색유럽재단(GEF) 홈페이지 <https://gef.eu/>

탈성장 국제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s://www.degrowth.info/en/>

어공에세이_기본소득은 어떻게 법이 되는가

오준호

용혜인의원실 비서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저자

꿈에도 상상해본 적 없는 ‘어공’이 됐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비서관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에 며칠 고민했다. 프리랜서 작가로 혼자 일한지 10년이다. 조직 생활, 그것도 말로만 듣던 그 살벌하다는 의원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체력과 능력은 따라줄까. 하지만 기본소득 꼭 도입해야 한다고 글과 말로 떠돌고 다니다가 입법으로 실현해볼 엄청난 기회를 만났다. 뒤로 뺀다면 후회할 것 같았다. 인생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다. 이 일이 하고 싶은데 막상 하는 건 두렵나? 그렇다면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리하여 작년 7월, 기본소득 입법이라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향해 국회에 첫발을 들였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만들다

용혜인의원실의 목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의 기본소득의 실현이다. 궁극적으로 ‘온국민 기본소득법’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기본소득 관련 입법으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추진하기로 정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기본소득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시민 참여 공론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본소득당이니 당장 전 국민에게 화끈하게 많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법을 만들지, 왜 기본소득 공론화인가?

기본소득 공론화를 성공리에 실시할 수 있다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도는 급변하는 사회의 소득 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도입하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조세·복지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근로의욕이 떨어지거나 임금 하락은 없을지 등 많은 쟁점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정치인들은 아무 개혁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사회적 합의 부족을 들먹이고는 하

지만,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아래로부터 이루기 위해 전국적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 공론화는 단순 선호를 확인하는 일반적 여론조사와 달리 숙의 토론을 거쳐 시민의 ‘질 높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숙고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의 목표다.

입법 목표는 생겼지만 정작 나는 법안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다. 법안이 무슨 불고기덮밥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법안을 직접 만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처음 의원실이 구성됐을 때 국회에서 보좌진 경험을 해본 사람이 딱 한 명이었다. 그가 보좌진 컴퓨터에 기본으로 설치된 법안 작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법안 하나를 똑딱(초짜들의 눈에는) 만드는 걸 보고 다들 감탄했다. 이제는 내게도 익숙해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법안 제목, 표제부, 본문, 부칙, 신구 조항 비교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물론 법안작성기는 좋은 도구일 뿐이고 법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붓 들었다고 그림이 그려지는 건 아니듯 말이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법안에 참고할 사례가 국내와 외국에 있는지부터 알아봤다. 호그와트 성에 만찬을 차리는 집요정이 있듯 국회에도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다.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법제실 등이 그러한 기관이다. 베테랑 보좌진일수록 이 기관들을 잘 활용하여 전문 조사관의 도움을 받는다. 국회도서관은 해외 입법 사례를 찾을 때 긴히 활용한다. 외국 법령도 깔끔히 번역해서 제공해준다. 국내 사례 조사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한다. 입법조사처는 자료에 더해 우리가 원하는 입법 방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더 효과적인 입법 방향이 있는지 검토 의견도 함께 전달해준다.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와 의견을 기본소득 공론화법 작성에 많이 참고했다. 조사관이 공들여 정리한 자료를 읽으면서 마음으로 별풍선 백 개를 싸드렸다.

법안 작성에 직접 도움을 주는 곳은 법제실이다. 법제실 전문 법제관들은 의원실이 작성한 법안을 검토하여 자구와 체계를 다듬어주기도 하고 아예 의원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법안으로 성안해주기도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제실 검토를 안 받았다고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는 건 법안의 논리적 완성도가 ‘+1만큼 올라갔습니다’라는 의미다. 다른 의원실에서 법안의 공발, 즉 공동발의를 요청할 때 ‘이 법안은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습니다’라고 표기했다면 좀 더 신뢰가 생긴다. 정부가 보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와 비슷하달까. 하지만 법제실과 의원실 사이에 긴장은 존재한다. 의원실의 관심사는 이 법이 실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있고, 법제관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법이 기존 법체계에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의원실 보좌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론조사 방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공론화위원회가 기본소득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면 말짱 꽝이다. 또 공론조사가 올바른 숙의 토론이 아닌 단순 찬반 조사로 진행되면 질 높은 여론을 형성하려는 취지가 사라진다. 나와 의원실 동료들이 고심하며 법안을 작성했고 내가 법제실로 법안 검토를 의뢰했다. 법제관은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을 법안에 꼭 넣어야 하느냐며 시행령으로 정하자고 했다. 유사 법률과 비교했을 때 그게 좋다는 의견이었다. 나는 ‘시민 참여 숙의토론을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화와 이메일로 한참 티격태격하고 나서 우리 의견이 반영된 대로 법안은 법제실 검토를 완료했다. 나는 알파고한테 1승을 얻어낸 이세돌이 된 기분이었다.

법안은 법리에도 맞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법안을 만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법안 내용은 목적에 잘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에 공론화법안을 가져가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조사(2020) 설계에 참여한 강남훈 교수는 공론조사가 단순히 기본소득 찬반을 묻는 방식이면 건설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고, 소득보장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아래 기본소득과 다른 선별복지제도를 비교 검토하거나 또는 기본소득의 여러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더 나은 방안을 찾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조언을 반영해 우리는 법안을 몇 번이고 수정했다.

법안 발의라는 작은 언덕을 오르다

법안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발의해야 한다. 국회법상 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공동 발의해야 정식으로 접수된다. 공동발의자 가운데 최초 발의자, 즉 법안 제출자가 대표발의자다. 그런데 공동발의를 모으는 일이 쉽지 않다. 이유가 많지만 무엇보다 제출되는 법안이 너무 많다. 하루에 의원실로 공발 요청이 적으면 십 수 건, 많으면 삼사십 건 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7개월간(2020.6~12월) 발의된 법안이 6957건으로, 같은 7개월간 19대 국회(2716건)와 20대 국회(4698건)의 발의 건수를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 요건을 갖춰 발의한 숫자만 그러니 제출된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법안 발의 건수의 증가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의원들이 정당 차원보다 개인플레이로 움직이는 경향이 커져서일 수도 있다. 물론 법안 발의가 많은 것과 세상에 꼭 필요한 법을 만드는 건 별개 문제다.

출근해서 내가 먼저 하는 일이 공발 요청 온 법안을 검토하는 일이다. 법안은 공발요청서와 함께 우편사서함으로 직접 오기도 하고 이메일로도 오는데,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사서함에 직접 넣는 건수는 좀 줄었다. 이 많은 공발 요청 법안들을 꼼꼼히 검토하려면 종일 그 일만 해도 모자라서, 법안의 제안 이유만 대략 읽고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안 위주로 골라 검토한다. 우리도 이런데 다른 의원실에서 우리 법안을 애써 찾아 검토하지 않는다. 우리 법안이 랜선으로 꽃향기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그래도 거대정당 의원들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모으는 일이 그나마 쉽다. 당이 전략적으로 미는 법안이면 조직적으로 공동발의자에 참여하고, 그런 법안이 아니어도 같은 당 의원들끼리는 서로 부탁해 금세 도장 아홉 개를 모은다. 소수정당은 공발 도장 아홉 개 받는 일이 드래곤볼 모으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므로 공발요청서와 법안을 깔끔하게 인쇄해 3백 개 의원실 우편사서함에 한 부 한 부 넣는 건 기본이다. 조금이라도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이라고 여기는 의원실에는 ‘의원 친전’을 따로 돌린다. 법안을 용혜인 의원의 편지와 함께 고급 우편봉투에 담아, 보좌진이 직접 각 의원실에 방문해 전달하는 것이다. 친전을 돌릴 때는 의원실 전 보좌진이 동원돼 의원회관 3층부터 10층까지 돌아다닌다. 그밖에 보좌진 각자 인맥을 이용해 다른 의원실 보좌진에게 검토를 부탁하기도 한다.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에게 “이건 좋은 법안이니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면 아무래도 공발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세간에 알려져야 의원들도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발의 요건을 다 채워 법안을 접수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열면 좀 더 힘이 나겠지만 소수정당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국적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선 당선자가 공론화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자”라고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기본소득은 복지 백신이자 경제 방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언론은 이런 인용하기 좋은 ‘워딩’을

선호한다. 기자회견 직후 놀랍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기본소득 동지 용혜인 의원의 공론화법 발의를 응원한다”라고 썼다. 그 덕분에 언론 노출이 크게 늘었다.

소수정당의 기본소득 법안이 의원들의 동참을 끌어내 발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발의를 시작하자마자 공동발의에 함께 하겠다는 연락이 속속 전해졌다. 특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으로 지지를 밝히고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 연구 지원’ 법안을 앞서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원내 5개 정당 의원 21인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원내 1석 기본소득당 의원의 제안에 주요 정당 의원들이 고르게 다수 동참한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소소한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아래로부터 시민 참여 토론으로 민주적 합의를 이루자는 명분이 통했다고 생각한다. 명분이 옳으면 비록 소수정당의 법안이라도 통 크게 동참해준 의원들에게도 감사하다. 작년 12월 22일에 기본소득 공론화법, 정식 명칭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요건을 채워 정식 발의됐다.

기본소득 유니버스는 계속된다

법안 발의는 입법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법안은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를 받고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진다. 법사위 심의가 끝나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글의 제목은 ‘기본소득이 어떻게 법이 되는가’인데 거창한 제목과 달리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법안 발의 이후에 진행된 것이 별로 없다.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민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 서 국회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통과시키라고 소리쳐야 법안이 책상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논의될 수 있다.

공론화법의 논의 진행과 별도로, 용혜인의원실은 계획대로 기본소득 입법 활동에 나선다. 1월 7일에 ‘기본소득 탄소세’ 법안의 발의 추진을 알렸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배당법안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용 의원의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세수를 국민 개인에게 보편적인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조세 역진성도 해소하는 내용이다.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도 상반기에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 아동수당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노인기초연금을 보편적 노령수당으로 발전시키며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는, 아동·청소년·청년·노인기본소득 입법도 준비한다. 온국민 기본소득을 한 번에 완성된 형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별로 과도기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토지·데이터·탄소세배당 등 공유부배당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제도 간 틈을 메우고 금액 지급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가면 된다.

어공의 길에 들어서며 내가 이 생활에 잘 적응할지, 능력과 체력이 될지 고민했다. 능력은 경험과 함께 쌓아가고 있고 동네 운동장을 툼툼이 뛰며 체력이 유지한다. 이 일에 너무 잘 적응해 내 적성은 작가라는 생각이 착각이었나 하고 오히려 걱정할 정도다. 지금은 나와 동료들이 만든 법안들이 하나씩 ‘기본소득 유니버스’를 채워갈 거라 상상하면 재미있고 그 과정에 내 할 일이 있어서 기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기본소득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시행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를 희망한다.

꿈이 허영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비전이었으면

마돈나(이렛타 사회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식재료와 선물을 챙겨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만두전골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2인분 이상인 메뉴판을 보며 매번 입맛만 다셨다고 했고, 저는 ‘혼밥’의 설움을 풀어주고 싶어 만두전골을 시켰습니다. 어느덧 오십을 바라보는 중년의 여자 두 명은 ‘인심은 금고에서 나오는 거야.’라며 넉넉한 척하며 쇼핑백을 건넸지만 씩씩했습니다. 이십오 년 전, 우리는 창작의 꿈을 안고 살던 청년이었으나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돈벌이를 선택했습니다. 화가와 소설가를 꿈꾸는 건 허영에 불과하니 취미로만 여기자며 꿈을 깨끗이 접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웹디자이너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여자와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프리랜서 교육 강사로 살고 있는 여자는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날이 온다면...’이라는 푸념을 하곤 합니다. 이제는 웹디자이너계의 고조할머니가 되어 퇴출을 걱정하는 친구가 하얀 페인트칠이 된 디자인 사무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기본소득을 생각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녹색당의 기본소득공론화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하며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2016년 총선에서는 기본소득 선거본부장을 맡아서 유권자를 만나며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권자는 제가 처음 기본소득을 접했을 때 했던 회의적 질문을 던졌으며,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꿈에 불과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사

회가 법제정운동을 추진했지만 정치권이나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아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민사회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음주나 노름에 탕진할 것이라는 고전적 우려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빈곤을 규정하는 개념에 차이가 커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현금지원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으며 각종 복지제도는 시설복지나 현물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IMF 이후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가 민간기금 1천억 원을 모아 저소득층에 농협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면서 현금지원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실업지원을 하던 민간단체는 현금지원의 필요성을 확산시켰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1999년 국민의 생존은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국가는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물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부분적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가?’라는 질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에게 대한 현금급여 지급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 취지는 연령이나 근로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밝히기 곤란한 가정사정이나 부모자식 간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멸감을 감수하는 과정이 꼭 수반되기 마련인 것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지제도와 기초법의 상관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본소득 연구자들과 사회복지계가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주목하고자 했던 것은 국민에게 ‘현금 지급’하는 데 대한 저항감이 사라

졌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전문가들조차도) 어쩌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걱정(그 걱정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생각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가능하게 만들어 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녹색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이 입금된 가상통장 팸플릿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장을 보며 ‘가짜여도 기분 좋다’며 ‘이런 날이 오겠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려워지 못한 국민들은 기본소득 제도화가 먼 나라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후로 국민들은 기본소득의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체험이 기본소득 개념을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 또한 제도화되고 시행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체득되리라고 봅니다. 기초법처럼 말이지요.

간혹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청년시절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일찍이 소설을 쓰면서 살지 않았을까? 친구는 상품을 홍보하는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저는 어느덧 청년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꿈을 허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꿈을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한끝 차이는 경제적으로 비빌 언덕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기본소득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녹색당’과 ‘이렛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렛타 47회부터 사회자로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으니 이렛타의 고조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내 삶의 '기본소득'

문지영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운영위원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아직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으면서 나의 일상 아니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 기란 더 어려워졌다. 마스크 착용, 모임을 자제하라는 문자메시지,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새로워진 삶의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소득 유지가 힘들어지면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났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멈춤'은 죽음을 의미할 것이다. 사람을 만나 안부 묻는 일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심화되고 우울, 불안, 짜증을 겪는 코로나블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안한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지기 위해,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정책으로 실현되길 상상한다.

나는 언제부터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되었을까?

평범하거나 평범하지 않거나, 살면서 맞닥뜨린 가정폭력, 학내비리, 성추행, 돌봄노동 등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최선의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10년 전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던 선배의 제안으로 자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인문학 네트워크 지금 +여기' 모임을 만들었다. 한 달에 두 번 모여 고전철학, 생태, 페미니즘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공부했다. 공부 모임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맞닥뜨린 그 문제

들, 부당하게 받았던 질문이나 불편함이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에 앞서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발생했던 것임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원 활동을 통해 시간을 나누고, 활동하는 시간 동안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아 가면서 ‘나눔’을 배웠다. 함께 사는 삶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기본소득은 ‘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던 스웨덴의 정치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생소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자료실 통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2016년 10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 되었다. 아마 기본소득에 대해 그 이전에 들어 봤다 하더라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삶을 상상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스갯소리로 ‘내 노후 대책은 기본소득운동 하는 거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기본소득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아닐는지 싶다. 2017년 9월 지역 사람들과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를 창립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공부모임도 만들었다. 창립하고 이듬해까지 열심히 활동했던 모습을 여러 사정으로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단체를 재정비하고 다시 활동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우리는 국가로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현금을 지급받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이다. 개인별 지급이 아닌 가구별 지급이었고 일회성 지급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선별 없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모두에게 매월 60만 원 기본소득’의 슬로건을 가지고 기본소득당이 창당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면서 제도로써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기본소득이 실현되길 기대하고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다. 상상 속의 기본소득이 현실 제도 속에서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니 논의의 과정이 더욱 치열해지고 기본소득운동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나도 상상을 넘어 기본소득이 실현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힘을 보태려 한다.

능력주의와 기본소득

이주엽

JNH뮤직 대표, 작사가

내 삶의 결과물은 전적으로 내 것인가? 말을 바꿔보자. 내 삶에 어떤 성공 혹은 성취가 있다면, 그 것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나의 전리품인가? 이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능력주의meritocracy’ 신화에 기대면 대답은 “당연하다”일 테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능력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근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내 삶은 나의 독립적 자유의지가 이 세계와 싸워 얻은 것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우연하게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나의 욕망이 피동적으로 조응한 결과물들의 집적이다. 나에게도 성공이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것은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우연한 요소들의 연쇄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라 믿는다.

나는 지방 소도시 통영 출신이다. 80년대 고등학교까지 통영에서 다녔으며, 어떤 특별한 교육적 기회를 얻지 못한 평범한 삶을 살았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데다 ‘롱 슬리퍼long sleeper’였고, 성취 동기 또한 그저 그런 학생이었다. 지방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중간 정도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대충 정해져 있었다.

그런 내게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다. 고2때 첫 시험을 운 좋게 잘 쳐, 전교생이 지켜보는 위치에 갑자기 올라섰다. 그후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내게 조금도 관심 없던 선생님이 앞다퉂 “이주엽이 누구냐?”며 날 찾기 시작했다. 그 관심이 황홀했다. 그리고 그토록 행복해하던 부모님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나의 보상 중추가 맹렬히 작동했으며, 내게 처음으로 쏟아진 관심과 기대가 사라질까 두려웠다. 나는 떠밀리듯 ‘열공’했다. 강력한 성취 동기가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 사회는 이것을 자기 주도적 삶이라 포장하겠지만 실은 타자의 시선에 갇힌, 규율된 삶이었다. 그 결과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선물을 얻었다.

만일 고2때 찾아온 ‘칭찬-열공-보상’의 선순환 환경이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

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시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건, 내 의지의 명령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온 환경 때문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운이다. 나의 지능 역시 부모님이 물려준 우연한 형질이다.

결과적으로 얻은 명문대 졸업 프리미엄은 생각 이상으로 컸다.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사회는 그 프리미엄을 항상 후하게 쳐줬다. 정서적 회소 자원인 호의(好意)가 내게 편중된 것이다. 그러니 내 삶을 끌어온 것 중에 오롯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나는 늘 내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왔다. 남들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그저 신의 주사위 놀이에 어쩌다 잘 걸린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대그룹을 일군, 고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가장 일찍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회사 가는 게 매일 아침 아이가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고 즐거웠단다. 그러니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을 것이다. 정 회장은 자기 희생적 노력을 처절하게 기울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잠 없는 ‘숏 슬리퍼 short sleeper’에다, 일에서 결정적 보상을 받는 ‘워커홀릭’이었을 뿐이다. 그의 성실성 역시 우연하게 할당된 신체 자원이었다. 그 남다른 신체적 특질과 뛰어난 사업적 지능이, 운 좋게 개발도상국의 국가 주도 경제 체제를 만나 신화적 성공을 일군 것이다.

사회적 성공에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전적으로 개인화하고 절대화할 때 우리는 능력주의라는 난폭한 도그마의 포로가 된다. 미국 미식 축구 코치 배리 스위처는 그런 믿음을 비꼬며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이 3루타를 친 줄 알고 살아간다”고 했다.

세계적 부호 워런 버핏 역시 능력주의의 문제점을 성찰하는 얘기를 한 바 있다.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한다. 내가 원시시대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사자밥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거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그가 거부(巨富)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타고난 수리적 재능이 시대를 잘 만난 행운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의사협회가 공공 의대를 비하하기 위해 ‘전교 1등’ 담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관을 비하하기 위해 ‘초엘리트’라는 퇴행적 단어를 발설했다. 나는 그 용어들의 정치적 불량함을 지적하며, 신문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잘났건 못났건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만 존재한다. 삶의 기쁨, 자부심, 명

예, 고통 그 모두 관계가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공도 공동체에 빚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교 1등을 했다는 의사들과 초엘리트들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다. 타고난 재능이 좋은 환경을 만나 ‘열심’이라는 내면의 자원을 얻고, 칭찬과 격려라는 지원군을 만나 그 자리에 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공을 오롯이 개인화하는 건 얼마나 유치한가.”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체제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로 부르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재능의 차이는 계층의 차이만큼이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부적, 사회적 운을 ‘집단 자산’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중립화하는 게 정의의 핵심이라 여겼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역시 최근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를 “불평등의 정당화”라고 비판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준다”고 했다.

올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55%가 소득분위 9~10분위 고소득 가구 출신임이 밝혀졌다. 기회가 점점 더 편중되고, 계층 이동성이 약화해 신분 상속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능력주의의 민낯이다. 정치는 기회와 자산을 재분배하는 고도의 사회공학적인 행위다. 우리 사회의 이 불공정과 불공평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는 이 시대적 문제에 대답해야 한다.

솔직히, 나는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지 않다. 그래서 그것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대해 논할 능력이 안 된다. 다만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한계를 드러낸 지금, 기본소득이 중요한 정치적 화두가 됐다는 건 안다.

더군다나 급속한 자동화와 AI의 발달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많은 노동력이 가까운 미래에 잉여화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세계의 부의 양극화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구글, 애플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체들이 세상의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존 롤스가 말한 ‘운의 중립화’를 위해서도 긴요한 방식이며, 미래를 설계할 유력한 정치적 대안이라 생각한다.

가난은 물질적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정신의 품위까지 갉아먹는다. 우리가 지키는 사회적 체면은 대부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기본소득은 그 최소한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의무다. 워런 버핏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단순한 미담 이상이다. 이웃이 불운이라는 우연의 난폭함에 지배당하지 않게 서로 연대하는, 위대한 인간 정신의 발로다.

행운을 누린 사람이 불운한 처지에 가까이 손을 내미는 것은, 인간이 종(種)으로

서만 온전할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의 선언이다. 그래서 행운과 불운 간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인간은 우연의 난폭함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승자에게서 오만을 패자에게서 굴욕을 걷어내,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

김교성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Q 선별주의의 문제점

최근의 일입니다.

- 사례 1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정치인이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빈곤선 아래에 있는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여 절대빈곤을 추방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이고 차등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허언한 것입니다.

- 사례 2

한 경제학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두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기보다 필요한 사람을 잘 선별하여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자’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선정된 사람의 형편에 맞게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효율’과 ‘형평’의 가치를 추구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복지국가의 선별적인 사회부조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별적인 복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선별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정책은 ‘사회부조’ 혹은 ‘공공부조’입니다. 사회부조는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대책이며,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생존권적 급여입니다. 대체로 가장 빈곤한 극빈층만을 ‘표적화^{targeting}’하기 위해, 세대 단위의 확대된 부양의무와 엄격한 자산조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의 상대적 불이익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개인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각종 ‘낙인^{stigma}’이 수반된 굴욕적인 심사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부는 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취급되거나, 가짜 자격을 통해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로 의심받습니다. 낙인이 수치심을 갖게 하여 빈곤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은 시민권적 권리로서의 ‘복지권’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엄격하고 정밀한 과정을 통해 대상을 선별해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약 40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대상을 선별하고 있지만, 실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급여의 제공방식과 수준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는 정부에서 고시한 빈곤선과 실제 소득 간 차이를 보존해 주는 ‘보충급여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충성에 기초한 차등 지원은 이론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급여의 수준이 낮아지므로 ‘의존성^{dependency}’과 ‘빈곤의 덫^{poverty trap}’을 창출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급여 수준이 낮아 빈곤완화효과도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재정을 활용하여 표적화된 일부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대상과 수준의 확장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선별주의를 강화할수록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재분배의 역설’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할당과 관련된 ‘보편 vs. 선별’의 논쟁이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에 기초한 복지제도입니다. 급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수급자에 부착된 낙인과 의존성 이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단위로 제공되어 가구 내 권력관계의 변화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각자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고, 삶의 기예를 추구하면서, 진정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책 대안입니다.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